

〈세미나資料 90-03〉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1990. 6

吳 勇 錫 編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세미나資料 90-03>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目 次

인사말	金迪教 院長(對外經濟政策研究院)
會議日程	7
第1主題：韓·蘇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韓蘇頂上會談을 계기로 본 評價와 展望	
金裕南 教授(檀國大學校)	9
討論要旨	42
第2主題：韓國의 對中國 關係改善과 南北韓 關係의 展望	
吳鎮龍 博士(世宗研究所)	47
討論要旨	70
第3主題：A. 韓·東歐 關係의 進展과 南北韓 關係의 展望	
鄭甲泳 教授(延世大學校)	77
B. 東·西獨의 經濟·社會統合과 示唆點	
朴廣作·吳勇錫 教授(對外經濟政策研究院)	97
討論要旨	156



인 사 말

公私多忙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이 세미나가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금 이 시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盧泰愚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간에 韓·蘇頂上會談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달 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저희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의 第1次 北方政策 세미나가 韓·蘇頂上會談이 진행되는 같은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主題로 개최된 것은 결코 우연의 一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社會主義 諸國은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하에 급속한 政治, 經濟 및 社會的인 變革을 겪고 있으며 이와같은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는 東北亞 諸國의 關係變化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北方政策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蘇聯과 中國 및 東歐의 北韓과의 關係發展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최근 統一의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는 東·西獨의 統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음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斯界의 專門家들이신 여러 主題發表者와 討論者들의 高見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활발한 질의·토의를 통해 오늘의 이 세미나가 東北亞 地域經濟의 發展과 南·北韓의 經濟交流,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統一을 위한 政策開發에 기여하는 바 적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은 北方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미 우수한 研究陣으로 北方經濟室을 편성하여 政策研究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저희의 노력은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 입니다.

아울러 韓蘇頂上會談의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 이 세미나가 시종 진지한 가운데 성공적이고 유익한 토론의 場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6월 5일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金迪教

會議日程

1990年 6月 5日(火)

1. 開會式

開會辭(10:00~10:10)

金迪教 院長(對外經濟政策研究院)

2. 韓·蘇 關係發展과 南北韓關係: 韓蘇頂上會談을 계기로 본 評價와 展望 (10:10~12:10)

發表: 金裕南 教授(檀國大學校 美蘇研究所長)

司會: 金 惠 教授(韓國外國語大學校 政治外交學科)

討論: 鄭漢求 博士(世宗研究所 研究委員)

崔 榮 教授(外交安保研究院)

河龍出 教授(서울大學校 外交學科)

3. 中食: KOEX 食堂(12:10~13:30)

4. 韓國의 對中國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의 展望(13:30~15:30)

發表: 吳鎮龍 博士(世宗研究所 前任研究委員)

司會: 鄭鍾旭 教授(서울大學校 外交學科)

討論: 安錫教 教授(漢陽大學校 經濟學科)

吳勇錫 教授(對外經濟政策研究院 招請研究委員)

5. 休息(15 : 30 ~ 16 : 00)

6. A. 韓·東歐關係의 進展과 南北韓關係의 展望(16 : 00 ~ 18 : 40)

B. 東·西獨의 經濟·社會統合과 示唆點

發 表 : A : 鄭甲泳 教授(延世大學校 經濟學科)

B : 朴廣作·吳勇錫 教授(對外經濟政策研究院 招請研究委員)

司 會 : 李泰旭 教授(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長)

討 論 : 權寧壘 教授(漢陽大學校 經濟學科)

徐丙喆 教授(外交安保研究院)

李基榮 博士(國際民間經濟協議會 專門委員)

洪裕洙 博士(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第 1 主題

韓·蘇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
韓蘇頂上會談을 계기로 본 評價와 展望

金 裕 南
(檀國大學校)



韓·蘇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

- I. 序 論：韓·蘇頂上會談
- II. 고르바초프의 위기
- III. 韓·蘇關係：理論과 實際
- IV. 朝(北韓)·蘇關係의 未來
- V.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接近
- VI. 結 論：南·北韓關係와 蘇聯의 役割

脚 註

參考文獻



韓·蘇關係發展과 南北韓關係

— 韓·蘇頂上會談을 契機로 본 評價와 展望 —

I. 序論：韓·蘇頂上會談

北方政策의 마지막 승리는 南北韓關係가 協力段階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南北韓의 統合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社會主義圈과의 외교적 正常關係를 수립하는 그 자체가 北方政策에게 주어진 目的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北韓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놓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北方政策을 더욱 意味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韓·蘇關係發展은 여러가지 國際政治 變數를 고려한 끝에 북방정책의 정점으로 여겨왔던 것이 事實일 것이다.

드디어 韓·蘇頂上會談이 개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6월 4일 美國에서 開催된 盧泰愚 大統領과 고르바초프 大統領間的 만남은 北方政策에 있어서 획기적인 異變이 아닐 수 없다. 國交關係가 없는 韓·蘇兩國間的 頂上會談은 1972년 美國의 닉슨과 중국의 모택동과의 美蘇頂上會談에 비유하게 되는 歷史的인 轉換點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韓·蘇頂上會談을 自動的인 南北韓關係의 변화에로 連繫시키려는 급한 마음은 금물이다. 그러나 최소한 韓·蘇頂上會談이 韓·蘇國交正常化에로의 획기적인 轉機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向後에 展開될 南北韓關係 進展의 환경적인 틀이 온통 새로워 지고 있다.

韓·蘇頂上會談의 背景에 깔려있는 몇가지 사실들을 생각함으로써 向後에 전개될 韓·蘇關係 그리고 南·北韓關係의 양상을 豫見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國際環境으로 今番의 韓·蘇頂上會談은 美國의 부시行政府로서는 2次 美蘇頂上會談의 成功的인 종결과 함께 이루어진 점이다.¹⁾ 그리고 蘇聯의 고르바초프에게 있어서는 레이건 行政府로부터 시작되어 부시行政府로 이어진 6차

美·蘇頂上會談이 이루어진 直後에 訪問地 美國에서 개최된 것이 事實이다.

蘇聯의 國內政治와 韓國의 國內政治의 상황과 연관시킨 韓·蘇頂上會談을 보는 시각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고르바초프의 이번 訪美는 매우 무거운 발걸음이었다고 본다. 자신의 구상인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이 經濟面에서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함은 물론 이로부터 과생된 글라스노스찌의 餘波는 政治, 社會等 모든면에서 蘇聯을 危機로 몰아넣고 있으며 심지어 自身の 政治的 生命마저 위태롭게 하는 地境에 直面했기 때문이다.²⁾ 蘇聯의 危機가 심각한 것이라면 韓國의 國內事情도 그러한 일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盧泰愚 大統領도 國內狀況의 어려움을 “總體的 危機”로 인정하고 캐나다·미국·중미방문 일정을 일단 取消하고 부득히 韓·日頂上會談 日程만을 마무리 하고 일단 歸國하였다. 그후 수주일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韓·蘇頂上會談이 급작히 이루어진 것이다.

韓·蘇頂上會談은 또한 그동안 遲延되어 왔던 6·25戰爭에 犧牲된 美軍의 遺骸가 관문점에서 最初로 北韓側에 의해 美國이 인수하는 時點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偶然의 일치일 수 있겠으나 금번의 韓·蘇頂上會談은 北韓이 平壤駐在 蘇聯 TASS通信員의 本國送還과 때를 같이 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사건들은 물론 韓·蘇頂上會談과 무관한 個別事件일 수 있겠으나 偶然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지나친 方向의 同一性을 띄고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言及한다면 韓蘇頂上會談은 北韓의 金日成이 第9期 最高人民會議 1次會議에서 제의한 이른바 “單一議席” UN加入提案과도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背景의 事件들에 留意하면서 이 論文은 韓·蘇關係와 南·北韓 關係를 相互有關한 두개의 現象으로 보며 그 展開過程을 敘述하는 하나의 評論(Essay)에 지나지 않는다. 구태여 평론이라고 하는 까닭은 이 글의 形式이 學

術研究論文 形態를 벗어남은 물론 主題의 方向이 극적으로 성사된 韓·蘇頂上 會談에 초점을 맞추는 時間的 制限때문이기도 하다는 事實을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고 있는 論旨는 평소 著者が 主題와 有關한 事件들을 追跡 하고 생각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主張(assertion)인 境遇가 많다는 점도 밝혀 둔다. 그러나 著者の 主張이 다소나마 客觀性을 反映하고 아울러 專門家 들의 一般的 見解와도 큰 差異가 없으면 하는 바이다.

이 글은 다음에서 (1) 고르바초프의 危機狀況을 敘述하고, (2) 韓·蘇關係의 理論的 그리고 實際的 狀況을 檢討하며, (3) 朝(北韓)·蘇關係의 理解를 檢討한 후, 이에 바탕한 (4) 南·北韓關係의 樣相을 展望하게 된다. 끝으로 결론에서 (5) 南·北韓關係에 대한 蘇聯의 새로운 役割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한다.

II. 고르바초프의 危機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이 成功할 것인가? 西方世界에서 뿐 아니라 蘇聯內에서 까지 많은 專門家와 知識人들 사이에 蘇聯의 改革政策의 未來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의문은 고르바초프의 改革政策이 선언되었던 1986년 봄 第27次 蘇聯共產黨 全黨大會를 前後한 그때 보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제 第28次 全黨大會(1990년 7월 2일부터 5일간)를 目前에 두고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의 成功을 위하여 急進的인 “市場經濟” 매카니즘을 導入하지 않을 수 없다는 發表를 했다.³⁾ 이토록 위태로운 蘇聯 國內狀況이 向後에 展開될 韓·蘇關係 進展에 적지않은 影響을 줄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當面한 蘇聯의 危機는 크게 세가지로 區分된다. 첫째는 經濟 危機이고, 둘째가 政治危機이며, 세번째가 社會危機이다. 이 모든 危機들이 複合的으로 얽혀서 “總體的 國家危機”로 나타남으로서, 이는 단순히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의 成敗與否의 問題라기 보다는 蘇聯自體의 國家的 存立與否가 위태롭게 된 危機狀況이다. 그렇다면 고르바초프 등장후 지난 5年間 어떠한 改革의 이상과 실체가 矛盾的 乖離로 發展하여 왔는가 하는 것이다.

改革의 動機는 물론 침체된 經濟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國家의 存立目的이 國民의 “衣食住” 生活을 保障하는데 있다. 그러나 蘇聯 社會主義가 70여년을 지배한 끝에 나타난 結果는 蘇聯人民의 多數가 食생활에 困難을 당하고, 비누와 치약과 같은 生必需品을 구할 수 없으며, 집이 없어 出嫁한 딸이 親庭에서 새 살림을 꾸려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은 經濟的 必要에 의해 社會主義的 “生産手段의 所有와 管理 및 經營”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部分的인

“民營化”(privatization) 作業을 構想했던 것이다.⁴⁾

그러나 社會主義 國家에서 經濟問題는 政治와 分離할 수 없는 이른바 “政治·經濟”의 問題로 등장함으로써 政治改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政治改革은 “開放” 또는 “公開”로 이해되는 글라스노스찌(glasnost)로 나타나게 되었다. 開放의 물결은 共產黨과 政府官僚 그리고 企業官吏의 부패와 비리를 公開하고 批判하는 言論과 出版, 그리고 表現의 自由로 번지면서 드디어 聖域으로 간주 되어 온 “共產黨 1黨獨裁”를 무너뜨리는 政治革命으로 急進展 되었다. 즉 社會主義 經濟를 破綻으로 몰고 간 共產黨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憲法 第6條에 保障된 “黨의 향도적 그리고 指導的 役割”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⁵⁾

蘇聯의 政治改革이 表面的으로는 經濟改革을 훨씬 앞질러 가는 것으로 認識 되고 있으나 실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인테리겐짜(intelligentsia) 階層과 젊은 층, 言論媒體와 人民代表會議(Soviets of the People's Deputies)라고 하는 議會, 宗教團體와 各種 少數民族團體 등은 多數가 政治的開放을 要求하고 있다. 이들은 大略 전체인구의 20%에 해당하는 改革支持 勢力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70%에 該當하는 일반 大衆階層은 經濟改革을 단순히 “改善된 經濟事情”으로 理解하면서 政治改革이 同伴하는 社會的 不安을 反對하고 있다.⁶⁾ 大衆階層의 多數는 勞動者와 農民, 老人과 女性, 그리고 기타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등으로서 政治理念에 관한 批判意識이 없는 階層이다. 그런가 하면,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支配層은 公共政策을 決定하는 黨官僚와 政府官僚, 企業官吏와 農場官吏, 軍과 KGB의 高級將校 등으로 全體 人口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도 원칙적으로는 經濟改革을 지지하면서도 自身들의 退陣을 意味하는 政治改革은 반대하는 立場이다. 고르바초프는 이들 노멘클라투라가 개심하고 積極的인 改革勢力으로 변신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⁷⁾

政治經濟面의 改革은 必然的으로 民主的 社會改革으로 이어진다. 廣義의 社會改革은 綜合的인 “民主化”(demokratizatsia)를 의미하는바, 蘇聯의 境遇 政治的 民主化와 함께 社會 全般에 걸친 自由化와 共和國 單位의 自治主義, 그리고 獨立과 分離主義로 나타나고 있다. 발트3個國의 分離主義 運動을 비롯한 아제르바이잔 人種紛爭은 나고르노-카라바크(nagorno-karabakh)事態를 惹起시켰다. 少數民族의 分裂은 주류인 슬라브민족의 反動的 民族主義 團結의 必要性을 자극함으로써 슬라브-러시아계의 反撥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偉大한 러시아의 再建”을 主張하는 러시아민족주의 團體인 “팍얏”(pamyat)과 “소유즈”(soyuz)등의 極右勢力의 活動이 表面化 되고 있다.⁸⁾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등 발트3개국은 獨立을 宣言함으로써 蘇聯의 “聯邦共和國”(Union of Republics)制가 崩壞의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蘇聯憲法 第70條에 의하면 15個 單位共和國은 각각 “共和國 人民의 選擇에 의해 蘇聯聯邦에 加入”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第72條에 의하면 “蘇聯聯邦으로부터 脫退도 共和國 人民의 意思에 따라 決定”된다고 밝혀 있다. 그러나 政治 社會 改革과 民主化를 主張하는 고르바초프도 蘇聯聯邦制度가 “帝國主義”構造란 사실을 否認하며 聯邦에 加入하고 脫退하는 節次에 관한 法의 制定을 미루고 있는 形편이다.⁹⁾

이 모든 混亂은 蘇聯社會主義 聯邦共和國이 統合國家로서의 機能喪失을 意味하고 있다. 共產黨의 指導的 그리고 향도적 役割이 喪失되었고 地方 共和國들에 대한 中央政府의 統制機能도 喪失된 것이다. 오로지 남아있는 國家機能은 고르바초프 自身이 行政府를 代表하는 “大統領”으로서의 絶對的 統治權과 그리고 蘇聯人民이 選出한 소비에트·人民代表會의 議會機能에 期待를 걸고 있는 狀況이다.¹⁰⁾

아무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을 構想할때 그 改革이 制限된 市

場經濟 制度의 導入에 의한 이른바 “混合經濟體制”를 목표로 했는가, 아니면 漸進的인 改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資本主義體制”에로의 진화론적 변신을 생각했는가 하는 問題를 알 수 없다. 1988年 5月 第19次 共產黨大會를 특별히 召集할 때까지도 그의 改革的 “新思考”는 混合經濟體制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改正된 法에 의한 새로운 形態의 人民代表會議가 1989年 6月에 構成되면서 議會의 多數가 急進的 改革을 主張하면서도 고르바초프는 단순한 市場經濟 매카니즘의 도입이 아니라 전반적인 資本主義體制의 受容可能性을 밝히기 始作한 것이다. 經濟現實은 그가 改革을 宣言했던 지난 4年前 보다 더욱 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國營企業體는 生産財가 고갈되어 消費者의 需要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私營企業形態인 協同組合 “꼬베라찌브”(kooperativ)는 輸出入, 工業, 農業, 그리고 各種 서비스 分野에서 부의 偏在現象을 이루었으며 暴利로 재미를 보는 私企業은 生必品の 價格을 지난 3年 사이에 무려 3배로 올려놓았다. 이는 “물자가 需要에 따라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에게 직접 生産價로 支給”된다는 社會主義의 기본철학에 위배되는 것이다.¹¹⁾

이미 蘇聯 社會主義 經濟는 國營企業과 國營農場(또는 集團農場)에서 生産되는 生必品이 量과 質면에서 消費者의 수요와 취양에 부응하는 供給을 할 수 없는 段階에 와 있다. 憲法으로 保障되어 있었던 “共產黨 1黨獨裁體”가 崩壞되어 統治權의 空白狀態에 直面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共和國들의 獨立運動과 少數民族의 紛糾로 巨大한 蘇聯帝國의 聯邦制度도 와해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蘇聯의 선택은 스탈린주의적 철권통치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權威主義的 統治體制의 名分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고 있다.¹²⁾ 이 모든 危機의 源泉이 經濟難局에 있으므로 해서 고르바초프의 選擇은 經濟的 용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處地인 것이다.

經濟改革의 效果가 지난 4年間 未洽했던 까닭은 制限된 社會主義 改革으로 經

濟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를 象徵的인 말로 옮기면, 社會主義 經濟制度에 25%의 資本主義的 長點을 가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3:1의 比率로 配合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制度의 混合經濟形態는 새로운 브르조아階級을 양성하여 經濟危機를 더욱 惡化시킨 結果로 나타났다. 고르바초프는 이제 75%의 資本主義 經濟制度를 배합한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構想하고 이를 의회에 提議한 것이다. 議會가 이를 가결하고 人民의 지지를 얻으면(國民投票 形態) 蘇聯의 經濟改革은 이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가 1:3의 比率로 混合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名分上 이를 資本主義라고 指稱하지 못하고 다만 “市場經濟 매카니즘”이라고 불러야 하는 現實的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나 分明히 고르바초프가 지향하는 극적인 經濟改革은 資本主義에로의 轉換으로 보인다.¹³⁾

진정 그와같은 “經濟革命”은 엄청난 혼란이 豫想되며 심한 경우 全般的인 無秩序를 招來하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이와 같은 市場經濟(실은 資本主義)에로의 轉換期가 상당한 時間과 練習期間을 要한다고 보며 전환기적 “高度市場經濟體制”(tutelary market system) 段階를 豫見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經濟革命을 諮問하는 大統領委員會(presidential council)의 샤탈린(Stanislav Shatalin)은 지난 3月初 市場經濟體制를 밝히는 한 記者會見에서 市場經濟體制에로의 革命的 轉換만이 唯一한 選擇이나, 이는 根本的으로 “經濟的, 政治的, 그리고 心理的 犧牲”을 치르지 않고서는 이를 수 없다고 했다. 이로부터 豫見되는 것은 蘇聯에 등장되는 “교도적 資本主義”와 이에 必須的으로 同伴하는 새로운 形態의 政治的 “權威主義”이다.¹⁴⁾

“共產黨 1黨獨裁”가 무너지고 이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獨裁”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黨의 1黨獨裁가 고도의 社會主義 成立이 이루어질때까

지 暫定的으로 支配한다는 것이 共產主義의 全體主義 理論이다. 그러한 理論的 “틀”을 그대로 傳授한 페레스트로이카 獨裁論이 등장한 것이다. 高度의 市場經濟體制(資本主義)가 形成될 때까지 “改革獨裁”가 蘇聯을 支配한다는 것이다.¹⁵⁾

Ⅲ. 韓·蘇關係：理論과 實際

韓·蘇關係를 보는 視角이 多樣하다고 본다. 여기서 蘇聯의 國家利益의 觀點에서 韓·蘇關係를 投射하고, 아울러 韓國의 國家利益 側面에서 比較한 다음, 韓·蘇關係를 東北亞의 平和와 2000年代를 指向하는 “太平洋時代”의 地域關係로 透視해 본다.

거듭 強調하거니와 韓·蘇關係는 이번 頂上會談을 契機로 實質的인 外交로 등장한다. “實質的인 外交”(practical diplomacy)라는 意味는 向後의 韓·蘇關係가 지난 3年間의 關係改善 과정에서 막연하게 느껴왔던 “미지의 낭만”(unknown romance)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결혼”(marriage by necessity)이란 事實을 直視해야 한다는 뜻이다. 韓國과 蘇聯은 文化, 政治思想과 體制, 經濟制度, 潛在的/實際的 國力등 모든 面에서 유사한 점보다는 상이한 점이 더 많은, 이를테면 “不均衡한 接木”에 비유될 수 있는 國家間的 接近이라고 할 수 있다.

蘇聯은 처음부터 그러한 實情을 잘 알면서 韓國에 接近했다는 痕迹이 보인다. 그것은 1989年 12月 韓·蘇間 領事處 설치에 합의하고도 領事部長을 韓國에 파견하는 일을 遲延시켜 왔다.¹⁶⁾ 엄밀히 말하면 蘇聯은 88서울올림픽을 前後하여 韓國에 대한 近接研究가 始作되었다고 본다. 영사업무가 開始될 때 까지 가급적이면 時間을 끌면서 영사관계 樹立後 韓國으로부터 얻을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探索한 것이다. 그리하여 蘇聯은 그동안 韓國의 對蘇經濟協力이 미진하다는 發言을 요로를 통하여 삼가하지 않았고 이 狀態로 나가면 設령 公式的인 영사협정이 締結되어도 韓國이 蘇聯에게 提供할 經濟協力은 극히 制限되어 보인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

韓·蘇關係 正常化로부터 蘇聯이 期待하는 국가이익은 두 말할 여지도 없이

經濟協力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蘇聯은 極甚한 經濟難局을 해결 할 길이 없어 페레스트로이카 政策 그 自體가 위기에 直面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이 期待하는 韓國으로부터의 經濟協力は 다양한 資本投資와 技術移轉 그리고 管理 및 經營의 노-하우(know-how)分野에서 생필품에 관한 韓國의 積極的인 支援이다. 물론 蘇聯이 期待하는 韓·蘇經濟協力は 그 內容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短期的인 것과 그리고 中長期的인 것으로 區分될 수 있다. 그러나 現 段階에서 韓·蘇國交正常化는 분명히 短期的인 것이며 그것은 蘇聯의 經濟難局 解消를 위한 가시적 效力을 갖는 經濟分野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韓·蘇關係 正常化가 지니는 經濟外的 要因들로 구성되는 蘇聯의 국가이익 分野도 있다. 예를 들면 韓半島를 위요한 周邊의 安保環境을 평화구조로 轉換시키는 韓·蘇間의 共同關心事가 있다. 그리고 傳統的으로 “特別關係”를 유지해 온 朝(北韓)·蘇關係의 재조율을 위한 韓·蘇共同 協力の 잇슈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經濟外的 要因들은 現단계에서 蘇聯이 즉시 얻고자 하는 國家이익과는 距離가 멀다고 본다.

결국 蘇聯의 對韓接近의 이론적 바탕은 經濟要因이라는 데 큰 意義가 없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 蘇聯은 韓國의 반대급부가 단순히 經濟協력이 아니라는데 갈등을 느끼고 있다. 韓國은 위에서 言及한 바 대로 北方政策의 一環으로 “소련토끼”를 잡음으로써 그 다음은 “중국토끼”, 그리고 그 다음은 “북한토끼”라는 政治·外交의 效果에 더욱 큰 比重을 두고 있다고 蘇聯이 믿고 있다. 물론 韓·蘇經濟協力面에서 長期的인 蘇聯市場에 關心이 없는 바는 아니나, 韓國의 現 經濟規模나 貿易構造 그리고 資本能力으로 보아 蘇聯이 期待하는 經濟協力の 水準까지 急上昇 할 수 없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 더욱, 蘇聯에 대한 大規模 投資는 投資保證協定等과 같은 國家間의 協約을 요한다는 國家行爲의 약속을 期待해 왔다.¹⁷⁾

韓國의 對蘇 北方政策의 이론 또는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誤解하는 境遇, 韓·蘇國交正常化 그 自體가 目的인 것 같은 논지를 볼 수 있다. 여러가지 國際的 脫冷戰時代에 副應하는 설명이 겹드려 있다고 하겠으나, 그 內容을 추려 보면 “본론”은 國交正常化가 目的論的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交關係 設立은 地球村의 만 인류가 普遍妥當性의 原則에 立脚한 正常的인 共同生活을 해야 한다지만, 外交가 冷靜한 國家利益 증대를 위한 對外手段이라는 현실을 무시하지 못 한다. 그런 意味에서 蘇聯側의 반문은 國交正常化 以後 韓·蘇雙方의 공동이익을 무엇이며 아울러 相互補完的 國家利益의 領域과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境遇가 있다. 이와같은 의문은 이제 韓·蘇 頂上會談이 성사된 以後부터 더욱 具體的으로 提議될 蘇聯의 問題提起라고 생각된다. 즉 國交正常化 以後 韓·蘇雙方의 友好協力 分野가 명시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理論이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¹⁸⁾

이렇게 蘇聯의 국익과 韓國의 국익이 經濟/經濟外的 視角으로 다르고 아울러 이에 접근하는 方法이 各各 差異를 일으킴으로써 지난 3년간의 韓·蘇關係 增進은 頂上會談에 의한 초외교적 手段이 아니면 다음 단계에로의 發展이 悲觀的이었다. 그런가운데 韓·蘇雙方은 여러 요로를 통하여 頂上會談의 實現可能性을 타진 해 온 끝에 지난 6월 4일 드디어 드라마틱한 最初의 韓·蘇頂上會談이 美國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韓·蘇頂上會談의 意義는 優先 韓·蘇關係가 公式的인 國交正常化에로의 일정이 公式化되었다는 意味가 크다. 韓國은 分斷國으로서 1969年 以後 西獨의 對蘇 “동방정책”이 1970年代 初 유럽의 既存秩序를 개조하고 그로부터 10年後의 유럽의 國際秩序가 根本的으로 改革되고, 이는 1980年代 末에 와서 “동서장벽”을 破壞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韓·蘇關係正常化는 向後 東北亞의 既存秩序를 改造할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한 관성적 發展은 向

後 5-6年以內에 東北亞 및 環太平洋地域의 國際秩序를 革命的으로 變化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V. 朝(北韓)·蘇關係의 未來

韓·蘇頂上會談에서 가장 데리케이트한 이슈가 北韓에 대한 韓·蘇頂上間의 關心事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蘇聯의 韓·蘇關係 正常化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留保事項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소위 “재래식 사고”(conventional thinking)이며 고르바초프와 같이 “新思考”(new thinking-novoye myshlenie)를 인식론의 근간으로 하는 境遇,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즉 그는 모든 모순성을 엄격한 “辨證法的 實用主義”思考로 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蘇關係에서 北韓이 아무런 걸림돌도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는 늘 모순적인 狀況과 現象을 직시하기를 좋아하며 그의 論理는 세상만사가 모순적으로 發展한다는 혜결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論理를 즐기는 性格으로 보인다.¹⁹⁾

이렇게 볼때, 韓·蘇關係가 國交正常化에로 이루어 저도 蘇聯은 北韓을 繼續 同盟關係로 維持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北韓도 뚜렷한 代案이 없는 한 自繩自縛하는 行動을 삼가하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向後 그러한 北韓의 選擇을 豫測하게 되는 또 다른 理由는 韓·蘇國交正常化 以後에도 韓國과 美國이 이루어 놓은 傳統的 特殊關係가 持續된다는 큰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개의 한국”과 正常的인 國交關係를 維持하면서 국가이익을 增大 시키려는 蘇聯이 과연 北韓을 어떻게 활용하며 반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韓·蘇間 國交頂上化 以前의 朝·蘇關係는 다분히 의례적이면서 外交 및 軍事, 그리고 약간의 經濟的 相互依存性을 維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韓·蘇正常關係 以後 朝·蘇關係는 당분간 조절기를 두고 서서히 實質的인 經濟分野의 紐帶를 強化할 것으로 判斷된다. 蘇聯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北韓의 經濟사정도 매우 深

刻하다는 것이 蘇聯의 見解이다. 經濟的 要因을 하나의 강력한 유인요소로 北韓을 이용하려는 蘇聯의 意圖가 이미 여기 저기에서 엿보이고 있다. 蘇聯은 이미 韓·蘇經濟協力이 量的으로 增大되면 鐵道와 기타 陸路(고속도로), 그리고 航空便 혹은 船舶을 利用한 運送이 반드시 北韓을 通過해야 한다는 사실을 豫側하고 있다. 北韓을 지나는 原油와 天然가스 送油管의 가설은 물론, 심지어 南·北韓과 蘇聯으로 묶는 三國合作이 蘇聯의 極동연해주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主張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蘇聯의 構想은 단순히 北韓을 利用한다기 보다는 도리어 間接的으로는 北韓을 돕고 保護하는 役割도 되기 때문이다.²⁰⁾

蘇聯의 專門家들의 말을 빌리면 이미 蘇聯은 自國의 經濟難局이 危機水位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北韓에 대한 經濟援助는 1991年 부터 中斷될 수 밖에 없다는 通報를 한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韓·蘇關係 正常化는 國際的 多원化 趨勢에 副應하는 經濟的 실리추구 때문에 이미 정해진 蘇聯의 客觀的 진로라는 사실도 北韓에게 분명히 傳達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5月初 美國의 조지 와싱턴대 부설 中蘇研究所가 主催한 한 國際會議에서 北韓側 參加者가 韓·蘇關係正常化 過程을 불평한데 대한 蘇聯側 參加者의 反박에서도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즉, 蘇聯科學아카데미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IMEMO)의 日本研究部長인 쿠나제(George F. Kunadze)가 위와 같은 論旨로 北韓側을 攻撃하면서 “내정간섭”이란 용어를 썼던 것이다.

韓·蘇關係 正常化 初期段階에서 다소의 葛藤이 朝·蘇關係에서 일어나리라 豫測되나, 이는 곧 새로운 그리고 더욱 現實的이고 성숙한 關係에로의 轉換을 摸索해야 한다는 必要에 따라 인내로 변할 것이다. 北韓에게 더 이상의 選擇의 여지를 주지않는 韓·蘇關係 正常化는 北韓으로 하여금 最小限 經濟分野에서 만이라도 開放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 分明하다. 蘇聯은 그러한 北韓의 進路를 豫測하며 北韓에서 루마니아 事態가 재연되지 않도록 늦

기전에 결단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²¹⁾

向後에 전개될 朝·蘇關係에서 軍事問題를 간과 할 수 없다. 韓·蘇國交正常化 以後의 朝·蘇軍事協力關係는 현 水準을 維持하는 반면, 北韓을 包含한 이 地域 軍費統制協商을 주도하는 方向轉換이 있을 것으로 豫測된다. 이미 蘇聯은 1988년 9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하여 東北亞地域 다자간 軍事會談을 제의 한바 있다. 그러나 韓蘇頂上會談의 後續措置로 蘇聯은 北韓의 好戰性을 달래기 위해서도 다자간 軍事會談에 대한 具體的 追加안 이 조만간 제시되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豫測은 특히 韓·蘇頂上會談 수일전에 있었던 美·蘇頂上會談에서도 유럽 軍費協商을 言及하는 過程에서 東北亞地域에 대한 軍費協商도 이미 言及된바 있기 때문이다.²²⁾

外交面에서 韓蘇關係正常化는 蘇聯으로 하여금 北韓에게 어떤 形態로든 蘇聯의 후원을 確信시킬 需要가 있게 되었다. 南北韓이 UN에 單一的석으로 加入되어야 한다는 김일성의 최근 發言은 韓國이 南北韓 동시 또는 단독 UN加入에 대한 蘇聯의 肯定的 反應에 대한 北韓의 궁여지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北韓의 “單一議席 UN加入案”이 반드시 平양의 獨自的 발상인지도 의문이 있다. 주어진 狀況으로 볼때 이는 蘇聯, 中國,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美國의 內心과 部分的으로 一致하는 이른바 利害關係가 깊은 강대국들의 화음이 北韓의 지연전술과 등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찌 되었든, “두개의 코리아”를 國際法上으로 認定해 놓고 蘇聯은 北韓을 달래야 하는 外交的 負擔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外交의 眞理는 國益增大의 手段의 藝術에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때, “韓國을 얻고 北韓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蘇聯이다. 비록 韓國에서 얻는 國益이 北韓을 잃어버리는 “失”(loss)보다 크다고 해도 가진것을 버리려 하지 않는 것이 國際社會에서의 外交的 通論이다. 하물며 일대 모험을 걸고 韓·蘇頂

上會談에 임한 蘇聯은 아직 韓國에서의 “得”(gain)이 不確實한 實情에 있다. 재언하거니와, 현 시점에서 蘇聯의 國益 우선순위는 經濟的 收益이다. 따라서 北韓으로 부터 고르바초프의 사활에 걸린 經濟 利得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韓國에서 그것을 구하는 행위가 豫想을 뒤엎는 韓·蘇頂上會談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 時點에서 朝·蘇關係의 앞날을 展望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1972년 미국 닉슨大統領의 電擊的인 北京訪問과 이로부터 이어진 1979년의 美中正常化라고 하겠다. 美國은 결코 臺灣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臺灣이 國際社會의 완전한 迷兒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結果的으로 臺灣을 經濟強國으로 부상시키는 歷史的 敎訓을 남겼고 대만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臺灣의 통치자와 國民이 위기에 처하여 심기일전 한 結果이다. 아울러 美國은 음으로 양으로 臺灣을 保護했던 超強大國의 道德的 근간을 지킨 것이다. 蘇聯도 그러한 美國의 決斷과 이에 부응하는 外交的 수완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 해서, 蘇聯은 결코 北韓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서 向後 展開될 南北韓關係에 대한 韓國의 對應策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V. 南北韓關係의 새로운 接近

韓國과 蘇聯의 샌프란시스코 頂上會談이 北韓에게 준 衝擊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이미 韓蘇關係 正常化가 시기문제만 남았을 뿐 방향은 이미 정해진 코스라는 事實을 직시하고 있었다. 美國과 日本등 西方世界의 공개된 論評은 이미 1989년 中盤 韓·蘇間의 貿易事務所가 交換設置될 때 부터 韓·蘇國交正常化는 그로부터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이루어질 상항으로 급히 進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가 하면 西方世界의 蘇聯 公關소식 통을 인용하는 外交家에서도 韓·蘇國交正常化가 臨迫했다는 소식을 1990년 초 부터 전하고 있었다.

北韓도 國際社會의 動靜을 살피고 情報를 수집하는 것으로 推測할 때, 平壤 政權은 韓·蘇關係進展을 豫測했을 것이며, 아울러 朝·蘇間의 外交協力과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이 確實하다. 이는 마치 韓美間 外交協力과 事前/事後 協議가 이루어 지듯이 朝·蘇間에도 最小限 이런 형태의 協調와 相互尊重의 바탕이 있다. 특히 금번 韓蘇頂上會談에 관한 사안은 매우 조심스러운 이슈이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北韓이 지금쯤 衝擊으로 정신을 잃고 있다기 보다는 事後策을 強求하는 자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어찌되었던 北韓이 받은 衝激은 자못 큰 것이었던 것은 事實이다. 이렇게 볼때, 韓國과 蘇聯은 이 순간부터 北韓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하는 問題를 안고 있다. 특히 平和的 統一을 窮極的 目的으로 하는 韓國의 “7.7宣言”에서 韓國은 北韓을 “民族共同體”로 인정하고 協力하며 協調하는 상대로 認定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國은 이 시점으로부터 北韓을 眞實로 아끼는 立場에서 새로운 南北韓關係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처지에 있다.

韓·蘇頂上會談以後의 南·北韓關係는 韓國이 北韓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부치지 않아야 建設的인 韓·蘇關係正常化에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北韓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낄 狀況으로 北韓을 困境에 빠지게 하는 경우, 正常的인 韓·蘇國交正常化는 더디 오게 된다. 그러한 이유는 蘇聯의 立場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狀況으로 미루어 볼때, 南·北韓間 새로운 協力關係樹立은 韓國의 課題라고 믿어진다. 한편, 하기에 따라 南·北韓 頂上會談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頂上會談은 여러가지 外交形態중 가장 政治的이며 超理論的인 동시에 가장 效果的인 方法이다. 일반적으로 頂上外交는 3가지로 구분된다. 定期的이거나 아니면 非定期的이거나, 頂上外交는 평상시 特別한 이슈가 없어도 既存하는 友好協力關係를 頂上間 再確認하는 “慣例的 頂上外交”가 있다. 이에 반하는 “의제적(Agenda) 頂上外交”가 있다. 끝으로 敵對關係 또는 어떤 形態의 非正常的인 國家間 和解를 위한 頂上會談으로서 “講和的(peace) 頂上會談”이 있다. 南北韓頂上會談은 강화적 頂上會談에 속할 것이다.

雙方간 平和(또는 和解)를 目的으로 하는 強化적 頂上會談은 一般的으로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쳐서 不和關係에 있는 雙方이 모두 사활에 걸린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경우 超政治的 手段으로 頂上會談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때 雙方이 처해 있는 막다른 골목길에 관한 性格이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協商의 對象으로 目的하는바가 다르므로서 경우에 따라서 “우세한 側”(top-dog)이 “열세한 側”(underdog)을 유도하여 強化적 頂上外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세한 側 이 바라는 協商의 主目的이 一般的으로 한 段階 높은 차원의 外交目的이 있기 때문에 當면한 이슈에서 양보적 態度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韓國은 우세한 側의 立場에서 南北韓 頂上會談을 유도할 段階에 왔다고 본다. 이 時點은 北韓이 外交的으로 큰 좌절감에 쌓여 선택의 폭이 가장

적게 줄어 든 때이다. 어느면으로 보면 사황에 관한 위기에 逢着하고 있기 때문이다. 現在의 時期는 韓國이 하기에 따라 南北韓 頂上會談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금물이 되는것이 公開的 제의나 宣傳效果를 노리는 行爲이다. 어디까지나 완벽한 極祕狀況하에서 南北韓 頂上會談에 관한 接觸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양상의 南北韓關係는 아직은 豫測을 할 만한 資料가 없다. 그러나 一般論的으로 보아 北韓은 당분간 어떤 形態의 南北韓 協商에도 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衝擊과 좌절감으로 부터 오는 反射的 반응기를 要求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은 이와같이 움추려 드는 北韓을 자극할 어떠한 攻勢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이 期間에 韓國은 蘇聯을 통해 은밀한 메시지를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北韓을 國際社會에서 두둔하는 立場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소 韓國에게 損害가 되더라도 忍耐와 寬容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대할 것이며 可能하면 우리側이 우세하다는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

北韓에게 提議하는 南北韓 頂上會談은 여러가지 形態가 있다. 상황에 따라 이것이 蘇聯 또는 第3者의 중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78년 당시 美國의 카터大統領이 성사시킨 사다트(Sadat)와 베긴(Begin)이 參席하는 이른바 캠프·데이빗(camp david) 3자 頂上會談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現 狀況에서는 蘇聯 또는 美國의 役割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이른바 키신저(Kissinger)형의 頂上會談 밀사를 통한 直接的인 南北韓 頂上會談을 생각할 수 있다. 1972년 닉슨-모택동간의 美·中共頂上會談은 이미 널리 알려진 모델이다. 韓國에서도 南北韓 頂上會談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나 1972년 당시 이후락 中央情報部長에 의해 部分的인 效果를 본 事例가 있다. 다시 強調하거니와 이 時點은 다시 한번 南北韓 頂上會談을 시도해 볼만한 好期라고 하겠다.

VI. 結論：南·北韓關係와 蘇聯의 役割

結論에 즈음하여 蘇聯의 새로운 역할을 南·北韓關係의 問題意識에서 생각해 본다. 앞에서 언급된 바 대로 韓·蘇頂上會談이후에도 그리고 실사 韓·蘇關係가 正常化되는 境遇에도 朝·蘇關係는 건전한 것이며, 따라서 건전한 朝·蘇同盟關係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漸進的인 南·北韓관계의 정상화가 摸索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健全하다”는 의미는 脫冷戰時代에 걸맞는 社會主義 友好關係를 뜻하는 것이다.

蘇聯이 북한을 버릴 수 없는 原則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蘇聯이 실사 자본주의국으로 탈바꿈해도 북한을 버리지 못할 이유는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이다. 中國과 영원히 경쟁적 입장에 있어야 하는 蘇聯은 북한(또는 統一된 韓半島)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북한정권이 그토록 다루기 힘든 근대관 王朝이지만 蘇聯은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북한을 고수하는 속셈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蘇聯을 이용한 南·北韓關係의 돌파구를 研究해야 할 것이다. 著者は 이와같은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概念的 原則에 확신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모델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더욱 깊은 研究가 요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常識的으로 방향만이라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蘇聯을 통한 원조형 대북한 경제협력의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이를 쉽게 말하면, “돈은 韓國이 내고 그 돈으로 蘇聯이 북한을 支援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둘째, 蘇聯을 통한 外交活動이 가능하리라 본다. 역시 쉽게 말하면, “韓國의 대북한 사교활동을 蘇聯이 代行”하는 것이다. 結果的으로 한국의 대북한 對話의 效果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면 구태여 相面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자극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蘇聯을 통한 기타 모든 비정치적 대북한 交流를 해야 한다. 각종 형태의 經濟協力에 관한 대북한 交流는 물론, 심지어 文化交流에 이르기까지 蘇聯이 한국을 代行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韓蘇정상관계에 임하는 한국의 대북한 자세는 보다 수용적이고 理解하는 자세로 가능한 한 “모스크바를 통해 평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그러나 진정 謙虛한 태도로 摸索해야 할 것이다.

<脚註>

1) Bush-Gorbachev 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고르바초프의 소비에트 최고회의 연설에서 그는 “Despite certain differences in emphasis, the sides expressed their readiness to promote the normalisation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Cambodia, the establishment of peaceful relations and the settlement of issues where there is dispute.”라고 밝혔다. *SPEECH BY MIKHAIL GORBACHEV ON THE RESULTS OF THE SUMMIT WITH THE PRESIDENT OF THE USA*... (Moscow : Novosti Publishers <APN>, 1990), p. 20.

2) 자세한 내용은 John Tedstrom, “Can the Soviet Economy be Rescued?”, *THE FAILURE OF COMMUNISM : THE WESTERN RESPONSE* (Proceedings), 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sponsored by the Radio Free Europe, Washington, DC, November 15, 1989, pp.16-17 참조.

3) 정치국원이며 대통령위원회 위원인 Vadim A. Medvedev가 시장경제 제도 도입에 관한 한 언급에서 장기적으로 소련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시장경제체제를 하나의 “sensitive instruments of effective economic management”로 생각한다고 했다. *SOVIET WEEKLY* (London), FEBRUARY 15, 1990, P.1.

4) Institute of Economics of the World Socialist System of the USSR Academy of Sciences의 자본주의 경제연구부장인 Gennadi Lisichkin 박사는 그의 저서 *SOTSIALIZM : <NOVOE> VIDENIE PERSPEKTIV* (Moskva : Novosti, 1989)에서 사회주의 경제제도하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사기업”과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5) *KONSTITUTSIYA <OSNOVNOY ZAKON> SOYUZA COVETSKIKH COTSIALISTICHESKIKH RESPUBLIK* (Moskva : Izdatel'stvo, 1977), p.21.

6) 현 Moscow Mayor인 Gavril Popov박사가 모스크바 시장이 되기전 모스크바대학 교수당시 밝힌 Perestroika 지지세력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 함. 자세한 내용은 Gavril Popov, "Ten Theses on the Second State of Perestroika," *GLASNOST*, Nos. 16-18, January 1989, p.48 참고 바람.

7) 고르바초프는 28차 공산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하여 "Democratic Socialism"에로의 전향적 개혁을 강조하는 지적에서 "It renounces formalism and the nomenklatura approach in its personal work."라고 했다. *DOKUMENTY I MATERIALY XXVII S'EZD KPSS* (Moskva : Novosti, 1990), p.92.

8) 자세한 내용은 Paul Gkoble, "Platform of the Russian Patriotic Bloc," *REPORT ON THE USSR*, Vol. 2, No. 2, January 12, 1990, pp.11-12 참조 바람.

9) 이 부분에 대하여는 Ann Sheehy, "Is Moscow Considering a New Treaty of Union?," *REPORT ON THE USSR*, vol. 2, No. 7, February 16, 1990, pp.9-11을 참고 함.

10) 최근의 논문으로 이 문제를 다룬 글로 다음을 소개 한다.

Carl Linden, "Gorbachev's Troubles : Perestroika in Peril," a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Institute for Sino-Soviet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June 18-19, 1990.

11) "Economic Predicament Deepens," In *PERESTROIKA UPDATE*, an occasional paper by 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January 1990, pp. 8-18 참고 바람.

12) Yu-Nam Kim, “Perestroika : Changes in Soviet Politics in the 1990s ,” a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Institute for Sino-Soviet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June 18–19, 1990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13) 소련 대통령위원회 위원이며 시장경제제도의 전문가인 Shatalin 박사의 경제개혁방향 이론을 참고하면 이 문제가 보다 확실해 지고 있다고 본다. Stanislav S. Shatalin, a Academician and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uncil, “Is the Soviet Economy Beyond Repair?,” an interview with APN, Moscow, March 19, 1990, pp.2–6.

14)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기가 요구된다는 말과 함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a regulated market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carry out a stage-by-stag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장경제체제로 가는 전환기에 국가적 “통제”가 강력한 공권력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바, 이를 다른 말로 옮기면, “페레스크로이카 독재” (Perestroika Dictatorship) 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15) 이 부분에 관해서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형태의 “Democratic Centralism” 을 역설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ikhail Gorbachev, *POLITICHESKIY OTCHET TsK KPSS XXVIII C EZDY KPSS I ZADACHI PARTII* (Moskva : APN, 1990), p.44참고 바람.

16) 소련은 모스크바주재 한국영사처장(대사급)이 현지에 부임하고 5개월이 지난 이제(1990. 8. 16)야 비로서 Yeremenko영사처장을 서울에 부임시켰다.

17) 투자보증협정은 외국기업의 대소투자에 필수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방의 경우를 분석한 논문으로 다음을 소개한다. Susan M. H. Lewenz, USSR Division, Office of Eastern Europe and Soviet Affair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Joint Ventures in the Soviet Union,” *BUSINESS AMERICA*, March 12, 1990, pp.2-10.

18) 이 문제는 한·소경협과 국교정상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호혜성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어 보인다.

19) 소련의 인식론적 논리학의 기본철학은 변증법적 변화와 가변성을 기간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서방이 소련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냉전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방의 “Soviet Negotiation Behaviors”에 관한 연구는 많다. 이에 관해 비교적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서로는 James R. Millar, ed., *POLITICS, WORK, AND DAILY LIFE IN THE USSR : A SURVEY OF FORMER SOVIET CITIZENS*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를 소개한다.

20) 이에 관하여 다음 논문을 참고 함. Georgi Kunadze, IMEMO, “Problems of Korean Peninsula,” a conference paper on “Problems of Peace,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ponsored by the Institute for Sino-Soviet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the Yomiuri Shinbun, Tokyo, May 25-27, 1989.

21) 최근 소련언론의 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일부 보도매체가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는 과연 소련정부가 의도적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북한 압력인가, 아니면 언론이 자율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비판하는 것인가

지 불확실 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North Korean Economy, Politics Profiled,” *ARGUMENTY I FAKTY*, No. 13, March 31-April 6, 1990, pp. 4-5에서 이 주간지는 북한을 김일성 왕조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면서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고 있다.

22) 이미 널리 알려진 이른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중에 밝힌 “7개조항 신제의”는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 또는 쌍무간 경제 및 안보협력안을 언급하고 있다. 소련 스스로도 “Time for Action, Time for Practical Work”란 표제와 함께 이를 널리 선전하고 있다. Mikhail S. Gorbachev, *VREMYA DEYSTVIY, VREMYA PRAKTICHESKOI RABOTY* (Moskva : APN, September 16, 1988.)

< 參考文獻 >

단행본 및 보고서

- Tedstrom, John, “Can the Soviet Economy be Rescued?”
The Failure of Communism : The Western Response(Proceedings),
Washington, DC, November 15, pp.16 – 17.
- Lisichkin Gennadi, Sotsializm : <Novoe> Videnie Perspektiv,
Moskva : Novosti, 1989.
- Konstituteiya <Osnovnoy Zakin> Souza Sovetskikh Catsialisticheskikh
Respublik, Moskva : Izdatel'stvo, 1977, P.21.
- Popov, Gavrill, “Ten Theses on the Second State of Perestroika,”
Glasnost, Nos. 16 – 18, January 1989, p48.
- Gkoble, Paul, “Platform of the Russian Patriotic Bloc,” Report on the
USSR, Vol.2, No.2, January 12, 1990, pp.11 – 12.
- Sheehy, Ann, “Is Moscow Considering a New Treaty of Union?”
Report on the USSR, Vol.2, No.7, February 16, 1990, pp.9 – 1.
- Linden, Carl, “Gorbachev's Troubles : Perestroika in Peril,” a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Institute for Sino-Soviet Studies, George Washinton
Univ., Washington, DC, Jun 18 – 19, 1990.
- Economic Predicament Deepens, Perestroika Update, Washinton, Dc,
January 1990, pp.8 – 18.
- Kim, Yu-nam, “Perestroika : Changes in Soviet politics in the 1990's” a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the Institute for Sino-Soviet Studies, George
Washinton Univ. Washinton, DC, June 18 – 19, 1990.

- Shatalin, Stanislav S., “Is the Soviet Economy Beyond Repair?,” an Interview with APN, Moscow, March 19, 1990, pp.2–6.
- Gorbachev, Mikhail, Politicheskiy Otchet Tsk KPSS XXV111 C’ezdy KPSS I zadachi partii, Moskvu : APN, 1990, p.44.
- M., Susan and Lewenz, H., “Joint Ventures in the Soviet Union,” Business America, March 12, 1990, pp.2–10.
- Millar, James R., ed., Politics, Work and Daily Life in the USSR : A Survey of Former Soviet Citizens,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1987.
- Kunadze, Georgi, “Probleme of Korean Peninsular,” a conferenes paper on “Probleme of Peace, Securil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Tokyo, May 25–27, 1990.
- North Korean Economy, Politics Profied,” Argumenty I Fakty, No.13, March 31-April 6, 1990, pp.4–5.

신문, 잡지 등

- Soviet Weekly, London.

< 討論要旨 >

韓·蘇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 : 韓·蘇 頂上會談을 계기로 본 評價와 展望

정한구 : 고르바초프가 韓國에 접근하는 이유에 대한 經濟的인 解析 및 蘇聯의 政治的 危機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고르바초프의 危機와 國內政治問題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과연 “開發獨裁”란 무엇인가? 또한 새로운 형태의 權威主義的 獨裁란 무엇인가? 즉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獨裁化를 너무 일찍 단정짓는 것이 아닌가? 西方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지도자의 權威를 상실하여 오히려 無秩序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을 망정, 고르바초프의 獨裁에 대한 견해는 매우 새로운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經濟改革을 推進하다보니 民主化가 필요해진 것이고, 民主化改革을 통해서 勞動者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자는 것인데, 獨裁에 의해서 과연 그러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蘇聯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주된 이유는 經濟的인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너무 經濟的인 것만 따지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對蘇關係가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蘇聯이 經濟的인 어려움이 많지만, 강대국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으며, 따라서 對韓接近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또한 韓·蘇關係變化가 東北亞 既存秩序를 革命的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韓國이 西獨이나 日本만큼 강력한 위치에서 韓·蘇關係正常化를 통해 기존의 東北亞秩序를 그렇게 까지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蘇聯이 北韓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91년도부터 對北韓 援助를 중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버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北韓으로서도 蘇聯과 中共사이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南·北韓 關係에 蘇聯을 이용한다는 것이 놓은 발상이지만 만일 北韓이 蘇

聯을 통한 對北援助를 받기만하고 政治的으로 계속 非妥協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 영 : 고르바초프 危機의 評價問題는 조금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등소평 獨裁나 維新獨裁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 또한 政治的 民主化없이 經濟開發은 어려움이 있게되며, NIEs 및 天安門事態 등은 그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엘친의 영향력을 배제한면서까지 고르바초프가 NIEs 獨裁化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페레스트로이카는 獨裁보다는 보나파르티즘의 수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즉 시대에 역행하는 獨裁라는 本質的形態를 취하기보다는 단순한 수법을 導入하는 것이 더 現實的인 방법일 것이다.

南·北韓 問題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다. 즉 논문의 입장은 너무 우리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다. 고르바초프는 분명히 “合理的 充分性의 原則”을 南·北韓 安保問題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韓·蘇關係 및 南·北韓 關係의 正常化를 韓國이 바란다면 駐韓 美 핵무기의 철수에 대해서 韓國도 능동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냉전이후의 東北亞 新秩序 構築에 이바지하는 태도일 것이다. 南·北韓關係에 대하여 韓·蘇 經濟協力에 의해 非經濟的인 면도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결론부분에서 현재로서는 南北韓 問題를 거론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美·蘇의 입장이며, 그러한 견해가 公式化된다면, 여태까지의 統一推進 노력은 수사에 불과했다는 반발이 당장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東·西獨 모델을 南·北韓 모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經濟만을 너무 집착하는 듯한 인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 經濟를 活性化시키지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는 韓半島의 安保問題의 부담으로 부터 美·蘇·南北韓이 해방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韓·蘇關係 進展이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영향은 韓·蘇合作으로 北韓을 돕는 것 보다도 우선 北韓이

軍費를 줄일 수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 돈을 經濟發展에 이용할 수 있는 構圖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軍縮의 問題이다.

사회자 : 현재 北韓의 軍縮案은 88년도 “포괄적 平和方案”과 기본적으로 달라진게 없으나 군데군데 약간씩 좀더 合理化된 면이 보인다. 이는 유럽식 軍縮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태도의 변화라 하겠다.

하용출 : 기본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 즉 軍事大國인 동시에 經濟弱小國인 蘇聯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일치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올림픽이라는 對外的 이미지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國內의 政治, 經濟的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즉 外交的인 여건이 國內의 여건 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國內與件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外部의 현상에 대해서만 흥분하고 있다.

蘇聯이 韓國에 接近하는 동기에는 近因과 遠因으로 나눠 보아야 한다. 물론 蘇聯이 國內經濟的인 問題를 갖고 있지만 對아시아政策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經濟的인 것으로만 설명이 될 수는 없다.

즉 이 경우에는 우리의 經濟的인 영향력을 過大評價하게 되고, 蘇聯의 外交的인 對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다.

蘇聯이 韓國에 접근을 하는 이유중 가장 중요한 것은 日本要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韓蘇頂上會談은 앞으로 蘇聯과 日本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政策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蘇聯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엘리트만의 조정이 아닌, 大衆들을 설득해서 經濟改革을 推進하는 과제이므로, 고르바초프의 인기의 어느정도 下落은 다분히 構造的인 것이다. 北韓과 蘇聯의 關係問題는 北韓

의 軍縮問題로 地域的 安保次元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韓半島의 安保問題에 대해 兩者間 및 多者間의 政策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北韓을 어떻게 接近할 것인가에 대한 國內의 戰略的 콘센서스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政策的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理論的인 면에서 어떠한 韓國的인 모델은 세울 것인가는 研究課題라 하겠다.

참석자 : 글라스노스트가 반드시 政治的 民主化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간 베기안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開放은 오히려 技術導入을 통해서 經濟成長을 이루고 交易을 늘리자는 經濟的인 開放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蘇聯이 韓國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韓國의 經濟發展모델을 배우기 위한 것이여 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유남 : 韓半島問題에 있어서 蘇聯은 美國의 자세가 問題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 으며, 현재의 蘇聯은 옛날과는 다르므로 그 시각에 대해 어느정도는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韓半島問題에서 美國의 기득권은 어느정도 손실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은 美國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蘇聯에서 고르바초프가 실각하더라도 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하용출 : 고르바초프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蘇聯이 현재 약점이 많이 드러나 있는 이상 도로 軍部가 입각해서 원점으로 (冷戰體制) 돌아간다는 시나리오는 非現實的 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너무 흥분해서 우리의 經濟力을 過大評價하게 해서는 안되며, 좀더 차분하게 政策을 수행해야 한다.



第2主題

韓國의 對中國 關係改善과 南北韓 關係의 展望

吳 鎮 龍
(世宗研究所)



韓國의 對中國 關係改善과 南北韓 關係의 展望

I. 韓·中關係를 보는 視角

II. 中國의 韓半島에 대한 認識과 對韓政策

1. 中國 指導層의 韓半島에 대한 認識
2. 中國의 對韓政策

III. 韓·中關係 改善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1. 韓·中關係 改善의 可能性
2. 韓·中關係와 南·北問題

IV. 要約과 結論：韓·中關係와 南北韓 展望

脚 註

參考文獻



I. 韓·中關係를 보는 視角

韓·中 兩國의 關係改善 可能性에 대한 論議가 또 다시 활발히 論議되고 있다. 韓·蘇 兩國의 頂上會談이 전격적으로 개최되고, 兩國의 外交關係 樹立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벌써부터 韓·蘇 修交이후에는 韓·中關係의 改善도 가속화 되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까지 蘇聯의 對韓接近에 비해 한 템포 늦어지는 中國의 對韓接近의 전례로 보아, 韓·蘇間의 劇的인 修交이후에 中國에서도 韓半島 問題에 대한 적절한 措置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韓·中關係를 여러모로 관찰해 볼 때 서울올림픽이후 韓·中 兩國의 民間交流가 크게 늘어나, 1989年 한해동안 萬餘名의 韓國人이 中國을 방문하였고, 交易規模가 이미 30億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學界一部와 言論媒體에서는 貿易代表部 設置와 關係改善 問題를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금년 9月 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 바로 韓·中 兩國關係를 보다 긴밀하게 接近해 나갈 수 있는 契機가 될 수 있다고 믿는 企業人들과 政府의 關係者들도 적지 않다. 韓國이 능동적으로 陰으로 陽으로 北京의 아시안 게임을 밀어주고, 깊은 「關係」를 만들어 가면서, 兩國 關係改善의 契機를 만들어 보자는 意圖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1989年 한 해동안 中國에서는 天安門 사건이 일어났고, 東歐에서는 共產黨 政權이 차례로 崩壞되는 事態가 있었다. 天安門 사건이후 美國을 비롯한 西方의 對中國經濟 制裁는 經濟全盤에 걸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 그러니 만큼 天安門 사건과 東歐事態는 中國에 상당히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 결과 中國과 北韓關係는 다시 「復古的인 血盟關係」로 되돌아 갔다. 中·朝 양국은 서로 「社會主義 陣營」의 단결을 앞세우면서 적극적으로 「體制守護」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天安門사건 이후에도 韓國은 中國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西方이 일제히 中國에 대해 강력한 「經濟制裁」를 취할 때도 그렇고, 北韓이 「社會主義陣營」으로 되돌아가 中·朝關係가 다시 긴밀화할 태세를 분명히 했을 때에도 韓國은 아무 적극적인 표시도 하지 않았다. 西方의 對中國 經濟制裁에 가담하거나, 北韓이 社會主義 陣營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南·北韓 關係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孤立을 脫皮할 수 있는 政策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韓國이 침묵을 지키면서, 西方의 經濟制裁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韓國이 「反中國的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을 뿐, 南·北 關係의 보다 발전적인 協力關係를 설정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자리에서 討論하려고 하는 「韓國의 對中國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展望」이란 과제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中國에 대한 韓國의 일방적인 熱情과 友好의 표시가 관련 韓·中國 關係改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中國의 對韓半島에 대한 認識과 對韓政策은 서로 어떤 대칭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혹은 韓·中國 關係의 접근과 진전이 南·北韓 問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中國의 對韓半島 시각과 對韓政策, 韓·中 關係改善의 가능성, 韓·中關係의 개선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中國의 韓半島에 대한 認識과 對韓政策

1. 中國 指導層의 韓半島에 대한 認識

中國은 公式的으로 여전히 韓國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 또한 公開的으로도 敵對的인 態度를 緩和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보이면서도, 直接的인 接觸과 交流를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記錄上으로나 形式的으로 상호 ‘雙務的인 關係’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中國政府나 指導層이 韓國과의 關係를 公開的이고 直接的으로 擧論한 事實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런 理由때문에 文獻의 記錄을 통해서 中國 指導層들이 과연 韓國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네가지 경우에서 中國指導層들의 韓國에 대한 생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中國의 指導層이 美·日의 指導者들과의 對話에서 韓半島 問題를 擧論하는 경우, 北韓 指導層과의 公式的인 會談에서 韓國問題를 擧論하는 경우, 中國指導層이 政府內에서 은밀하게 言及한 內容들이 알려지는 경우, 人民日報를 비롯한 言論들의 社說이나 韓國問題 專門家들이 發表하는 論文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첫번째 경우에는 韓國·日本 指導層間의 對話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 日本의 政治人들이 意識的으로 特定問題를 浮刻시키려 한다든지 혹은 政治的으로 利用할 底意가 있기 때문에, 中國쪽에서는 상당히 形式的으로 答辯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日本쪽에서 처음부터 內容을 歪曲하거나 誇張해서 報道하기 때문에, 사실이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흔히 日·中 兩國의 指導層은 서로 韓半島에 대한 ‘속셈’을 打診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對話의 진정한 意味를 읽기란 쉽지 않다.

두번째, 中國·北韓 指導層間的 對話가 公開的으로 알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당한 時間이 지난 다음 그 對話의 一部가 第3國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마저도 너무 斷片的이기 때문에 확실한 意圖를 알기가 쉽지 않다.

세째로, 간혹 中國指導層이 言及한 內容들이 祕密資料 形式으로 알려지는 경우는 더러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런 類의 發言들이 事實을 그대로 反映한 점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상당히 信賴度가 높은 資料로 取扱되어 왔다.

네째로, 人民日報와 같은 대표적인 신문들의 重要社說이나 혹은 韓國問題 專門家들의 論文에서는 아주 관에 박힌 論理와 主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中國의 公式的인 態度를 反映한다는 뜻에서 중요한 意味를 갖고 있다.

中國指導層의 韓國에 대한 認識이 比較的 率直하게 나타나는 것은 세번째와 네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中國指導層의 發言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고, 또 그런 內部 參考資料가 밖으로 나온다 해도 特定한 政治的 目的을 깔고 있거나 意圖的으로 꾸며졌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예로 볼때, 지금까지 中國 指導層들의 隱密한 發言이 여러가지 側面에서 中國의 立場을 그대로 代辯해온 예가 많기 때문에 中國 指導層의 對韓國觀을 理解하는데 소중한 資料가 되고 있다. 네번째의 경우는 中國의 公式立場을 反映하는 것이므로 內容의 行間속에 있는 意味까지 깊이 있게 음미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資料의 形態面에서 이제까지 中國 指導層의 韓半島에 대한 認識을 알 수 있는 資料¹⁾들을 정리해 보면 綜合的으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자료들 가운데서 中國의 指導層 특히 周恩來, 喬冠華, 黃華 外交部長들의 祕密演說²⁾을 깊이있게 分析해 보면, 韓半島의 重要性和 함께, 北韓에 대한 失望과 背信感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

다. 1970年代까지만해도 中國의 指導層들의 주요 관심은 蘇聯에 대한 北韓의 態度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당시만해도 中·蘇 사이에서 北韓은 어느정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中·蘇 사이에서 北韓의 행동의 幅이 크면 클수록 中國의 北韓에 대한 갈등도 클수 밖에 없었다. 특히 中國의 중요한 東北三省 地域을 둘러싸고 있고, 北東쪽 邊方地帶의 安全과 깊은 關係에 있는 北韓이 蘇聯과의 蜜月을 통해서 오히려 「창을 거꾸로 들이대면서」 中國에 대해 威脅的인 存在로 變身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外交部長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憂慮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中國에 있어서 北韓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2. 中國의 對韓政策

中國의 韓國에 대한 政策의 推進過程을 주의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결정요인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中國의 對外政策의 決定過程에 있어서 中國은 우선 먼저 邊方政策(border policy)을 가장 優先的인 位置에 둔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中國은 아시아의 地域勢力으로 머물러 있고, 發展途上國家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外部의 霸權勢力의 侵略을 저지하고, 經濟의 自主的인 繁榮을 위해서는 邊方の 安定과 緊張緩和의 문제를 對外政策의 가장 우선적인 要因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邊方問題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는 中國의 意圖와 目標은 이미 韓國戰爭의 參戰, 中印戰爭, 中越戰爭 등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바 있고, 특히 中國이 對蘇關係 正常化의 조건으로 내세운 세가지 조건이 모두 「邊方地域의 安定」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中國의 立場을 강력히 代辯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볼때, 中·朝 關係는 「不可缺한 關係」이며 中國이 韓國에 대해 어떤 政策을 갖기 이전에 우선 「北韓에 대한 考慮」가 먼저 先行된다는

점은 당연한 結果일 것이다. 韓半島에 두개의 政府가 存在하고 있으며, 民間이든 아니든, 直接이든 아니든간에, 濃度の 差異는 있어도 中國은 현재 「두개의 政府」와 交流를 계속해 나가면서도, 中國이 이처럼 北韓中心의 對韓政策을 追求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韓國과의 關係의 幅이 그 만큼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中國의 政策은 명백하다. 中國은 韓國의 實體를 여전히 認定하지 않고 있다. 韓半島에서 韓國의 지위를 認定하지 않고, 南朝鮮(公式的) 혹은 地域的 名稱으로서 南韓(非公式的)이라고 부르기 일쑤다. 심지어 엄연히 直接的인 交易를 하면서도 公開的으로 상호간의 交流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中國人들은 때때로 이러한 北韓中心의 對韓政策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朝鮮問題」에 있어서 中國政策의 兩面性은 불가피하다던가 혹은 두개의 朝鮮과 동시에 友好關係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形式上의 問題는 不可避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中國의 입장을 諒解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이런 태도는 상당히 意圖的인 데가 있다. 北韓中心으로 政策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이러한 趨勢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中國의 對韓政策이 「中·朝間의 기존 協力關係」에 밀려, 획기적인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中國의 對韓政策에 영향을 주는 두번째 가장 重要的 要因은 美·蘇와의 관계에서의 「韓國問題」라고 볼 수 있다. 中國은 韓國과의 어떤 變化나 發展的인 措置를 취하기 이전에 우선 먼저 이 문제가 美·蘇와의 調整을 거칠 필요가 있는가를 고려한다. 韓半島는 美·蘇의 勢力이 交叉하고 있고, 가장 민감한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얽혀 있다. 특히 美國의 東北亞政策에 있어서 韓國은 不可缺하고 核心的인 位置에 있다. 그런 意味에서 中國의 對韓政策이 美國과의 協議 事項이라는 점은 의미 심장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美·中國은 韓半島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 일찍부터 분명한 윤곽을 정해놓고 있다. 이 문제는 1979年 1月 美國을 방문한 鄧小平과 카터 大統領과의 會談에서 깊이 있게 論議되었다. 첫째, 美·中 兩國은 美軍이 韓國에서 계속 撤收해 나간다고 해도, 南·北間의 軍事的 均衡은 계속 유지한다. 둘째, 美·中 兩國이 協調體制를 유지해 나가는 식의 「外交的 均衡」을 통해서 南·北이 自主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解決해 나가는데 필요한 國際環境을 조성한다. 셋째, 韓半島 問題는 궁극적으로 南·北間의 對話와 協商을 통해 解決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후 美·中 兩國사이에 아시아地域 問題의 協調體制가 설정되고서 부터, 中國은 가능한 한 韓半島에서 美國의 立場을 支持한다는 立場을 취해왔다. 특히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해 美國의 主導的인 外交를 支持한다는 태도의 표명과 함께, 中國이 「前面에 나서지는 않겠으나(北韓을 意識해서) 韓半島 現狀維持를 위한 美國의 外交努力을 支持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왔다.

이것은 對蘇關係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로 北京 人民大會堂에서 있었던 고르바초프의 演說(89. 5. 17)에서도, 美國과 협의되었던 것과 같은 「對韓半島에 대한 協議의 윤곽」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蘇聯이 北韓의 立場을 無視하고, 화려한 頂上會談을 통해서 韓·蘇 두 나라의 修交關係가 맺어지는 배경에는 고르바초프가 이미 「나사가 풀려가는 中·朝關係」의 한 斷面을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北韓을 몰아 세워도 北韓이 함부로 抵抗할 수 없다는 事實을 환히 읽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對韓政策 決定의 세번째 중요한 요인은 「中國 자신의 經濟的인 利害關係」라고 볼 수 있다. 中國은 開放政策을 追求해 오면서 經濟의 보다 劃期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韓國·臺灣·홍콩·싱가폴과 같은 나라들과의 經濟協力이 무엇보다

도 重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中國의 광대한 地域的 特性으로 보나 技術開發·經營管理가 落後된 실정을 감안할 때, 모든 면에서 비교적 中間段階에 있는 台灣·韓國같은 나라와의 協力強化가 절대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체의 統一戰線은 經濟建設을 위해서」라는 目標아래 1983年이래 韓國·台灣과의 交易擴大를 위해 積極的인 政策을 취해온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³⁾

韓·中 兩國의 交易擴大의 필요성을 中國側의 立場에서 본다면 매우 重要한 意味가 있다. 中國에 있어서 韓國은 중요한 農産物, 에너지, 農副資材의 큰 市場으로 간주되고 있고, 韓國과의 成功的인 經濟協力の 「모델」을 갖는다는 것이 長期的으로 周邊國家들과의 關係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台灣과 中國은 對立的 立場에 있고, 政府間의 交流가 막혀있다. 또한 1997年의 接수를 앞두고 香港도 자칫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분위기에 있다. 中國은 周邊國家들 가운데 이렇다할 友好國家도 없고, 對中國 進出에 積極적인 役割을 해낼만한 나라도 흔치 않다. 만약 韓國의 積極적인 進出試圖가 없다면 中國市場은 마치 日本의 독무대처럼 비추어질 것이다.

네번째로 重要한 原因은 韓國과의 協力關係를 설정함으로써, 對中國關係에서 南·北韓이 相互競爭的인 위치에 서게 되어, 이를 통해 北韓으로부터의 지나친 요구와 「負擔」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두개의 韓國」政策을 본궤도에 올려놓게 되어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現狀維持라는 장기적인 政策目標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東北亞에서 中國의 影響力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Ⅲ. 韓·中關係改善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1. 韓·中關係 改善의 可能性

앞에서 언급한 中國의 對韓政策의 「윤곽」을 살펴볼 때 韓·中關係 改善의 可能性의 幅이 상당히 비좁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中國이 「北韓中心의 韓半島政策」을 고집하는 한 韓·中關係의 全面的인 改善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非政府的인 民間次元에서, 間接的인 形態로 對韓關係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까지의 中國側의 意圖를 충분히 理解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韓·中 兩國이 長期間에 걸친 길고 지루한 「民間交流」의 過程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며, 南·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4強體系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한, 韓·中關係는 民間次元을 뛰어넘어 더 이상 한층 발전된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침내 中國의 對韓政策이 크게 方向轉換을 할 수 있는 激變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 가장 強力한 變化의 원동력이 바로 「韓·蘇의 修交」이며, 그리고 이것은 곧 南北간의 勢力均衡과, 韓半島의 冷戰構造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朝·蘇關係에서 北韓의 입장은, 韓·蘇關係에서 韓國의 입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입장에 있다. 에너지, 機械設備·部品·技術體系는 물론 武器體系와 軍事的 支援의 거의 絶對的인 部分이 蘇聯쪽에 依存해 있다는 사실은 朝·蘇間의 依存關係의 幅이 큰만큼 향후 韓·蘇 修交이후에 나타날 반사적인 영향이 北韓에게는 「破局的인 威脅」이 될 수도 있다는 事實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韓·蘇 修交이후 北韓이 選擇할 수 있는 政策의 幅은 그리 넓지 않다. 첫째 北韓은 蘇聯에 대한 經濟·軍事的인 의존이 큰 만큼, 굴욕을 참으면서, 당분간 對蘇關係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 둘째로는 中國과의 關係 強

化를 통해서 蘇聯으로부터 오는 壓力을 버티어 나가면서, 美國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장기적인 平和攻勢」를 추구해 나간다. 동시에 北韓은 壓力을 分散시키기 위해 韓國과도 각종 對話攻勢를 취해 나간다. 세번째로는 蘇聯의 요구에 따라 美·北韓 關係를 개선하고, 對內的으로 점차 開放을 추구해 나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만약 北韓이 이 코스를 選擇한다면, 韓半島의 「交叉承認」이 이룩되고 4強의 「두개의 韓國」 政策은 본궤도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北韓이 韓國에서의 美軍의 地位를 認定하는 것이고, 과거 40年동안 목표로 해왔던 「南朝鮮 革命事業」이 철저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中國의 態度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까지 北韓을 乳母처럼 보살펴온 過去의 例에 비추어, 中國이 마치 6.25戰爭의 경우처럼 孤立狀態에 있는 北韓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金日成政權을 포용해 나간다면, 北韓은 中國의 보호 우산속에서 보다 강경한 「反蘇路線」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問題를 일으킨다. 만약 中國이 이처럼 「金日成의 乳母」와 같은 역할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世界の 緊張緩화와 平和的인 世界秩序 改編을 추구해온 美·蘇의 노력에 정면으로 反旗를 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中國은 美國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반도에서 美國은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다. 韓國의 적극적인 北方政策은 점차 美國의 입장을 당혹한 처지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韓國의 對中·蘇 接近이 신속하게 개선되고 韓半島에서 對決構造가 점점 사라지면서, 「駐韓美軍과 美國의 政策」은 갑자기 그 「役割과 目標」를 喪失하는 결과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러한 趨勢에 맞추어 北韓은 더욱 더 反美煽動과 美軍撤收를 크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韓國과 중·소의 경제협력과 민간교류가 強化되면 될수록

이제까지의 反共路線과 미군의 역할이 名分을 잃게 되고, 그런 趨勢가 深化될 수록 北韓은 이미 동조자들이 침투해 있는 社會基層을 煽動해서 美國의 立場을 한층 더 孤立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美國의 입장을 미묘하게 만들어 놓았다. 美軍駐屯의 명분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左傾化된 學生들에게는 「美國이 바로 統一의 障礙」로 인식되는 事態를 빚어 놓았다. 갈수록 東北亞에서 美軍의 名譽로운 役割을 찾기도 어렵게 되고, 전면적으로 撤退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퇴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더 進退兩難에 직면하게 되었다. 中國과 日本은 「駐韓美軍」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개입을 회피하는 입장에 있고, 오히려 은근히 「撤軍以後의 問題」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10年동안 韓半島에서 쉽게 엿볼 수 있는 것이다. 1986년 이후 美國은 中國의 영향력을 통해서 北韓과의 접근을 시도하고, 南北韓關係에서 자신의 입장을 再定立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구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中國은 美國과의 協力關係를 유지하기 위해서 「北韓의 立場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심지어 아시아 問題에 대한 美國의 持續的인 介入을 경계하였다. 예를 들면 美國은 中國이 「크메르루지」군에 대한 武器支援을 中斷해 줄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이러한 요구를 中國은 결연히 거절하였다. 中國-크메르 問題에서 美國의 간섭을 排除하려는 中國의 의도는 中國과 함께 地域問題를 協議하려고 노력해왔던 美國에게는 커다란 失望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中國은 北韓을 危機에서 구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北韓을 포용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北韓의 입장을 살리는 代案으로서 韓半島에서 美軍의 지위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되, 美·北韓이 修交로까지는 發展하지 않는 線에서 問題를 解決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볼때 韓·蘇 修交이후, 中國이 北韓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韓·中關係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期待나 혹은 北韓이 蘇聯의 압력에 견디기 어려워 對美 修交의 길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지나치게 단순한 형식논리인 것이다. 동시에 中國이 韓半島의 구조개편을 바라는 美蘇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느냐에 따라 韓·中 關係改善의 폭도 伸縮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韓·中關係와 南·北問題

韓·中交易은 南·北韓問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中·朝關係는 특수한 관계였다. 1956年이래 中·朝兩國은 「兩國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최고 指導層間의 긴밀한 協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協約⁴⁾이 있는이래, 兩國이 직면한 對內外 問題는 물론 北韓의 對南戰略戰術까지도 서로 깊이있게 協議해 가면서 決定해 왔다. 예를 들면 1979年 以前까지만해도 진남포를 출발해 北韓의 工作船이 직접 山東半島쪽 公海로 나아가 中國의 領海를 통해서 韓國의 西海岸으로 浸透해 올 수 있을 정도로 中國이 北韓의 對南工作을 직접 돕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한 때 中國은 山東半島 일대에다 對南工作을 위해 北韓의 工作基地를 提供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1979年이래 소규모로 추진되기 시작한 韓·中交易이 1980~81年 사이에 급격한 發展을 보게 되어, 흑백 TV가 무려 100萬臺 이상이나 中國에 輸出되는 등 一部 企業들은 당시만해도 來往조차 不可能했던 中國을 상대로 과감히 DA, DP베이스의 輸出을 추진하고 있었다. 韓·中交易의 幅이 두터워지면서 韓·中交易은 南·北關係에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1980年 1月 黃華 外交部長의 비밀연설의 이면에는 이와같은 韓·中관계와 中·朝關係의 변화과정이 밀도있게 표출되고 있다. 중국은 마침내 극단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서 점차 중립적인 자세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81年 4月 鄧小平·金日成의 瀋陽會談에서는 이러한 상황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이 회담에서 鄧小平의 입장은 냉정하리만큼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朝鮮問題は 朝鮮自體의 문제이며, 따라서 朝鮮의 同志들이 더 잘 아는 문제이다. 우리는 朝鮮의 의견을 존중한다. 對南問題は 朝鮮의 同志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南·北韓 內部問題에 中國이 介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982年 9月 北京을 방문한 金日成은 점차 확대일로에 있던 韓·中交易에 대해 강력한 抗議을 제기하였다. 中國은 金日成의 항의를 받아들여, 전국의 세관에 「南朝鮮으로부터의 商品輸入을 철저히 規制할것」을 하달하였고, 전국의 항구에 「航海日誌」와 원산지 증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그해 한 해 동안 韓國商品을 운송해온 鮮一通商, 現代商船등 韓國의 선박회사들이 中國稅關에 붙잡혀 상당한 罰金을 물고 풀려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1983年 5月 민항기납치 사건은 韓·中 兩國關係 擴大에 획기적인 轉換點이 되었다. 특히 中國이 이미 年初부터 韓國·루마니아·유고를 포함한 第3世界 國家들과의 貿易關係 확대한다는 방침⁵⁾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兩國의 交易은 민항기 사건이후 급진전을 보게되었다. 1984~85年 사이 南·北對話가 빈번히 열리고 南·北韓 相互訪問이 추진되는 동안 韓·中交易은 더욱 큰 幅으로 伸張되었다.

1985~86年 동안 趙紫陽의 內部市場 活性化 政策의 영향으로 150億달러 이상의 貿易赤字를 나타낼 정도로 輸入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韓·中交易도 점차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中·朝間의 무역과 朝·蘇間의 交易推移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朝·蘇間의 交易이 급진전해 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韓·中交易의 확대에 따른 北韓의 불만이 「朝·蘇關係의 緊密化」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7~88年 사이에도 계속되었다.

이처럼 이와같이 과거 10年동안 韓·中關係의 擴大趨勢가 다른 한편으로는 中·朝關係를 「疏遠」하게 하면서, 朝·蘇關係의 緊密化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韓·朝關係와 中·朝關係가 실제로 이같은 제로·섬·게임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점이 중요하다. 中·朝關係가 疏遠해지고, 冷却되기 때문에 韓·中の 交易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韓·中交易의 증가는 中·朝關係와 南·北關係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처럼 韓·中關係를 지나치게 擴大解釋하는 사람들은, 中·朝關係를 아주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中·朝關係는 아주 특수한 關係에 속한다. 中·朝關係는 여전히 「緊密한 同志的」인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兩國의 指導層은 빈번한 訪問과 協力을 통해서 兩側의 입장을 무리없이 조절해 오고 있고, 韓·中關係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다양한 協調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中國은 北韓의 입장을 대신해서 借款을 도입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轉用하게 하기도 하고, 尖端裝備나 物資의 購買를 돕기도 하며, 때로는 北韓을 대신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國際問題를 仲裁하거나, 전면에 나서서 擁護하거나 支持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中·朝間에 여러가지 協力事業이 있다. 中共黨 對外連絡部는 北韓의 勞動黨 國際部와 對南事業局의 파트너로서 相互訪問을 통한 協調體制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公安部나 人民武裝警察까지도 서로 相互協力關係의 길을 터 놓고 있다.

中國의 意圖는 분명한 데가 있다. 中國은 이처럼 韓國과는 民間베이스에서 貿易·經濟協力を 中心으로 關係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北韓과는 政府次元에서 지금과 같은 政治·軍事·外交 關係를 유지해 나가려는 것이다. 中國의 指導層들은 南·北韓 어느 한쪽에도 지나치게 기울지 않는 「적당한 位置」에서 南·北韓 等距離政策을 펴는 것이 南·北韓 사이에서 安定的인 關係를 設定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IV. 要約과 結論：韓·中關係와 南·北韓 展望

韓·中關係는 韓半島의 南·北을 둘러싸고 있는 4強體制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작은 관계」에 속한다. 韓半島의 南北과, 4強關係를 中·南北韓, 美·南北韓, 美·中·南韓, 美·中·北韓 등과 같이 南北韓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三角關係를 그려 보면 20개의 三角關係가 형성된다. 이것은 南北과 4強과의 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中國은 韓·中關係를 크게 보아 두가지 각기 다른 체제속으로 제한시켜 놓고 있다. 中國은 對韓關係는 中·朝關係라는 측면과 對美·對蘇關係의 연장선상에 놓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韓·中兩國의 關係發展은 中國·北韓關係의 획기적인 변화나, 4強의 對韓關係의 커다란 진전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民間次元에서 經濟協力の 차원을 훨씬 뛰어 넘는다는 것이 不可能한 형편이다.

그러나 中國의 對韓政策이 方向轉換을 하지 않을 수 없는 革命的인 變化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韓·蘇 修交」이며, 韓·蘇의 적극적 修交는 이제까지 南·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勢力均衡을 무너뜨리고, 中·朝로 하여금 對韓關係를 크게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北韓이 에너지, 機械設備, 部品, 機械體系는 물론 武器體系와 軍事支援의 거의 전부를 蘇聯에 依存해 있다는 사실은 朝·蘇間의 의존의 폭이 큰 만큼, 韓·蘇 修交後에 나타날 반사적인 영향도 北韓에게는 과국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韓·中國關係의 발전은 中國이 위기에 몰린 北韓을 과연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전례로 보아 中國은 北韓을 돕고 포용해서, 蘇聯의 압력에 저항하면서, 南·北韓과 4強과의 새로운 정립을 시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脚 註>

1) 中國 指導層의 發言속에서 韓國問題가 舉論된 중요한 資料들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周恩來 韓國情勢에 관한 두편의 報告書(1971. 12, 1973. 3)
- 喬冠華 最近의 世界 情勢變化 및 中國의 對外政策에 관한 講演 (1975. 5. 20)
- 黃 華 中國의 80年代 外交情勢·政策 및 以後의 任務(1980. 1. 25)
- 喬冠華 유엔總會에서의 演說(韓半島 部分)
 - 第27次 유엔總會(1972. 10. 3)
 - 第28次 " (1973. 10. 2)
 - 第29次 " (1974. 10. 2)
 - 第30次 " (1975. 9.26)
- 胡耀邦 獨立自主의 外交政策 堅持(1982. 9. 1)
- 趙紫陽 外交活動에 관하여(1983. 6. 6)
- 吳學謙 유엔總會에서의 演說(1987. 9. 23)

中國의 韓半島問題 專門家들이 國際會議에서 發表한 論文가운데에서 中國의 韓國에 대한 시각이 나타난 대표적인 論文들은 다음과 같다.

- 陶炳蔚 아시아情勢의 여러 側面들(Journal of Northeast Asia Studies, Spring 1984)
- 陶炳蔚 韓半島 情勢觀測(北京리뷰, No.38, 1985. 9. 23)
- 陶炳蔚 中國의 韓半島 政策(1986. 7.19)
- 李昌換 韓半島 및 아시아의 平和를 守護하기 위하여(1986. 11)

韓半島 問題에 관한 中國政府의 立場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人民日報의 社說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 朝鮮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重要 建議(1979. 1.27)
- 朝鮮人民의 榮光스런 記念日을 慶祝한다.(1980. 9. 9)
- 永遠不滅의 中·朝 友誼(1981. 7. 11)
- 金日成主席을 열렬히 歡迎한다.(1982. 9.16)
- 中·朝 友誼思想의 새로운 한 페이지(1984. 7. 9)

2) 그 代表的인 예를 黃華의 「中國의 80年代의 外交情勢政策 및 以後의 任務」(1980. 1. 25)에서 引用해 보면 :

“적지 않은 同志들이 이렇게 하면 朝鮮이 背反한다고 걱정합니다만,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朝鮮은 ‘蘇聯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朝鮮이 만일 蘇聯 一邊倒로 기운다면 一切의 援助는 말도 말아야 하며, 또한 우리도 똑같이 돌아서서 南朝鮮을 支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自身이 도망갈 뒷길을 남겨놓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對備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南朝鮮과 中國의 關係라는 ‘大門’은 현재 명백히 문은 닫혀 있으나 자물쇠는 채우지 않은 그런 狀態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로는 열 수가 없으며, 심지어는 貿易往來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外國商人들이 현재 南朝鮮을 代身해서 中國對外貿易部를 相對로 關係를 갖게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燃料·化工 및 土產品·藥材 輸出에 관한 몇몇 品目の 去來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그 數量은 매우 적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朝鮮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할 수 있는 것은 最大限으로 피해야 합니다. 美國政府를 포함하여 日本政府도

中國의 朝鮮問題에 대한 立場을 아주 잘 理解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문을 닫고있으나 자물쇠는 채우지 않는다’고 하는 政策이며, 그 目的은 朝鮮이 蘇聯 一邊倒로 기울도록 밀어부치지 않는으면서 同時에 그들로 하여금 감히 鬻속셈을 드러내 놓고 蘇聯쪽으로 기울지도 못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3) 「80年代의 外交政策 方向」(1983. 3. 9) 中辯發 20號 文件

4) 이 協約이 公開的인 文書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中·朝間의 빈번한 指導層의 내용과 철저한 相互協力主義의 이면에는 이와같은 協約의 存在 可能性을 인정하게 한다.

5) 中辯發 20號 文件 (1983. 3. 9)

<참고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 陶炳蔚, “아시아情勢의 여러 側面들,” Journal of Northeast Asia Studies, Spring 1984.
- _____, 「中國의 韓半島政策」, 1986. 7. 19
- 李昌煥, 「韓半島 및 아시아의 平和를 保護하기 위하여」, 1986. 11
- 「80年代의 外交政策 方向」, 中辯發 20號 文件, 1983. 3. 9

신문, 잡지 등

- _____, “韓半島 情勢觀測,” 北京週報, No.38, 1985. 9. 23
- 人民日報

< 討議要旨 >

韓國의 對中國 關係改善과 南·北韓 關係의 展望

정종욱 : 中國의 지도층이 韓半島를 보는 시각, 특히 中國의 對韓政策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方法論의 제시는 흥미있는 내용이었다.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의 決定要因은 전체적으로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中國의 對南韓政策은 對北韓政策의 맥락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韓半島라는 전체적 틀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蘇聯이 韓·蘇 頂上會談을 통해 對韓政策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을 마련했는바 蘇聯은 韓半島 內의 두개의 國家를 인정하고 對北韓政策은 對南韓政策과는 독립적으로 추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中國의 對南韓政策의 중요한 決定要因은 아직도 對北韓政策이며, 韓半島를 하나의 틀로 보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또한 東北亞 전체의 지역적 시각, 그리고 中國의 現代化 改革으로 알려져 있는 經濟發展 전략을 비롯한 국가이익과 관련하여 政策이 決定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中國은 北韓에 대해서 南韓政策을 하나의 카드로 쓰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逆의 政策도 구사하는 兩面的 方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中國의 對韓政策은 80년, 88년의 두시기를 고비로 변화해 왔다. 80년 이전에는 中國과 北韓과의 關係는 이빨과 잇몸과의 관계로서 거의 일방적인 對北韓 지지입장을 보였으나 80년 이후부터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 中立의인 자세를 취해 왔으며 88년 이후부터는 對南韓 政策에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天安門事態로 인하여 또다시 소극적인 자세로 움츠러 들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中國

의 對韓政策은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中國의 對韓政策은 世界情勢의 급격한 변화나 南北韓 關係의 극적인 妥結이 전제되지 않는 한 政治的 正常化나 經濟交易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급격한 關係發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발표자의 입장은 많은 토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안석교 : 內的·外的 돌파구가 없는 한 韓·中關係의 획기적 전환은 기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韓·中關係의 改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우선 中國이 國際的인 데탕트 분위기에 얼마나 동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우리의 對中國 關係改善도 이러한 조류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中國이 얼마나 화해무드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것은 여러가지 자료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防衛費 伸張率이라든가, 基本建設部門의 신장율 등의 비교를 본다면 中國은 현재 데탕트 분위기와 補助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對北韓關係에서 본다면 과거에 비해 中國政府가 北韓과의 關係改善에 우선순위를 두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번째는 본인의 판단으로는 中國은 蘇聯에 비해 北韓에 대한 經濟的, 軍事的인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南韓關係의 改善에 있어 北韓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北韓의 의지를 꺾어가면서 對韓接近을 과감하게 시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中國의 經濟改革은 市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유보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직적인 經濟基調가 계속 될 것이다. 또한 台灣과 中國關係의 改善 및 台灣企業의 中國進出이 進行됨에 따라 우리가 中國에 대해 經濟的 支援을 댓가로 外交的 성과를 얻어내려는 의도도 상당히 제한될 것이 틀림없다.

오용석 : 오늘의 주제가 되는 南·北韓關係와 연관시켜서 韓國과 中國의 關係改善問題를 논의할 때 간과되어서 안될 것은 台灣問題라고 생각한다. 中國과 台灣과의 關係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南·北韓 關係와 다른 것이 사실이고 中國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政治 外交的 次元에서 中國이 台灣의 國民黨政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韓國과 國交正常化를 推進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中國이 北韓과의 既存關係를 계속 유지할 것이 틀림없다고 볼때 中國의 韓國과 國交正常化는 곧 한 나라에 두개의 政府를 인정하지 않고 최근까지도 台灣과 國交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國交를 맺지 않는다는 基本外交政策路線에 反한다. 中國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韓·蘇關係正常化에 비해서 韓·中關係의 改善은 훨씬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蘇聯과 中國의 國內政治 및 經濟問題의 相異點을 떠나서도 韓·蘇關係와 韓·中關係를 같은 線上에 놓고 政策을 推進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즉, 우리의 北方政策의 推進에 있어서 政府는 對蘇, 對中 모두 政經連繫를 주장하고 있으나 韓·中關係는 일단 經濟的 關係를 심화시켜 나아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政治的 接近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南北韓이 독자적으로 關係改善을 推進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中國이 韓國과의 關係를 改善하는데 北韓에 대한 負擔을 덜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과 中國이 현재와 같이 革命 1世代에 의해서 지배되는 한, 韓·蘇關係의 發展과 같은 韓·中關係의 극적 전환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와 같은 상황의 長期化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中國이나 北韓을 지배하는 革命 1世代가 모두 高齡이기 때문에 자연적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고, 中國에는 이미 自

由化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北韓 역시 그러한 變化의 바람을 언제까지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이나 北韓의 變化可能性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中國이 政治的으로 비록 社會主義路線을 고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10여년간의 改革과 開放을 통해서 市場經濟로 적지않게 이행하여 對內外的으로 과거와 같은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방향으로 政策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北韓도 中國이나 蘇聯 東유럽과 같이 적어도 經濟的으로만이라도 體制改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한계상황에 와 있다는 점이다. 經濟體制的으로 지금까지 CPE's 즉 「中央計劃經濟」(centrally planned economies)로 불리웠던 社會主義經濟는 이제는 NME's 즉 「新市場化經濟」(newly marketized economies)로 불리어야 할 만큼 변하고 있다. 社會主義國家들의 市場經濟體制로의 이행은 市場經濟의 성격상 私有와 自由競爭 要素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中國이든 北韓이든 앞으로 經濟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市場化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곧 韓·中關係의 改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南北關係 변화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第 3 主題

A. 韓·東歐關係의 進展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鄭 甲 泳
(延世大學校)

B. 東·西獨의 經濟·社會統合과 示唆點

朴 廣 作·吳 勇 錫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東歐關係의 進展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鄭 甲 泳
(延世大學校)



韓·東歐關係의 進展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I. 韓·東歐關係의 變化

II. 東歐改革이 北韓에 미친 影響

III. 東歐改革이 示唆하는 北韓의 變化

IV. 南·北韓關係와 東歐政策

圖 表

參考文獻



1. 韓·東歐關係의 變化

1980년대의 後半부터 시작된 社會主義圈의 改革과 開放은 세계 政治經濟秩序에 커다란 變化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東歐圈에서는 兩獨逸의 경제적 統合이 실현되었고 폴란드와 헝가리등에 非共產政府를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가장 강압적 統治體制를 유지해온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코 政權을 붕괴시키는 혁명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 東歐圈에 서구식 민주제도를 도입하는 전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후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소련의 위성권으로서의 東歐 社會主義는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와 共產主義의 양대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정치질서도 재편성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東歐 社會主義圈의 開放과 改革은 經濟的 측면에서도 많은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東歐가 추진하고 있는 經濟改革의 특징은 가격기구와 私有財產制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市場經濟模型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積極的인 개방체제로 전환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서방세계와의 交易增大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CMEA 체제를 주축으로한 蘇聯중심의 분업구조와 루블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交易構造가 급속히 쇠퇴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東歐圈의 經濟改革과 함께 서구에서는 EC통합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社會主義圈의 開放과 改革은 우리나라의 對北方關係에도 획기적 變化를 가져왔다. 불과 3-4년전까지만 해도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社會主義圈과의 직접 交易이 급속히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나아가 東歐諸國과 완전한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東歐圈과의 급속한 관계진전은 실로 팔목할 만한 變化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0여년 이상 지속되어온 北韓과의 대립은 결국 韓國과 社會主義圈과

의 교역을 不可能하게 하는 상호배타적 이념과 제도의 장벽을 형성하였다. 또한 中國이나 蘇聯과는 달리 東歐圈은 地理的으로 원거리에 있고, 우리와는 社會·文化的 배경이 크게 다르며, 과거부터 축적된 交易의 전통이 거의 없는 社會主義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韓·東歐關係는 최근 급속히 進展되었으며 이것이 곧 우리의 北方關係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주는 성과를 가져 왔다.

이와 같은 韓國과 東歐의 관계진전에는 물론 東歐圈 자체의 體制變革이 가장 決定的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社會主義圈의 서울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와 우리의 積極的인 北方政策의 추진도 初期段階의 關係改善에 큰 影響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東歐와의 關係改善은 東歐諸國과의 外交關係樹立 이외에도 經濟的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 3국을 통한 간접거래만 가능했던 東歐地域에 직접거래는 물론 合作投資와 공공차관 등 다각적인 經濟協力을 활성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동구 貿易은 급속히 증가하여 지난 85년이후 수출은 年평균 38.0%, 수입은 47.5%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表 1〉 P.16참조)

동구와의 무역규모는 아직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의 0.2-0.4%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새로운 社會主義市場의 개척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직접투자 와 여타 經濟協力에서도 아직은 절대규모가 적은 수준이지만 동구권의 開放과 改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그 규모가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東歐市場은 EC와 인접해 있는 地域的 特殊성과 CMEA체제의 붕괴에 따른 東歐의 對西方交易 擴大로 인하여 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韓·東歐關係 개선은 交易相對國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社會主義 市場의 개척이라는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한편 東歐의 改革과 韓·東歐關係 개선은 北韓에도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북한에게 준 가장 큰 충격은 무역보다도 東歐 社會主義의 崩壞가 언젠가 北韓에서도 발생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가져다주었다는 점이다. 東歐事態로 인하여 우리가 政治 經濟關係의 사각지대였던 社會主義圈에 진출한 반면 北韓의 相對的 孤立은 더욱 深化되고 있다. 北韓은 經濟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改革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改革에 수반될 體制不安의 우려로 인하여 體制固守와 開放化 政策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갈등의 結果로 나타날 北韓의 選擇은 앞으로의 南北韓關係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北方政策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南北韓關係의 개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北方政策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韓·東歐關係 진전이 南北韓關係에 미친 影響을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東歐改革이 시사하는 북한의 變化展望을 分析하고 窮極的으로 南北韓關係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東歐改革이 북한에 미친 影響

韓·東歐關係의 改善을 포함한 北方政策의 주요한 목표는 社會主義圈과의 교역기반을 확대하여 北韓의 開放을 유도하고 南·北韓間의 關係를 進展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東歐關係 진전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南·北韓關係의 개선에 어떻게 기여를 하였는가? 특히 中國과 蘇聯등 기타 社會主義圈과 비교하여 東歐改革과 韓·東歐關係가 북한에 미친 파급효과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東歐의 급진적 改革과 韓·東歐關係의 개선은 북한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

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北韓은 특히 루마니아革命에 가장 심각한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는 족벌체제와 폐쇄성 및 강압적 統治, 偶像化 정책등에서 북한과 가장 유사한 體制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北韓이 루마니아와 가장 가까운 盟邦關係을 유지하여 왔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루마니아의 變革이 발발하기 직전에도 연형묵과 김영남등 北韓의 최고위층이 루마니아를 訪問하여 여타 東歐圈의 改革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식 社會主義體制의 固守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장 강압적이던 루마니아가 의외로 쉽게 붕괴된 事態에 대해 北韓이 가장 큰 衝擊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東歐事態로부터 받은 衝擊과 唐惶은 東歐圈에 체류중인 1,700여명의 전유학생을 긴급 소환한 措置에도 잘 나타나 있다. 北韓은 이들을 緊急召還한 후에도 별도관리하여 開放과 改革理念이 국내에 유입되는것을 철저히 遮斷시키고 있다.

이제 韓·東歐關係 진전과 東歐改革이 북한에 미친 波及效果를 분야별로 把握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政治的 影響은 社會主義圈에서의 고립화, 改革에 保守的인 中國과의 密着, 南韓과의 직접대화 거부, 국내의 情報遮斷과 閉鎖強化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措置들은 北韓이 東歐圈의 變化와 關係없이 主體와 自力更生에 입각한 종래의 스탈린식 社會主義體制를 固守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東歐圈에서의 相對的 孤立化를 克服하기 위해 第3世界 非同盟國에 대한 外交를 強化하고 韓國을 제외한 西方世界와의 接觸을 시도하는 政治的 努力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美國 日本 등과 關係改善을 시도하고 있고 臺灣과도 經濟交流를 시도하여 國際的 孤立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韓國과의 實質的 關係를 改善시키려는 努力은 전혀 表面化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西方과의 關係改善을 시도하면서 韓國과는 거리를 維持하는 政策을 採擇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한편 韓·東歐關係의 進展과 東歐改革이 북한의 經濟에 미친 影響은 다음과 같다. 첫째 韓·東歐關係의 改善은 북한의 對東歐 交易을 감소시키는 影響을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北韓이 한국과 修交를 한 東歐圈과 소원한 關係를 갖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일차적 現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CMEA體制가 漸進的으로 붕괴됨과 동시에 함께 이러한 現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의 對東歐圈 交易은 전체 輸出入의 10%미만을 차지하고 있어서 蘇聯과 中國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다. (<表 2> P.17참조) 그러나 東歐圈과의 絶對 貿易規模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東歐로부터 精密機械, 電子製品, 醫藥品, 化學製品 등 尖端技術集約的 製品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對東歐交易 감소는 상당한 波及效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北韓의 東歐交易은 특히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과의 비중이 높았고 개혁주도국인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 등과는 相對的으로 저조한 實績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北韓이 東歐圈과 交易規模를 擴大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東歐圈의 內部改革 推進과 對西方交易 擴大로 對東歐交易이 급속히 냉각되는 趨勢에 있다.

둘째, 韓·東歐關係 改善은 北韓의 貿易決濟方法에 심각한 制限을 가져오는 影響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北韓의 對東歐交易은 광산물과 시멘트 등을 주로 輸出하고, 東歐로부터 技術集約的 製品과 교환하는 求償貿易을 유지하여 왔었다. 그러나 CMEA體制가 漸進的으로 와해됨에 따라 이들 東歐圈과의 求償貿易과 루블화에 의한 交易은 급속히 減縮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貿易相對國을 多變化하거나 兌換性 通貨(hard currency)

에 의한 貿易을 확대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모두 北韓에게는 現實的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兌換性通貨의 確保가 北韓의 經濟水準으로서 용이하지 않으며, 求償貿易을 바탕으로 한 수입선의 多變化도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中國을 제외한 全社會主義圈이 모두 積極的인 開放과 改革을 推進하고 있어서 北韓의 선택은 더욱 제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東歐事態는 北韓의 政治 經濟的 孤立을 더욱 증대시키고, 北韓의 對外去來를 제약하는 效果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韓·東歐關係의 進展은 北韓의 開放에 直接的 影響을 주고 南北韓關係에 실질적 變化를 초래하는 影響을 미치지 않고 있다. 물론 長期的 觀點에서 韓·東歐의 關係改善이 社會主義圈과의 交易擴大를 통해 南·北韓關係를 進展시키는 肯定的 要因으로 작용할 可能性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在까지 加時적 效果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北韓 内部의 政治的 要因에 의한 것으로서 體制不安에 대한 우려가 開放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최근 韓·東歐關係改善이 오히려 南·北韓關係를 경직시키는 影響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즉, 그동안 우리의 對東歐政策이 北韓과의 對立과 競爭을 바탕으로 推進되었기 때문에 北韓의 孤立化를 급속히 심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 북한은 體制固守와 南北對決이라는 종전의 立場을 固守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곧 南·北韓關係의 硬直化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韓·東歐關係 改善은 短期的으로 南·北韓關係를 개선시키는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結果는 우리의 對東歐政策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北韓이 갖고 있는 體制的 硬直性和 閉鎖性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東歐改革이 示唆하는 北韓의 變化

東歐改革과 韓·東歐關係의 進展에 따라 北韓이 現在 직면하고 있는 政策的 딜레마는 經濟的 측면의 開放 必然性和 政治的 측면에 閉鎖 必要性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한때 東歐諸國이 모두 經驗했던 갈등으로서 최근 東歐의 改革과 開放은 北韓의 向後 變化에 대한 많은 示唆를 제공해 주고 있다. 北韓은 물론 東歐 社會主義와는 다른 배경과 構造的 特長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經濟의 중앙 통제형 운용은 결국 傳統的 蘇聯體制에서 연유된 것이므로 東歐經濟와 유사한 特徵을 갖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社會主義經濟는 一般的으로 일정한 유형의 變化過程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東歐의 여러나라는 다양하게 變形된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北韓의 變化類型을 研究하는데 귀중한 實證的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北韓經濟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開放과 改革의 必要性을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開放과 改革이 必然的으로 요구되는 經濟的 요인은 北韓經濟의 構造的 特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 北韓은 自力更生과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自立的 民族經濟建設을 목표로 가장 閉鎖的인 社會主義의 體制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여타 社會主義에서와 마찬가지로 北韓의 中央統制型 經濟는 經濟成長의 鈍化와 生活水準의 衰退 및 生産性的 低下 등 많은 構造的 問題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現在 3차 7개년 經濟計劃(1987-93)의 주요 目標가 되고 있는 技術水準의 向上과 國民生活의 改善을 위해서는 外國의 資本과 技術이 絶對的으로 필요한 構造的 問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北韓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合營法은 體制의 硬直性으로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效率的인 合營을 유지하거나 輸出促進을 위한 技術導入이 불가피하

며, 이것은 經濟開放이 선행되어야만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東歐圈의 改革은 社會主義圈內 求償貿易을 감축시키게 된다는 點이다. 이미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최근 CMEA體制의 붕괴에 따라 物物交換에 의한 貿易이나 루블貨를 기준으로한 決濟方式의 貿易은 급격히 衰退하고 있다. 現在까지 北韓의 求償貿易은 전체 무역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對象國인 蘇聯과 中國마저도 求償貿易을 減縮시키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求償貿易을 兌換性通貨에 의한 거래로 轉換하거나 여타 開途國 또는 西方世界에서 求償貿易의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곧 開放과 硬貨確保을 의미하며 어떤 형태의 開放 措置가 없이는 不可能한 일이다.

실제 이러한 硬化 流動性的의 제약이 北韓에게 現實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社會主義圈의 市場經濟化가 가속화되는 앞으로 2-3년 동안 社會主義圈에서의 硬化流動性的의 制約은 더욱 增大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北韓의 輸入은 自給自足的 經濟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經濟發展에 가장 艱요한 最少輸入必要量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社會主義圈에서의 相對的 孤立化이다. 韓·東歐關係 進展以後 北韓의 孤立化 現象은 現實化되었으며, 앞으로 기대되는 韓·蘇關係改善과 여타 社會主義圈 改革 역시 北韓의 孤立化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北韓은 최근 제3세계는 물론 西方國家와도 關係改善을 시도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국 北韓이 體制 改革과 開放을 실현시키지 않고서는 國際的 孤立을 克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밖에 南韓과의 競爭에서의 優位確保와 國防產業의 育成및 輸出競爭力의 確保, 技術水準의 向上, 技術人力的 確保 등 많은 經濟的 요인이 北韓의 開放을 不可避하게 하는 必然的 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다. 北韓은 최근 開放의 必要性을 最少化하기 위하여 資源節約과 生産性增大를 推進하고 經濟的 自立度

를 提高시키는 對內的 努力을 強化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內的 努力은 短期的으로 成果가 있다해도 經濟의 構造的 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北韓의 開放과 改革을 저해하는 요인은 주로 政治的 觀點에서 파악될 수 있다. 北韓社會의 開放은 必然的으로 體制不安을 야기할 것이며 이러한 예는 이미 東歐圈과 中國에서 實證的으로 證明되었다. 따라서 政治的 觀點에서 어떤 極端的인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 한, 北韓의 現指導層이 急進的인 經濟改革을 시도할 可能性은 극히 희박하다.

결국 北韓의 變化는 이러한 開放促進 요인과 沮害要因이 相互作用하여 決定될 것이다. 즉, 政治와 經濟의 相反되는 요인이 結合되어 開放의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 分明하다. 지금까지의 北韓의 意思決定過程에서 볼 때는 經濟的 요인보다는 政治的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즉, 經濟沈滯를 감수하면서도 體制의 安定을 더욱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정책적 딜레마와 東歐에서 提示되고 있는 社會主義 改革過程의 特徵을 綜合하면 北韓의 短期的 變化展望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政治的 不安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硬貨確保에 기여할 수 있는 最小限의 開放政策을 推進할 可能性이 높다. 當分間 經濟 沈滯가 계속된다 해도 體制의 安定에 最優先을 두며, 國民의 不滿은 철저한 情報遮斷으로 統制하며, 自力更生에 의한 經濟運用을 지속하면서 最小限의 開放만을 허용할 可能性이 높은 것이다.

이와같은 改革模型은 실제 60년대 後半 東歐 改革國에서 시도되었던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헝가리가 68년에 採擇했던 신경제기구(NEM)도 事實上 政治改革을 排除한 經濟改革이라는 意味에서 採擇되었다. 유고슬라비아의 自主管理制度도 政治改革이 排除된 企業自律化 시도였다. 그러나 東歐에서 이미 實驗된바와 같이 體制의 構造的 矛盾을 방치한 채 部分的

인 改革을 시도하는 것은 長期的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體制의 安定을 위하여 國民厚生과 經濟를 희생하면서도 消極的인 開放政策을 推進할 可能性이 높다. 예를 들어 合營法을 보완하고 情報遮斷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開放을 許容하는 政策을 취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 形態의 變化可能性은 現在의 東歐모델과 같이 北韓이 政治 經濟의 改革을 동시에 推進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과 같은 急進的 改革은 現在까지의 北韓指導層의 行태로 볼 때 거의 實現될 可能性이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한 急進的 改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政治圈의 突發的 變革이나 經濟가 더욱 惡化되어 破局狀態에 도달하는 위기가 직면해야만 할 것이다.

세계 形態는 社會主義圈의 變化는 政治的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루마니아에서와 같은 突發的인 變革을 假定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論理的 근거로 豫測될 수 없는 可能性이지만 그 蓋然性을 전혀 排除할 수는 없다. 최근 東歐의 改革도 사실은 어떤 論理的 豫測보다도 예기치 않은 政治的 變化가 導火線이 되었던 것이다. 國內에서의 情報遮斷이 아무리 完璧하다해도 北韓에서 티미소아라 와 같은 事件이 發生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政治體制的 突發的 變化는 전혀 豫測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改革과 開放이 늦어질수록 經濟沈滯는 가속적으로 惡化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단기의 部分的인 開放은 長期的 觀點에서는 결국 全面的인 改革이 可能性을 더욱 높여주는 要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여러 改革 模型중에서 결국 北韓은 短期的으로 體制不安을 야기하지 않는 範圍에서 消極的 開放과 改革을 推進할 可能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政策은 結局 60년대 東歐改革에서와 같이 큰 成果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長期的 改革의 必要性을 더욱 增大시키는 方向으로 進展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최근 東歐와 社會主義圈의 改革을 自體的으로 評價하고 政治 經濟의 相衝된 요인을 감안하여 體制의 安定을 유지할 수 있는 제한적인 改革模型을 選擇할 可能性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急進的 改革의 可能性은 排除할 수 없지만 現在로서는 稀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北韓의 選擇은 앞으로 中國이 施行할 開放과 改革政策에 상당한 影響을 받게 될 것이다.

4. 南·北韓 關係와 東歐政策

南北韓 關係의 實質的 改善을 좌우하는 관건은 北韓의 경직된 態度變化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의 態度는 政治·經濟的 요인은 물론 國際關係 등 많은 변수가 相互作用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韓·東歐 關係進展은 東歐가 北韓에 대해 갖고있는 影響力이 相對的으로 작기 때문에 蘇聯과 中國과의 關係變化보다는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韓·東歐關係 改善은 韓國이 蘇聯및 中國과 關係改善을 앞당기는 觸媒役割을 하고 있으므로 결코 波及效果를 過小評價할 수는 없다. 現在 直接的이고 短期的 效果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長期的으로는 肯定的 요인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높다.

韓·東歐 協力을 南北韓 關係의 進展에 直接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政策的 努力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韓·東歐 協力을 통해 社會主義 經濟體制에 대한 情報과 交易의 經驗을 축적케 함으로써 향후 北韓의 開放에 대비한 基盤을 擴充하는데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東歐와의 交易擴大에 따라 必然的으로 隨伴되고 있는 社會主義圈과의 貿易의 擴大, 社會主義 企業의 인수, 合作投資, 東歐市場의 構造的 特性에 관한 우리의 經驗은 곧 北韓과의 交易에서도 응용될 수 있는 基盤擴充에 해당된다. 지난 40여년간 社會主義圈에 대한 情報가 완전히 遮斷되어 왔던 우리의 現實에서는 이와 같

은 情報의 蓄積도 중요한 課題가 되어왔던 것이다.

둘째, 東歐諸國의 다양한 改革模型과 開放패턴을 研究하여 向後 北韓의 開放展望을 豫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政策資料로서 活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적된 대로 東歐諸國은 다양한 社會主義의 經濟의 發展過程과 改革模型을 提供해주고 있다. 특히 60년대 以後의 헝가리, 폴란드, 체코, 유고슬라비아 및 최근의 루마니아의 發展過程과 經濟改革模型은 東歐圈에서 이미 失敗한 것이지만 體制의 固守를 우선으로 하는 北韓에게는 다시 變形된 모습으로 選擇되어질 可能性이 있다. 또한 北韓은 東歐 社會主義보다는 한단계 늦은 發展段階를 보이고 있어서 더욱 示唆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研究은 北韓의 向後 變化 把握에 資料를 提供해준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社會主義 體制의 專門家도 많이 육성하여 北韓의 開放과 統一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韓·東歐 協力은 큰 貢獻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보다 더 直接的인 南·北韓關係의 進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東歐 政策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東歐에서의 合作投資事業에 北韓을 象徴적으로 참여시키거나, 國際間 콘소시엄의 結成에 同伴參與, 北韓을 개입시키는 3角貿易 등이 南·北韓 關係를 改善시킬 수 있는 積極的 對策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業은 直接 交易보다는 可能性이 높지만 결국 北韓의 態度變化가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東歐圈이 餘他地域보다 이러한 事業推進에서 반드시 比較優位를 반드시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韓·東歐 協力事業에 北韓의 直接的 參與를 유도하는 經濟政策은 制約이 많고 北韓의 態度 變化가 없는한 實現可能性이 희박하다고 본다.

오히려 南·北韓關係의 實質的 改善을 위한 努力은 東歐보다 影響力이 큰 中國과 蘇聯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效率的일 것이다. 東歐로부터는 南

北韓 關係의 改善에 間接的으로 기여할 수 있는 基盤擴充에 注力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對東歐圈進出은 南·北韓에 대한 기여여부에 關係없이 潛在力이 큰 새로운 市場의 開拓으로서 큰 意味를 갖고 있다. 東歐의 改革이 當初 우려와는 달리 安定的으로 推進되고 있고, 이제 從前體制로 회귀할 수 없는 水準으로 進展되고 있는 것을 考慮하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한편 東歐와의 關係 正常化過程에서 立證된 가장 중요한 結論의 하나는 社會主義圈의 協力增大를 위한 捷徑은 우리의 持續的인 經濟發展과 國際流動性的 確保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東西獨의 關係에서도 證明되었고 모든 社會主義圈에 예외없이 適用되고 있는 現象이다. 따라서 北韓과의 關係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經濟力과 國際流動性的 供與能力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表 1> 韓·東歐間 貿易規模의 推移

(單位：백만\$)

	1985	1986	1987	1988	1989	년평균 증가율(%)
<輸出>						
東 歐	107.8 (0.4)	67.5 (0.2)	102.3 (0.2)	125.6 (0.2)	270.3 (0.4)	38.0
中 國	682.8 (2.6)	667.7 (2.0)	813.2 (1.7)	1,700.2 (2.8)	1,438.0 (2.3)	28.3
蘇 聯	59.7 (0.2)	49.9 (0.1)	67.2 (0.1)	111.6 (0.2)	208.0 (0.3)	42.7
社會主義圈	850.3 (3.2)	785.1 (2.3)	982.7 (2.0)	1,937.4 (3.2)	1,916.3 (3.0)	28.4
輸出總計	26,572 (100.0)	34,135 (100.0)	46,795 (100.0)	60,544 (100.0)	61,816 (100.0)	24.3
<輸入>						
東 歐	67.5 (0.3)	19.6 (0.1)	46.2 (0.1)	89.3 (0.2)	117.8 (0.2)	47.5
中 國	478.4 (1.8)	620.7 (2.1)	865.9 (2.2)	1,386.7 (2.9)	1,705.0 (3.0)	38.1
蘇 聯	42.1 (0.2)	67.8 (0.2)	133.1 (0.3)	178.3 (0.4)	392.0 (0.7)	77.8
社會主義圈	588.0 (2.3)	708.1 (2.4)	1,045.2 (2.6)	1,654.3 (3.5)	2,214.8 (3.9)	40.0
輸入總計	26,727 (100.0)	29,504 (100.0)	38,711 (100.0)	48,656 (100.0)	56,790 (100.0)	21.0

資料：상공부 “對北方 經濟交流現況”1990.

<表 2> 北韓의 圈域別 貿易構造

	1982	1983	1984	1985	1986
<輸出>					
東 歐	116.1 (9.2)	113.1 (10.1)	126.3 (10.5)	149.0 (12.7)	132.7 (9.8)
中 國	276.6 (22.0)	231.1 (20.7)	247.7 (20.6)	222.5 (19.0)	255.1 (18.8)
蘇 聯	451.1 (35.8)	396.5 (33.1)	423.9 (35.3)	423.3 (36.1)	583.6 (43.0)
開途國	132.9 (10.6)	121.0 (10.8)	126.2 (10.5)	147.6 (12.6)	149.6 (11.0)
OECD	281.8 (22.4)	255.2 (22.8)	278.3 (23.1)	229.2 (19.6)	235.9 (17.4)
合計(백만 \$)	1,258.5	1,116.9	1,202.4	1,171.6	1,356.9
(%)	(100.0)	(100.0)	(100.0)	(100.0)	(100.0)
<輸入>					
東 歐	128.7 (8.2)	120.2 (8.4)	130.8 (9.4)	163.6 (9.2)	135.7 (6.5)
中 國	309.5 (19.6)	300.7 (20.9)	248.8 (17.8)	262.9 (14.9)	280.9 (13.4)
蘇 聯	479.4 (30.4)	387.4 (26.9)	487.2 (34.9)	824.5 (46.6)	1,186.5 (56.7)
開途國	153.8 (9.8)	121.7 (8.5)	146.0 (10.4)	144.2 (8.1)	158.1 (7.6)
OECD	505.3 (32.0)	507.6 (35.3)	385.1 (27.5)	375.1 (21.2)	331.1 (15.8)
合計(백만 \$)	1,576.7	1,473.6	1,397.9	1,770.3	2,092.3
(%)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7, 1979, 1987.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1988)에서 인용하여 재작성)

< 參考文獻 >

- 金達中·成百南·鄭甲泳(共著), 「東歐政治·經濟의 比較分析」, 産業研究院, 1989.
- 鄭甲泳, “東歐經濟의 潛在規模 推定,” 「韓東歐 經濟協力 方案」, 延世大學 校 東西問題研究院 共產圈 研究論叢, 近刊.
- 大韓商工會議所, 「북한경제의 실상,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 및 대응방안」, 1990.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hina, North Korea: Country Profile, 1989-90
- Jankovic, Radovan, “Structural Problems of East-West Economic Relations,” Eastern European Economics, Winter 1986-87.
- Jeong, Kap-You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ocialist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Korean-German Conference, 1989.
- Jeong, Kap-You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East Asia and Eastern Europe,”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Korea-Hungary Round Table Conference, 1990.

東·西獨의 經濟·社會統合과 示唆點

朴 廣 作·吳 勇 錫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東·西獨의 經濟·社會統合과 示唆點

I. 戰後 東·西獨關係의 展開過程

1. 內獨關係의 發展背景과 要因
2. 東西獨 經濟交流의 推移

II. 最近 統合論議의 急進展과 그 背景

1. 東獨의 體制的 脆弱性
2. 고르바초프 改革政策의 波及
3. 經濟統合에로의 進展背景

III. 經濟·社會統合을 위한 分野別 課題와 對應政策

1. 通貨單一化(通貨同盟)
2. 東獨 社會主義體制的 市場經濟體制로의 改編
3. 西獨의 東獨支援
4. 東獨地域의 不動產所有權 問題
5. 東獨產業構造上的 改編

IV. 東西獨 統合의 展望과 經濟的 效果와 獨逸統一의 展望

1. 東西獨 經濟·社會統合의 經濟的 效果
2. 獨逸 統一의 展望

V. 東西獨 統合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1. 南北韓 交流協力 方向의 摸索
2. 長期的인 南北經濟共同體 實現에 對應
3. 東西獨과 南北韓의 差異點 및 우리의 對應

附 表：東西獨의 主要經濟指標 比較

參考文獻



I. 戰後 東西獨 關係의 展開過程

1. 內獨關係의 發展背景과 要因

(1) 西獨의 「內獨交易」政策

2次大戰 以後 兩獨間에는 分斷과 接近이라는 두 명제를 놓고 부단한 論議가 계속되어 왔으며, 西獨과 東獨關係의 總體라고 할 수 있는 內獨關係의 정의에도 많은 理論과 變化가 거듭되어 왔다.

西獨의 視角에서 본 內獨關係는 特殊關係로서 東獨은 「外國」으로서 把握되지 않는다. 西獨政府는 內獨關係를 「獨逸政策」의 一部分으로 理解해 왔으며, 「獨逸政策」이 追求하는 目標는 우선 유럽에서의 平和狀態를 確保하면서, 平和속에서 獨逸民族이 스스로 民族統一을 獲得하는데 있었다. 終戰後 처음부터 西獨은 統一政策의 基本概念인 「獨逸政策(deutschlandpolitik)」의 戰略的手段으로서 占領地域間 交易(內獨交易) 政策(interzonenhandelspolitik)을 採擇하였다.

이에 의한 內獨交易은 실제로 1950년대 부터 分斷된 東·西獨間의 마지막 連結고리 중의 하나로서 東獨住民의 열악한 物資供給을 改善하는데 도움을 주고 分裂된 民族成員間의 접촉을 維持하는데 이바지하였다.

西獨은 冷戰期間 동안에도 東西獨 交易이 共產國家에 대한 西方의 封鎖政策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同盟國들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內獨交易을 인내심을 갖고 持續的으로 推進해 왔다. 이에 따라 1960년대에 와서 베를린協定の 廢止로 東獨이 經濟的으로 孤立되어 困難에 빠졌을 때에도 西獨은 아주 制限的인 範圍內에서만 東獨에 대해 經濟的인 壓力을

加하였던 것이다. 1961년 1월에 베를린 출입통로가 妨害받지 않는 通路 確保와 內獨交易間의 連繫가 取消留保約款(베를린 交通이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되면 特定商品의 供給에 대한 商品運送許可證을 언제든지 取消할 수 있다는 約款)에 의해 다시 回復되었던 것이다. 그 以後 東獨은 恣意的으로 베를린 通路의 交通을 여러번 妨害하였으나 西獨政府는 이 留保約款을 사실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西獨은 內獨交易 關係에서 西베를린을 西獨에 歸屬시킴으로써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려 하였다. 이는 內獨交易이 베를린으로의 自由通路의 確保에 連繫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內獨交易은 經濟的 지렛대로서 政治的 機能을 담당해 왔으며 西獨의 經濟的 實利와는 別關係가 없이 獨逸統一을 위한 西獨의 政治的 動機에서 推進되었으며, 內獨交易은 東西獨關係를 冷戰體制의 敵對關係에서 共存의 이웃關係를 거쳐 兩國을 協力的 關係로 變化시키는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2) 東獨의 對西獨 經濟協力的 必要性

한편 東獨은 內獨關係를 「國家間的 關係」로서 把握했던 것이 西獨의 視角과의 差異點이었다. 東獨側의 입장에서는 內獨交易을 통한 兩獨關係의 接近은 政治的 要因보다는 經濟的 필요성으로 인해 추진 되어온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差異點이었다. 實際로 內獨交易은 50년대 부터 점차로 두개의 獨逸國家間的 政治的 相異點을 緩和하는 手段으로 機能해 왔던 것이다.

특히 일시 中斷狀態에서 1962년에 再開된 東西獨 交易의 背景에는

交易中斷 以後 蘇聯으로 부터 供給받은 物資가 東獨産業의 필요성에 副應하지 못했던 점과 많은 工業生産品을 西獨으로 부터 供給받는 것이 東獨의 자체 生産의 경우보다 훨씬 有利하였던 점이 根本原因이었다.

東獨은 內獨交易을 沮害하는 西獨의 規制措置에 대하여 민감한 反應을 보였는데, 예로서 특히 ①西方側의 封鎖政策 ②輸出搬入禁止 品目制度 ③輸出入의 制限 ④輸出入中央公募制와 許可制 등에 反對하였다. 東獨當局은 1年基準이 아닌 多年間의 協約과 搬出入超過에 대한 無利子 貿易信用制度인 SWING 限度額의 擴大 및 下位計定の 合併整理 등을 要求 하였으며 西獨側은 이 要求事項들을 거의 모두 受諾하였다.

(3) 東獨經濟의 特殊性和 國際政治 霧圍氣의 造成

東西獨 關係의 發展을 가져온 主要背景은 東獨의 經濟的 特殊性和 國際政治 霧圍氣가 이에 유리하도록 造成된 점이다. 1945년 8월 「포츠담會談」에서 聯合國은 占領된 獨逸地域을 原則적으로 單一經濟圈으로 取扱할 것에 合意하였다. 이러한 合意의 根底에는 蘇聯 占領地域인 東獨地域이 賦存資源, 市場規模 및 産業構造上 經濟的 自立도가 매우 낮았다는 이유가 깔려있었다. 占領地域間의 合法的 交易을 許容한 1947년의 「민덴協定」(Mindener Abkommen)과 1948년 8월의 「제섭·말리크協定」(Jessup-Malik Agreement) 및 이를 制度的으로 補完한 「프랑크푸르트協定」(Frankfurter Abkommen)은 그와 같은 背景에서 나왔던 것이다.

「프랑크푸르트協定」은 限時的인 것이었는데 이를 代替하여 1951년 9월 20일에 締結된 「베를린協定」은 東西獨 單一市場 原則에 입각한 長期的 內獨交易과 經濟協力を 規定하는 한편 內獨交易을 통한 再統一의 의

지를 밝히는데 까지 發展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美·蘇間의 緊張이 緩和됨에 따라 東·西獨間의 交易과 經濟協力에 대한 制約이 크게 減少하게 되었고 西獨은 周邊 國家들로부터 유럽의 平和定着을 위하여 東獨과의 交易增大 壓力을 받기까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國際的 霧圍氣 속에서 1972년 東·西獨은 兩獨關係의 正常化를 規定한 「基本條約」(grundlagenvertrag)을 締結하는 단계에 까지 이른 것이다.

(4) 東西獨間의 「基本條約」

1973年 6月 발효된 「基本條約」은 ①常駐代表部 交換, ②第三國의 兩獨共同承認 認定, ③兩獨의 第三國 共同承認, ④兩獨의 유엔 同時加入, ⑤兩獨의 直交易과 교류의 合意, ⑥相互不可侵 등을 規定하고 있다.

基本條約을 통해 東·西獨間의 交流와 協力關係가 樹立된 分野는 ①內獨貿易去來, 非商業的인 物品과 移轉去來, 郵便, 電信·電話 分野에서의 協力, ②交通 및 旅行등에 있어서 協議와 協力, ③境界線 確定, 法制(法律救濟, 行政的 協助, 行政上的 접촉, 民間의 財產上的 問題), ④文化·科學技術, 敎會, 靑少年, 스포츠 등에서 廣範圍한 交流와 協力 增進, ⑤保健衛生과 環境保護 分野에서의 協力과 獸醫學分野에서의 協約 ⑥言論·情報部門의 協力과 交流 등 事實상 社會의 모든 分野이다.

「基本條約」의 意義는 兩獨이 追求하는 目標가 各自 相異할지라도 兩獨 國家는 서로 상처되는 爭点部分을 제외시킨 가운데 共同의 利益이 存在한다고 생각되는 領域에서 條約의 土臺를 構築해 왔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基本조약 第 7條는 “基本條約의 土臺위에 그리고 雙方의

利益을 위해 經濟分野에서의 協力を 發展, 促進 시키기 위해” 協約을 締結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基本條約은 交通條約과 기타 後續條約 및 協約과 함께 兩獨 國家間의 모든 領域에서의 協力を 위한 土臺를 이루고 있다.

基本條約과 그외의 制度的 裝置 및 手段은 國家領域 밖에서 歷史적으로 形成되어 온 既存의 關係를 促進, 確保하고 또 단절된 關係는 다시 連結시키는 土臺가 되었다. 그 斷絶된 連結고리의 복원은 東·西獨의 利害關係가 서로 일치하였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東獨(DDR)의 利害關係는 東獨體制의 政治的, 經濟的 安定을 促進하고 確保하는데 있었으며 東獨政權의 正統성 결핍에 대한 報償과 國際的인 위상 고양 및 입지의 上昇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이에 반해서 西獨의 利害關係는 協力方式(modus vivendi)을 찾으면서 우호적인 이웃關係를 정립하는 가운데, 西베를린의 地位와 活力을 強化하고 旅行可能性을 擴大해가면서 東獨에서의 生存條件을 改善하는데 있었다.

2. 東·西獨 經濟交流의 推移

(1) 內獨交易의 特徵

內獨交易은 西獨에 의해 特別交易關係로서 유지되어 왔는데, 그 特徵은 ①相互性의 原則, ②西獨側의 交易窓口로서 工商信託管理所(treuhandstelle für industrie und handel)를 통한 內獨交易業務의 推進, ③關稅 및 農業賦課金의 免除, ④清算交易등에 있다.

工商信託管理所는 西獨의 聯邦政府 및 西베를린 州政府로부터 東·西獨交易과 關聯된 모든 問題에 대하여 東獨側의 該當部處와 계속하여 접촉을 유지하고 協商을 推進할 것을 委任받은 機關이다. 이 機關의 法的地位는 西獨의 國家機關이 아니고 民間團體인 獨逸商工會議所의 한 附屬機關이며 西베를린에 設置되어 있다.

西獨政府는 1951년 GATT의 Torquay議定書에 대한 追加補完議定書에서 東西獨交易의 內國的 성격을 인정 받았다는 사실은 東獨問題와 關聯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獨逸을 原產地로 하는 財貨를 對象으로 이루어지는 內獨貿易은 어떠한 무역정책상의 規制도 받지 않게 되었다. 또한 1957年 3月 EEC의 창설을 위한 로마條約의 체결에 있어서도 條約議定書에서 內獨貿易 및 이와 關連된 問題에 關해 西獨政府는 EEC에 參與할 餘他 國家들로부터 東獨에 대한 關稅賦課의 免除를 確인 받았다. 그 이후 東獨은 東·西獨交易에 關한 한 事實上 EEC의 域內市場에 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西獨은 東獨으로부터의 工產品搬入에 대해 어떤 關稅도 賦課하지않고 農業生産品에 대해서도 賦課金이 徵收되지 않고 있다.

1966년에 와서 基民·基社黨과 社民黨이 合作한 大聯政下의 西獨政府는 東獨의 要求와 西獨經濟의 要請에 副應하여 內獨交易을 더욱 政略的 계산에서 發生할 수 있는 장애요소로부터 遮斷시켰다. 이에 따라 서독 정부는 1967년 3월 長期性 投資財供給에 대한 政府保證을 內獨交易에 編入시켜 內獨交易의 範圍를 더욱 擴大시켰다. 1967년 5월에는 產業設備金融公社(Gesellschaft zur Finanzierung von Industrie anlagen)를 設立하여 이를 통해 東獨으로의 施設財 供給 등을 中期信用을 통해 金融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取消留保條項을 撤廢하고, 部門別로 細

分化되었던 SWING 金額을 總 SWING 概念으로 包括하여 擴大改編하였다.

東·西獨交易의 원활한 推進을 위해 그 동안 수많은 協力方案이 實現되었는바 그 중에서 特記할 만 한것은 1969년 1월 東獨으로의 搬出에 대한 個別的 許可義務가 일반적인 包括的 許可制度로 代替된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東獨으로의 搬出品에 대한 商品送狀은 더이상 申請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단지 聯邦工産經濟廳(bundesamt fur gewerbliche wirtschaft)에 統計 目的上 搬出申告만하게 되어있다.

(2) 東西獨交易의 內容

交易緩和 조치가 자리잡은 1968년 이후 內獨交易은 급속한 伸張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즉, 東西獨交易은 西獨의 對外去來額의 1.6%(1982基準) (1950년東西獨 交易 比率은 3.8%)에 달했다. 東獨의 對西獨交易量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데 東獨의 內獨交易이 對外交易에 차지하는 比重은 1982년 基準으로 8.6% (1950년에는 16%)에 달하고 있다. 東獨에 있어서 西獨은 蘇聯 다음으로 가장 比重이 큰 交易相對國인 것이다. 東獨에 있어서 西獨과의 交易量은 모든 西方國家와의 商品交易量을 합계한 것을 上廻(1982년 基準)하고 있다.

內獨交易 構造는 東·西獨經濟의 高度화된 發展水準이나 對外貿易構造와는 전혀 一致되지 않는 貿易構造上的 脆弱點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즉, 東西獨間의 交易에 있어서 基礎物資産業部門과 生産財産業部門의 生産品의 比率 (化工製品, 鐵鋼, 金屬, 石油化學製品 등)이 50% 이상을 占有하고 있는 것이다.

(3) 東·西獨間의 非商品交易 및 西獨의 對東獨援助

東·西獨間의 非商品交易과 거의 일방적으로 西獨으로부터 東獨에로의 西獨 D-Mark貨의 移轉은 매년 큰 規模로 이루어지고 있다.

西獨側이 東獨에 支拂하는 것은 西獨 聯邦豫算과 기타 公共基金에서 支拂되는 것과 그 이외의 源천에서 支拂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西獨의 聯邦政府豫算에서 支拂되는 東獨領土內의 道路使用科등의 일괄적인 支拂金總額은 交通通行量이 東西獨關係의 正常化 以後 급증함에 따라 매년 增加돼 왔다. 즉, 이 支拂金總額은 1972년에 年間 2억 3,490만 DM에 달했으나 1976年에서 1989年까지의 기간에는 年間 4億 DM으로 증가했고 1980年에서 1989年까지의 기간에는 年間 5억 2,500만 DM에 달하는 막대한 金額이었다.

西獨側은 1972년 5월의 東西獨交通協定에 따라 道路使用者稅의 명목으로 매년 5,000만 DM을 東獨側에 支拂하고 있다. 또한 西獨은 西獨地域에서 東獨內에 있는 Berlin에 이르는 Berlin 出入交通道路의 改善을 위한 投資를 支援하기 위해 東獨側에 매년 1億 DM미만의 援助를 제공하였다.

西獨의 東獨에 대한 支援(1971~1988)
 (單位：百萬 DM 혹은 VE(清算單位))

	1975- 1976	1976-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 聯邦豫算에서의 支拂 總額(百萬 DM)	1,770	3,425	1,046	1,002	744	711	613	670	648	618	
構成：交通 通行料 1)	940	2,175	575	575	575	575	575	575	525	525	
베를린 交通通路에의 投資費用 參加 2)		1,118	455	410	158	118	20	77	50	25	
비자료, 入國許可料 償還金 및 租稅均等 負擔金 償還	230	131	17	17	11	18	18	18.3	18.4	18.4	
2. 여타 公共機關豫算에서의 支拂 總額 (百萬 VE) 3)	410	429	96	76	240	190	223	237	151	272	
構成：베를린州와 協約에 의한 東獨의 用役提供에 대한 支拂 4) 5)	185	365	94	98	101	111	98	143	165	158	
聯邦遞信部와 聯邦鐵道廳 의 支拂 6) 7)	225	64	2	--22	139	79	125	94	--14	114	
3. 未償還 비자료와 道路使用料에 대한 民間의 支拂(百萬 DM)	180	342	35	35	37	37	38	39	41	42	
1~3까지의 합계	1,760	4,196	1,177	1,113	1,021	938	874	946	840	932	

註 :

- 1) 1972~1975 : 年間 2억 3,500백만 DM, 1976~1979 : 年間 4억 DM
1980~1986 : 道路使用料를 포함하여 年間 5억 7500만 DM
1972년과 1988년에는 年間 5억 2,500만 DM
- 2) 베를린水運을 포함, 또한 1984년 부터 1986년까지 바이에른-튀링겐의 境界線을 이루는 로데江 지역내에 廢水處理投資 프로젝트에 4백 50만 DM을 支拂.
- 3) 東獨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1)과 2)와는 반대로 이 金額은 단지 內獨交易에 대해서만 계산될 수 있다. 1 VE는 1 DM의 價値와 相應함.
- 4) 특히 쓰레기 및 廢水除去 : 1972년에는 領土交換에 의한 3,500만 VE 規模의 價値調整이 포함됨.
1985년과 1986년에는 西베를린으로의 光通信施設 建設의 投資參加를 포함함.
- 5) 自家經營 포함
- 6) 聯邦鐵道廳의 자산의 差減殘額 포함(백만 VE) :
1973~1975 : 240; 1976~1980 : 359;
1981 : 95; 1982 : 121; 1983 : 175;
1984 : 121; 1985 : 110; 1986 : 133;
1987 : 183; 1988 : -105;
- 7) 1971년에는 1966년까지의 東獨 우체국의 超過給付에 대한 2억 5,000만 VE 포함 ;
1972년에는 電話線 設備 投資費用으로 3백만 VE 포함 ;
1977년에는 通信事業과 관련된 支出超過分の 辨濟額 포함. (1.7백만 VE) ;
1987년에는 一括郵便料가 약 5,000만 VE 만큼 減少되었는데, 그것은 1990년에 計上될 것임.

이 援助金額은 1979년부터 4億 DM 規模로 增大되었다가 1983년이래 다시 縮小調整되었다.

商品의 搬入과 搬出과 關聯하여 商品交易의 附帶費用으로서 발생하는 貨物運送, 港灣施設利用, 商品保管, 金融서비스, 免許·特許利用, 損害賠償 등의 잡다한 많은 用途의 費用이나 使用料의 支拂을 통해서 西獨 DM 貨의 移轉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西獨의 政府部門이 아닌 民間部門이 東獨側에 支拂하는 것중에서 規模面에서 중요한 支出項目은 東獨을 訪問하는 數百萬 西獨訪問客과 觀光客이 支拂하는 비자料와 強制交換金(minimum exchange)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西獨이 聯邦豫算 및 公共基金에서 東獨側에 支拂하는 支拂金과 東獨을 訪問하는 西獨住民이 支出하는 強制交換金은 지금까지 大략 年15억 DM 規模에 달한다.

이것은 東獨이 內獨交易에서 搬出하여 獲得하는 收入額(1987년 基準 : 71억 D-Mark)의 21%에 해당하는 막대한 規模인 것이다. 換言하면, 東獨은 西獨側으로부터 援助的 性격을 가진 이러한 西獨 D-Mark貨의 收入으로 지금까지 對外經濟活動을 하며 지탱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東獨이 西獨側으로 부터 제공받은 商業借款도 西獨聯邦政府의 保證下에서만 導入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4) 東·西獨 交易의 政治的 의미

東獨이 추구해 왔던 分斷政策에도 불구하고 또 西獨側의 特別關稅를 擴大해 가고자하는 要請에 대한 東獨內 반론에도 불구하고 東獨當局은 基本條約에서 特別關係의 유지에 同意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東獨當局은 東西獨間의 交易, 특히 SWING제도를 政治的 壓力手段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반대해 왔고 西獨과의 交易을 相互利益을 위해 恒久的으로 發展시킬 것을 표명해 왔다.

특히 1981. 12. 11~13에 開催된 兩獨 頂上會談후에 발표된 “共同コミュニ케”는 兩獨交易의 실체를 분명히 해준다.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東西獨 兩當事者는 共同利害에 關係되는 經濟, 産業上의 協力을 長期的으로 開發시키며, 容易하게 하고 深化시키는데 노력한다. 그리고 既存協力の 土臺위에 雙方의 가능성을 基準으로 商品交換을 擴大하며 商品交換構造를 改善하는데도 合意했다. 또 雙方은 프로젝트와 企業協力에 있어서도 共同 노력의 重要性을 강조하였고 이것은 第3의 市場에서의 協力度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現在의 基民·基社黨과 社民黨의 聯立政府도 內獨交易이 特別關係로서 擴大되어야하며 內獨交易은 獨逸의 再統一가능성을 열어 두는데 恒久的으로 이바지해야 할 것이란 立場을 처음부터 견지해 왔다.

EC加盟國政府에 대한 西獨의 立場은 GATT와 유럽鐵鋼聯合 및 EC에의 加入條約에서 合意된 特別 Status는 內獨交易에 관해 계속해 效力이 있다는 立場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1973年 3月과 9月에

EC 閣僚會議에서 提起되었고 EC加入國에 의해서 재차 인정받았다. 이러한 特別 Status는 EC加入國 政府에 의해서 事實上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東·西獨 當局은 長期的 觀點에서 兩獨間의 通商交易量의 伸張을 도모하기 위해 基本條約 7條의 附隨議定書 No.1의 第 2項을 특히 강조해왔다. 즉, 東·西獨當局은 經濟的關係의 持續的 發展을 促進하며 새로운 狀況에 맞지않는 條項(規定)을 적절하게 運營하고 交易構造를 改善할 目的으로 長期的 合意를 구축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이전 보다 質적으로 발전된 더 높은 水準의 協力形態를 이룩해 나가고 政治的 이유에서 두 國家가 內獨交易의 擴大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合意가 兩獨間에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II. 最近의 統合論議의 急進展 背景

1. 東獨의 體制的 脆弱性

1949년 10월 7일 東獨政府樹立 이후 40년 동안 東獨 共產黨政權은 政治的 正統性이 결여된 不法政權으로 인정되었으며, 經濟的으로는 非效率的이며 腐敗하고 무능한 속성을 가진 官僚主義的인 中央計劃的 行政管理經濟體制를 채택하여 완전히 停滯된 體制로 구축되어 왔다.

社會主義 體制的 脆弱性으로 인한 東獨의 經濟的 落後性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명백해진다. 즉, 東獨은 直接, 間接으로 年 40~50억 D-Mark 規模에 달하는 經濟支援을 西獨側으로 부터 받아왔고 또 內獨貿易關係를 통해 EC 市場에 진출해 왔으며 이때 EC국가로부터 無關稅 혜택을 받아왔으며 또한 蘇聯으로부터도 有利한 條件으로 原料와 燃料를 供給받아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對外的 혜택과 東獨國民의 傳統的인 勤勉性에도 불구하고 東獨經濟의 生産性 및 成長速度 그리고 技術水準과 社會福祉水準은 西獨에 比較하여 크게 落後되어 있었다. 向後 東獨自力에 의한 經濟發展의 展望은 悲觀的으로 評價되고 있었다.

東獨에 있어서 現在의 生活水準이 더 惡化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人權과 基本權의 유린, 理念的 閉鎖主義, 抑壓的 社會雰圍氣, 그리고 全社會領域을 지배해왔던 黨과 官僚支配體制的 構築 등의 現象은 東獨體制的 恒久的 危機와 不安定性的 徵候로 나타났었다.

東獨體制가 社會主義體制的 優越性을 나타내는 分野로서 지금까지 내세웠던

社會福祉政策에 있어서도 西獨이 GNP의 23.8%를 社會福祉部門에 지출하고 있는데 반하여, 東獨은 겨우 17%만 支出할 뿐이었다.(1980년 基準).

이와 같이 東獨은 西獨에 비해 生産力 水準, 社會福祉分野 등 모든 비교가 능한 分野에서 落後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政治的 自由와 議會民主主義를 실천하고 市場經濟體制를 채택하고 있는 西獨에 대응하여 東獨體制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代案도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울브리히트, 호네커로 연결되는 東獨政權은 스탈린主義적인 彈壓과 압제, 베를린 障壁建設과 같은 國境封鎖, 宣傳·煽動的인 民衆動員의 手段으로 政權維持에만 급급해 왔으나 長期的으로 東獨體制的 脆弱性を 隱蔽시킬 수 없었다.

2. 고르바초프 改革政策의 波及

고르바초프의 改革政策은 蘇聯의 對獨政策에 있어서 새로운 戰略的 目標과 課題를 再定立하게 되었다. 스탈린型的 社會主義 命令體制가 깊은 危機局面에 빠져들자 유럽에 있어서의 理念的 分裂을 극복하고 蘇聯의 國益(특히 經濟的 實利)과 유럽의 安全과 安定을 확보하기 위해 蘇聯은 經濟大國인 西獨의 協力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蘇聯은 蘇聯의 立場에서 負擔으로 여겨져 온 東獨體制를 政治·經濟·이데올로기적으로 再編하는 것이 不可避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狀況에서 1989년 10월 東獨政權 樹立 40주년 紀念行事 참석차 東獨을 訪問한 고르바초프는 東獨共產黨의 總書記이며 國家主席인 호네커에게 東獨에서도 헝가리·폴란드와 같은 體制改革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東獨의 호네커 政權은 社會主義의 성공과 東獨의 미래에 대한 時代

錯誤的인 樂觀論으로 일관하며, 對內, 對外的인 政治의 모든 手段을 動員하여 마지막까지 스탈린型 社會主義體制를 고수, 옹호하며 東歐를 휩쓸기 시작한 改革의 世界史的인 大潮流를 막으려고 시도하였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의 이데올로기적인 保護下에서 東獨國民들은 호네커 정권의 퇴진과 東獨體制的 根本的 改革을 要求하며 示威에 돌입하여 호네커政權의 退陣을 貫徹하고 크렌츠 政權을 出帆시켰다.

고르바초프의 戰略的 指導理念에 따르면 또 東獨國民의 民主化 要求에 부응하여 크렌츠는 1989년 11월 9일을 기하여 베를린 障壁의 撤去와 東西獨 國境線의 開放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東西獨間의 自由往來가 허용되자 東獨住民의 西獨地域으로의 移住現象이 급격히 나타났다.

東·西獨 兩側의 큰 問題로 부각되는 集團移住現象과 베를린障壁의 撤廢로 인한 冷戰體制的 붕괴는 東西獨 國民들의 潛在意識 속에 있었던 獨逸統一에로의 焰원의 爆發的인 上昇作用을 하게 하였다.

베를린障壁의 撤去와 東西獨 國境線의 開放을 통한 東西獨 自由往來의 실현은 兩獨 經濟의 統合과 一體化되는 過程이 實質的으로 급속히 進行되는 契機가 되었으며, 마침내 1990년 3월 18일 自由總選舉에 의해서 舊體制가 붕괴되고 「獨逸聯合」(deutsche allianz)의 드 메지에르政權이 수립되어 西獨과의 經濟統合과 統一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게 되었다.

3월 18일 東獨總選에서 西獨 「콜」首相의 支援下에 東·西獨間의 早期統一을 公約으로 내걸었던 「獨逸聯合」이 豫想을 뒤엎고 東獨國民의 壓倒的 支持下에 壓勝함에 따라 처음에 早期統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東獨 社會民主黨(SPD)도 獨逸統一에 대한 東獨國民의 熱望을 확인하고 드 메지에르 指導下의

「獨逸聯合」主導의 舉國統一內閣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東·西獨의 通貨·經濟同盟과 獨逸統一을 위해 필요한 政治的, 節次的인 基盤이 構築되었고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東獨憲法의 改正과 廢棄를 위해 필요한 東獨議會의 定足數인 2/3線도 확보되었다. 이로써 獨逸의 統一은 東·西獨 內國의 次元에서는 하나의 단순한 節次上的 問題로 되었다.

3. 經濟·社會同盟에로의 進展背景

西獨 D-Mark 貨에 의한 兩獨 通貨同盟은 今年 1月末 처음 西獨議會의 與黨 원내총무 드레가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는 5段階에 걸쳐 점진적으로 通貨同盟을 達成하고자 제안했는데 東獨에 西獨貨幣制度가 導入되어 單一化될 時期를 1992년 10월말까지로 보고 그전까지 東獨內의 社會·經濟體制의 改革을 段階적으로 推進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Bundesbank의 Pöhl總裁와 Schlesinger 副總裁는 1월 24일 當時의 狀況에서 볼 때 東獨의 通貨主權의 포기를 전제로 하고있는 通貨單一化 構想은 비현실적이므로 東獨의 全般的인 經濟改革 過程에서 東獨 DDR-Mark貨의 交換性이 回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급한 통화단일화案을 批判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狀況發展이 東獨體制가 瓦解되는 樣相으로 進展되면서 狀況이 아주 급박하다고 判斷한 西獨政府는 2월 17일 東·西獨 統一過程의 先行段階로서 東西獨通貨同盟의 創設을 推進하기로 決定하고 公式 發表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西獨國務會議는 가능한 한 빠른 時日內에 東獨과의 統貨單一化를 위한 協商을 개시할 것을 결정하고 西獨 D-Mark貨로 兩獨通貨를 單一化할 것을 우선 제의하게 되었다. 하우스만 西獨經濟長官은 國務會議의 決定

에 앞서 3段階 通貨同盟案을 2월 6일 제시한 바 있다. 하우스만의 段階的 通貨同盟案에 따르면 첫 段階로서 通貨 同盟을 위한 基礎與件을 構築할 目的으로 東獨經濟의 全面的 改革措置 實施, 제2段階로 銀行·金融의 自由化 및 資本 移動自由化, 兩獨 마르크貨의 自由交換性的 확보, 마지막 段階로서 西獨 D-Mark貨로 單一化하여 Bundesbank가 通貨·信用政策의 全權을 行使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案은 EC의 域內市場單一化가 이루어진 後인 1993년부터 D-Mark貨에 의한 通貨單一化가 실현될 것을 豫定하고 있었다. 그러나 3.18 東獨總選 결과에 따라 4월 下旬부터 東·西獨 該當部署 閣僚會議에서 各部處에 關係되는 通貨經濟同盟의 問題가 協議·檢討된 가운데 兩獨 首腦部는 通貨單一化와 經濟·社會統合의 실시시점을 7월 2일 날짜로 합의하였고 5월 18日에 와서 드디어 양독 財務長官은 通貨, 經濟, 社會同盟의 創設을 위한 國家條約을 締結하는 條約文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Ⅲ. 經濟·社會統合을 위한 分野別 課題와 對應政策

1. 通貨單一化 (通貨同盟)

(1) 東·西獨 通貨同盟에 관한 論議의 背景

베를린障壁撤去 以後 東·西獨이 當面한 가장 중요한 課題는 西獨地域으로 向한 東獨住民의 集團移住를 막는 問題였다. 東獨住民을 그들의 居住地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東獨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展望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점이 매우 불확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東獨에서의 生活狀態를 繼續해서 改善해 준다는 希望을 심어주는 것이 東獨政治의 最大로 중요한 當面 課題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東獨의 經濟狀態의 改善 및 再建課題와 관련하여 通貨政策上 가장 高單位 處方이라고 할 수 있는 通貨單一化 措置가 필요하다고 認識되었다. 즉, 經濟·通貨同盟은 심각한 經濟危機에 처한 東獨 經濟의 活性化와 再建을 위한 手段으로 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西獨으로서도 社會福祉政策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東獨人口의 西獨移住를 막기 위한 對處方案으로서 시급히 通貨·經濟 統合이 필요해진 것이다.

(2) 通貨單一化의 問題点 및 對應策

兩獨通貨同盟創設은 東獨의 DDR-Mark貨를 西獨의 D-Mark貨로 轉換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西獨의 聯邦銀行(Bundesbank)은 D-Mark 通貨量을 東獨經濟의 貨幣供給을 위해 필요한 만큼 擴大해야 함은 물론이

다.

通貨供給은 通貨安定目標에 입각하여 엄격히 運營되어야 하므로 東獨經濟를 위한 D-Mark 通貨量은 過多供給되지도 過少供給되지도 않아야 한다는 점이 東獨 DDR-Mark貨를 西獨 D-Mark貨로 轉換하는데 考慮되어야 할 核心的事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西獨의 Bundesbank는 東獨經濟의 實物經濟的 潛在力에 합치되는 供給이 이루어질 경우에 인플레이도 디플레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力說해 왔다. 東獨의 實物經濟上에서 요구되는 D-Mark 通貨需要와 轉換時點에 존재하는 DDR-Mark 通貨量스톡과의 比率에 의해 轉換(交換)率이 決定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다 또 東獨國民의 社會的, 政治的 要求에 따라 社會政策的側面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交換比率에 관한 논쟁을 惹起시켰다.

交換率을 決定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東獨에 있어서 經濟改革이 실제로 어느 段階까지 細部的으로 進展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通貨安定目標에 입각한 交換率은 社會福祉政策上的의 이유에서 細目別로 差等化하여 실시기로 결정되었다. 賃金, 給料, 年金 및 기타 반복성 生計支拂金은 1:1의 교환비율로 전환하고 또 現金과 貯蓄預金에 대해서는 1人當 4,000 DDR-Mark의 한도내에서 1:1의 우대비율로 交換할 수 있는데 다만 연령에 따라 差等하여 14세이하의 小人에게는 2,000DM까지로 그리고 60세이상의 老人에게는 6,000DM까지만 1:1의 교환비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000 Mark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는 2 DDR-Mark : 1 DM의 교환비율을 적용기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貨幣殘高量 (債權과 債務)은 2:1의 비율로 전환되며 外國人의 貯蓄은

3:1의 公正換率로 轉換된다.

이와 같이 교환비율의 差等化는 첫째, 貨幣스톡의 轉換과 賃金所得의 轉換을 區別하여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고 市場經濟가 東獨에 導入됨 에 따라 團體協約當事者들이 D-Mark貨로 勤勞所得을 勞使自律的인 賃金協商에서 決定해야 할 事項이기 때문이며 둘째, 東獨의 貯蓄預金殘高는 1990년 4월말 基準으로 約 1,630억 DDR-Mark이며 화폐현금유통잔고는 126억 DDR-Mark로 집계되었다.

그러므로 東獨의 貯蓄預金은 많은 부분 商品供給不足에 基因한 強制貯蓄의 性格을 갖고 있으므로 1:1의 轉換比率로 全額交換될 경우에는 엄청난 購買力爆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東獨經濟의 生産性은 西獨經濟의 生産性에 비해 절반정도 혹은 그이하의 隔差를 나타내고 있다고 評價되며 또 現在 DDR- Mark貨로서의 東獨의 所得水準이 西獨에 있어서의 比較可能的 所得에 比較하여 1/2 水準이므로 D-Mark貨의 導入에 따른 交換率이 1:1 水準에서 決定된 것은 合理的인 根據가 있다고 評價된다. 그러므로 1988년의 東獨産業의 平均勤勞所得水準인 1,292 DDR-Mark는 西獨貨幣 1,292 D-Mark에 該當하게 된다.

貨幣單一化 措置 이후 過剩通貨量은 불가피하며 그것을 吸收하는 方案으로서 ①住宅 및 國營企業 등 國家所有의 實物資產을 民營化하여서 拂下하는 方法 ②國營企業의 경우 企業持分の 賣却 등의 方法에 의한 通貨還收 ③國債의 發行등이 제시되고 있다. 民營化를 통한 實物資產의 拂下는 市場經濟體制로의 體制轉換過程에서 私有財產形成을 強化·育成하는 데에도 戰略的으로 效果的인 側面이 있으므로 인플레이 對處目的下

에서 強力하게 推進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人民財產委託 管理廳이 東獨內에 설립되었다. 實物資產 및 國債發行등에 의해 吸收된 貨幣는 그 規模의 크기에 따라 凍結된다든가 혹은 東獨經濟의 基盤擴充을 위해 使用될 예정이다.

2. 東獨社會主義體制的 市場經濟體制로의 改編

經濟同盟의 最終 目標는 東獨의 官僚的 命令經濟體制를 廢棄하고 東獨에 西獨型 市場經濟體制의 구축을 위한 制度的 基本土臺를 具體化하여 西獨經濟體制와 同質化시켜 나가서 兩獨統一을 위한 예비단계로 經濟的·物質的 영역에서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東獨은 經濟改革의 目標에 맞추어 企業活動을 위해 有利한 法的, 租稅制度的, 財政政策的 體系를 確立하고 財貨, 生産要素市場에서의 價格決定機構의 全般的인 導入을 수행해 나갈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드·메지에르 首相의 指導下에 있는 東獨政府와 東獨議會는 東獨憲法 및 모든 法制를 企業家の 創意力을 發揮하는 向方으로 廢棄, 改正하고 西獨의 法律體制를 採擇하는 方式으로 모든 制度改編을 단행하는 課業을 遂行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東獨議會의 憲法改廢에 必要한 2/3 定足數를 確保한 大聯立政府가 東獨社會黨(SPD)의 參與下에서 活動을 本格的으로 개시하고 있다.

經濟의 決定過程을 分散化하기 위한 制度的 基本前提는 私的所有秩序를 構築하고, 生産手段의 私的所有를 確保하는 것이므로 民間所有權의 行使를 위한 完全한 自由를 制度化할 것이며 이와 같은 脈絡에서 營業의 自由도 保障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民間企業의 設立, 競爭體制的 導入, 對外經濟去來에서의

모든 制約의 撤廢가 이루어지고 있다.

東獨의 投資를 促進하고 競爭能力을 培養시킬 수 있는 새로운 租稅制度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것은 東獨이 西獨을 비롯한 西歐의 投資家들에게 유리한 입지가 되어야 한다는 改革政策目標에 부합되며 이에 따라 合作投資에 관한 立法도 劃期的으로 補完·刷新되고 있다.

經濟的 成果를 위한 努力을 자극, 고무하고 民間의 財産形成을 위해 廣範圍한 私有化措置가 단행될 예정이며, 經濟的 成果와 生産性에 입각한 賃金·所得體系 및 市場經濟的 機能樣式에 적합한 銀行·金融制度의 導入 또는 轉換이 이루어지며, 西獨式 社會福祉體制를 모형으로 하는 社會福祉體制의 再編이 이루어진다.

競爭體制를 確立하기 위해 企業構造의 改編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巨大企業聯合(콤비나트)의 解體 또는 西獨企業과의 合併이 大規模로 추진되고 있다. 콤비나트의 解體로 생기는 中小企業單位는 私有化되어서 民營私企業으로 分解될 때 이들 企業의 所有持分을 株式으로 大衆化하는 方案이 심도있게 論議되고 있기도 하다.

分野別 改革 概觀表

經濟活動의 秩序의 條件	價格形成體系	貨幣·信用制度改革	財政制度改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業에 로의 決定權의 移讓 1) 價格 및 生産數量 2) 企業廢鎖 3) 人力需給 4) 投資 프로젝트 5) 對外去來 • 營業自由, 私企業設立 • 競爭關聯法 • 所有權의 確保 • 非居住者에 의한 企業設立 • 企業參加形態 • 콤비나트의 分解· 解體 • 人民財産信託管理廳의 新設 • 國家所有企業의 民營 私有化 • 破產法 • 失業에 대한 對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經濟計劃에 의한 價格決定을 市場價格形成으로 代替 • 價格補助金의 縮小 및 廢止와 生産物에 대한 課徵金의 縮小 및 廢止 • 價格改革의 副作用을 社會福祉政策的으로 對處 • 賃金改革 1) 個別的인 勤勞 契約 2) 集團的 協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過剩通貨의 吸收 1) 資本의 賣却(企業 參加, 住宅所有) 2) 價格改革의 物價 水準效果 3) 外換基金과 國債의 發行 • 中央銀行改革: 國家銀行(Staatsbank)을 Bundesbank의 임시 행정사무로소 轉換 • 西獨型 2段階 銀行 制度의 確立 • 資本/金融市場 1) 資本參加持分券과 其他有價證券市場 開設 2) 一般商業銀行의 自律的 與信業務許容 • 換 率 D-Mark貨에 의한 換率 • 兌換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補助金 및 生産物에 대한 課徵金의 縮小와 撤廢를 통한 價格改革의 支援 • 租稅制度改革 1) 法人稅 導入 2) 所得稅 導入 3) 消費稅 導入 등으로 西獨稅制와 調和시키고 最終段階에서 西獨稅制의 採擇 • 政府借入의 制限 • 西獨의 社會福祉制度의 導入과 社會福祉同盟의 결성

3. 西獨의 東獨支援

1989년도에 신기록이라 할 수 있는 1,480억 DM에 달하는 막대한 西獨의 貿易收支 黒字과 총1176억 DM에 달하는 純資本輸出額을 염두에 두고 또 西獨企業의 높은 內部金融比率 (약80%)을 감안할때 通貨·經濟同盟이 經濟的인 관점에서 推進된다면 財政的 어려움은 없다고 評價되고 있다.

西獨은 增稅를 통하지 않고도 財政資金의 配分調整을 통해 所要資金의 調達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見解가 유력시 되고있다. 지난 몇년간의 經濟政策 특히 財政豫算政策은 通貨·經濟同盟의 급속한 實現을 위한 유리한 前提條件을 形成하는데 크게 寄與한 것으로 評價된다. 西獨에 있어서 정부부문에서의 純債務增加分은 10년이래 最低水準이며 西獨 GNP 對比政府債務는 1989年 現在 1.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必要가 있다.

西獨의 5大 主要經濟研究所 (베를린의 獨逸經濟研究所, 함부르크 HWWA 研究所, 뮌헨의 IFO研究所, RWI研究所, 쾰의 世界經濟研究所)는 東西獨의 通貨·經濟·社會同盟이 西獨에게 엄청난 財政的 負擔과 租稅의 追加負擔을 加重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막연한 생각은 전혀 맞지 않다고 4월 9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通貨, 經濟 및 社會同盟을 계기로 不可避하게 된 東獨에 대한 社會福祉部門의 初期段階에서의 支援과 落後한 東獨地域의 infrastructure의 개선과 擴充 및 심각한 東獨地域의 環境保護事業을 支援하기 위해 막대한 資金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東獨은 西獨과의 社會同盟을 체결함으로써 西獨型에 따라 年金保險, 醫療保險, 產災保險, 失業保險 등으로 세분화된 社會福祉體制를 導入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필요한 재원조달은 東獨自體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負擔金으로써 이루어 지지만 年金과 失業保險의 경우 西獨政府의 金融支援이 初期段階에서 필요하게 되는데 그 規模는 1990년 후반기의 年金保險支援金이 7억 5천만 DM, 失業保險支援金이 20億 DM, 1991년의 失業保險支援金이 30억 DM에 달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東獨企業의 計劃에 따르면 經濟同盟의 結果 금년 중반에 이미 약 60만명의 失業者가 豫想된다.

東獨支援資金調達 方法으로는 첫째로 通貨·經濟同盟 以後의 東獨地域의 經濟建設 過程에서 發生하는 成長의 結果에 따라 豫想되는 財政收入의 增加額을 열거할 수 있다. 둘째로는 獨逸 分斷費用으로 간주되어 지금까지 西獨의 政府 財政에서 支出해온 西베를린에 대한 援助金 및 兩獨境界線 隣接地域에 대한 支援金과 過大防衛豫算 등의 削減에 따른 轉用資金이 東獨支援을 위해 사용된다. 西獨은 매년 400억 DM을 獨逸分斷費用으로 支出해 왔고 그 중 220億 DM은 西베를린 特別支援金으로 40억 DM은 낙후된 兩獨境界線 周邊地域의 産業支援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財政所要資金의 不足分이 發生할 경우에 한정하여 政府의 公債發行 등이 또한 考慮되고 있다. 이번에 締結된 國家條約은 資金需要가 統制될 수 있도록 몇가지 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즉, 東獨의 政府豫算에 관한 한 東獨은 자기책임하에 豫算運營을 하여야 하며 西獨과의 國家조약상 엄격한 規制를 遵守하여야하고 또 豫算赤字를 최소화하는 努力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東獨은 西獨側의 先例에 따라 補助金の 縮小와 公共部門에서의 인건비절감 및 公共科金を 擴大, 改編하도록 되어 있다. 東獨의 財政赤字를 줄이기 위해 소위 “人民財産”의 民營化措置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國家財産을 불하하여 획득되는 販賣代金を 豫算에서 使用하도록 의도되고 있다.

東獨政府의 借入規模도 이번 조약으로 制限되고 있다. 즉 東獨政府는 1990년

하반기에 最高 100億 DM, 1991년에 最高 140億 DM까지만 借入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의 借入可能額의 약 2배에 달하는 나머지 財政需要를 憵당하기 위해 獨逸統一基金(fonds deutsche einheit)이 西獨政府和 洲政府에 의해 조성된다. 이 基金은 1,150億 DM에 달하는 規模로서 대부분 (950억DM)資本市場에서의 債券發行을 통해 조달될 豫定이다.

西獨議會는 3월30일 東獨에 대한 財政支援策의 일부분으로서 1990년 第1次 追更豫算 68億 DM을 확정하여 通過시켰다. 그 중 58億 DM는 東獨에 대한 直接, 間接支援金이다. 豫算調達 方式은 주로 追加的인 政府信用에 의한 調達이며, 이에 따라 豫算赤字는 前年 對比 59억 DM만큼 增加한 약330億 DM에 달한다. 그러나 景氣好況에 따른 稅收增加가 이루어져 豫算赤字는 약 310억 DM까지 縮小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西獨政府는 지난 5월 18일 通貨同盟과 관련하여 不可避하게 된 1990년 第2次 追更豫算을 通過시켰는데 그 규모는 47억 5000만 DM에 달한다. 그중 27억5000만 DM은 東獨의 社會福祉體系支援金이며 20억 DM은 東獨의 中小企業과 기업창업자를 위한 投資信用을 위한 增額이다. 第2次 追更豫算은 전적으로 景氣好況에 의해 발생한 稅收增加額으로 조달될 豫定이고 稅收增加豫想額은 聯邦政府의 경우만 약 68억 DM에 달한다. 이로써 1990년의 總豫算規模는 3117억 DM에 달하며 國防豫算중 5억4500만 DM의 절감이 이루어졌음은 특기할만 하다.

西獨의 對東獨 財政支援 內容 (1990年度 第 1次 追更豫算內譯)

旅行外換基金	21億6,500萬 DM
低金利 特別貸出 (EPR 基金으로부터 東獨企業에 貸出)	4億 DM
東獨 中小企業에 대한 追加 支援	9,000萬 DM
東獨에 대한 의료支援	3億2,000萬 DM
東獨交通路 建設	1億5,000萬 DM
동독 環境保護 프로젝트	1億1,500萬 DM
東獨으로 부터의 移住者 對策費 (州政府의 財政支援)	5億 DM
東獨으로 부터의 訪問客에 對備한 베를린州特別支援	4億 DM
蘇聯에 대한 食料品援助	2億2,000萬 DM
루마니아에 대한 人道的 援助	6,000萬 DM

4. 東獨地域의 不動產 所有權 問題

(1) 不動產所有權에 대한 原則

西獨의 內獨關係部, 財務部, 經濟部, 法務部는 등록정권에 의해 국유화된 부동산의 소유권귀속의 問題에 대해서 檢討中에 있다. 實務그룹이 네개의 部分으로 나뉘어 ①産業體 및 營業企業 ②農地 및 不動產 ③西獨으로 탈출한 避難民財産 ④東獨의 建設法(aufbaugesetz)에 의한 國有化 ⑤옛 金融債權, 特許問題, 知的所有權 등의 복잡한 法的問題를 檢討中이라고 알려졌다.

東獨의 國有化는 部分的으로는 蘇聯의 軍政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東獨法에 의한 國有化는 規模面에서 相對적으로 적다. 대다수 西獨으로 탈출한 東獨人에 대해서는 法的 근거없이 實際적으로 財産沒收가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財産은 國家信託機關에 의해서 運營되고 있다. 많은 土地와 企業體들은 새로운 住宅團地 혹은 産業複合體(kombinat)로 編入되었기 때문에 原狀態대로의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西獨政府의 實務行政家들은 몇개의 政策的인 基本原則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①1949년 以前에 발생한 大地主所有의 土地, 不動產, 大企業 및 天然資源의 國有化(沒收)는 無效 혹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過去의 大地主나 大企業은 그들의 所有權에 대해 報償받을 수 없다.

②1949년 以後에 발생한 中小企業體, 住宅, 土地의 國有化 혹은 沒收에 대해서는 原則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명확하게 識別·區分될 수 있는 것은 前所有者에게 返還·歸屬된

다. 둘째, 所有物이 그 동안에 住宅團地의 일부분이 되었다든가, 혹은 kombinat의 構成要素가 되었다든가, 혹은 農業生産組合의 所有物中 일부가 되었을 경우에 前所有者는 持分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 셋째, 비록 前所有者가 農民의 耕作地에 대해 所有權 返還請求를 貫徹했다 하더라도, 農民은 어떤 경우라도 耕作地에서 追放될 수 없다. 넷째, 所有權에 관한 整備는 企業에게 큰 負擔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原則이 適用된다. 다섯째, 投資者에 대한 法的 安定性의 回復이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報償價値에 관한 原則

西獨 財務部 法律專門家들은 國有化 혹은 沒收된 土地, 不動產 및 企業들은 沒收當時의 價格에 따라 報償되어야 한다는 原則을 견지하고 있다.

財務部 當局者들은 이러한 報償方式에 대한 違憲的 要素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財務部 法律專門家들은 1976년 聯邦憲法判例를 그 根據로써 제시하고 있다. 즉, 1969년의 한 聯邦法에 의거하여 188억 reichsmark(舊帝國貨幣)에 해당하는 報償被害額이 단지 13억 DM으로서 報償되었고, 憲法裁判所 裁判官들이 이 法律을 認定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西獨憲法裁判所 判決의 基本論旨는 다음과 같다.

첫째, 沒收에 의한 損害의 完全한 清算은 國家破產의 領域으로 연결되므로 모든 個別的 事例에 合當한 損害調整規程을 찾는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둘째, 財產權整備와 健全화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憲法上의 沒收 原則은 本事案에 관한 基準으로서 不適當하다는 것이다.

(3)土地 및 不動產 所有權에 관한 한 事例

한 東獨住民이 20년전에 東獨法の 效力을 받고 어떤 土地위에 家屋을 建造하였다. 그런데 이 土地는 國家信託機關이 이 東獨住民에게 使用權을 讓渡한 것인데 원래는 1965년에 東獨을 탈출하여 西獨國民이 된 제 3자에게 속했던 것이다. 이경우 西獨政府의 實務專門家들은 이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舊所有者는 土地登記簿에 다시 適法하게 所有者로서 登記된다. ②新所有者는 66년 혹은 99년간의 地上權(erbbaurecht)을 獲得한다. ③新所有者는 이 地上權을 取得하는 대신에 收益利子を 支拂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東獨產業構造上的 改編

(1) 東獨產業構造 改編의 進展狀況

東獨의 國有企業들은 競爭力強化 目的에서 西獨企業과의 企業合併, 結合등을 推進하고 있다. 이는 經濟·通貨同盟과 獨逸統一이 이루어지는 體制的 與件이 市場經濟體制이고 이에 따라 競爭體制에 적응하여 生存하기 위한 東獨企業의 필연적인 自救努力의 一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西獨企業과의 企業結合이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事例가 Allianz社의 東獨保險市場 진출이다. 玆에 있는 유럽最大의 保險그룹인 알리안츠社 (Allianz AG Holding)는 東獨의 國家保險獨占會社에 49%의 持分으로 參加하는 豫備契約을 체결했다.

새로 設立된 人民財産管理信託會社가 동독국가보험 獨점회사의 51%의 持分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Allianz社의 計劃이 東·西獨內的 政治的

反撥에도 불구하고 달성될 경우 Allianz社의 經營權 確保에 따라 東獨地域의 保險市場 전체를 Allianz社가 支配하는 結果가 되어 東獨社會主義 國家獨占體가 市場經濟的 獨占體로 變신하는 現象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 3월 31일까지 東獨企業과 外國企業間에 이미 599件的 joint venture가 設立되었으며 新規 總投資額은 1억 5,000만 DDR-Mark에 달하는데 그 중 9,100만 DDR-Mark는 外國企業에 의해 調達된 것이고 西獨은 外國人投資의 91%를 점유하고 있다.

自動車産業分野에서도 東·西獨企業의 結合은 強化되고 있다.

Volkswagen 社는 東獨의 IFA Kombinat 社 (東獨의 대표적 乘用車인 Trabant의 生産會社)와 合作하여 年產 25만대 規模의 自動車工場을 設立하는 契約을 締結하였다. Volkswagen社는 東獨市場뿐만 아니라 東歐全域을 對象으로 하는 自動車 市場을 겨냥하여 50억 DM 規模의 投資를 계획하고 있다.

東獨의 銀行産業部門은 金融에 관한 專門經驗과 金融力의 不足으로 말미암아 西獨의 巨大銀行과 競爭할만한 土臺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民間 貯蓄顧客과 機關投資者들을 吸收할 方案찾기에 腐心하고 있으나,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東獨 國家銀行(Staatsbank)의 商業金融部門인 Deutsche Kreditbank AG가 西獨 最大의 商業銀行그룹인 Deutsche Bank와 合作하여 合作金融會社의 設立을 合意하고 合作協定書를 交換했다. 餘他 西獨 大銀行그룹도 이와 비슷한 合作事業에 뛰어들 것으로 豫想된다.

東獨의 企業結合體(콤비나트)의 經營合理化 方案으로 콤비나트의 部品, 原料供給을 위한 下請構造인 內部企業單位의 獨立化를 達成하기 위해 콤비나트의 部分的인 解體가 論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具體的 內容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國家企業 (人民所有企業: VEB)을 民營化하기 위한 準備段階로서 國家企業들을 株式會社 形態로 변경시키는 決定이 東獨 閣僚會議에 의해 採擇되고 있으며 또 豫告되고 있다. 株式會社로 轉換된 會社의 財産管理을 위해 人民財産信託管理會社가 設立되었다는 점은 특별한 관심을 끈다.

東獨의 産業構造를 市場經濟的 環境에 맞춰 改編함에 따라 東獨은 從來의 COMECON 國家, 특히 蘇聯과 締結한 供給協定을 遂行하는데 어려움에 逢着하여 이것이 通貨·經濟統合 후에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東獨의 콤비나트와 蘇聯間에는 140개 이상의 貿易協定이 存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協定에 따라 東獨은 蘇聯에 主要設備機械, 生産設備의 部品등을 供給 할 의무를 지고있다.

東獨의 體制變革에 따라 금년에 이미 蘇聯에 대한 東獨의 供給은 20%나 減少하고 있다. 이 現象은 大多數 東獨企業들이 從來의 交易對象國인 蘇聯을 비롯한 東歐國家와의 交易關係를 포기하고 西歐國家와의 交易을 통한 硬貨獲得을 追求하는 데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東獨은 蘇聯의 最大 交易對象國으로서 1990년 計劃된 東獨의 對蘇輸出總額은 343억 DDR-Mark이며 東獨의 蘇聯으로부터의 輸入總額은 334億 DDR-Mark에 달한다.

東獨에 대한 輸出의 70%는 原油, 天然가스, 石炭, 木材, 알미늄, 銑鐵, 종이 등의 原料와 燃料이다.

東獨의 蘇聯에 대한 輸出은 機械, 設備財등이 總輸出의 65%에 달한다. 東獨企業은 西歐市場에서 落後한 技術과 조약한 商品品質 때문에 지금까지 交易對象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東獨企業은 蘇聯과의 販賣契約의 덕택으로 固定된 販賣處를 確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東獨과 蘇聯間의 商品交易에 관한 貿易協定과 協定議定書에 의해 販賣計劃이 樹立되었다.

物資供給 위기에 逢着해 있는 蘇聯은 東獨의 供給이 體制轉換過程에서 中斷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당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금 蘇聯은 이미 産業生産의 모든 分野에서 隘路部門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련의 5개년 계획에서 確定的으로 계산된 東獨으로부터의 供給이 中斷되는 事態에 대해 西獨政府는 供給保證을 약속하고 있지만, 첫째 供給義務를 지고있는 東獨의 콤비나트가 體制轉換過程에서 存立하지 못할 危險性이 있고 둘째, 西獨企業이 東獨콤비나트에 대신해서 蘇聯에 供給할 수 있는 機械·設備와 그 部品들은 技術體系의 相異와 供給對象物이 落後된 機械·設備등인 까닭으로 어떤 西獨企業도 이런 不良輸出品을 供給할 수 없다는 난처한 狀況에 逢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問題로 부각된다.

IV. 東·西獨의 經濟·社會統合의 經濟的効果와 獨逸統一의 展望

1. 東·西獨 經濟·社會統合의 經濟的 效果

通貨·經濟·社會同盟이 단행되지 않을 경우 東獨經濟는 數年 혹은 더 長期의 期間동안에 필요한 改革은 遲滯될 것이며 또 政治的으로도 더이상 지탱할 수 없는 破局的 狀況을 맞게 될 것이라고 豫見된 바 있는데 D-Mark의 導入과 經濟·社會同盟은 필요한 經濟改革의 起爆으로서의 役割이 期待되고 있다.

D-Mark導入과 並行하여 實施되는 東獨社會·經濟體制의 全般的인 再編 및 經濟의 再建過程에서 生成될 經濟的 力動力이 波及됨에 따라 西獨經濟全體와 더 나아가 EC 및 世界經濟에도 追加的인 活力을 불어 일으킬 것이란 豫상이 지배하고 있다.

西獨 D-Mark를 共通通貨로 하는 兩獨通貨同盟이 가져다 줄 直接的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通貨單一化에 따라 현재 兩獨에서 커다란 社會的 問題로 指摘되고 있는 東獨으로부터의 集團的인 移住의 문제점이 훨씬 緩和될 것으로 展望됨. ② 정돈없이 無秩序하게 進行되는 東·西獨의 統一過程이 共通通貨圈의 創設에 의하여 일정한 通貨·信用制度의 틀속에서 秩序있게 進行될 것이라고 判斷됨. ③ 東獨住民들은 그들의 勞動에 대한 代價로서 교환성있는 通貨, 즉 실제로 商品을 購買할 수 있는 貨幣인 西獨 D-Mark貨를 取得하게 된다. 이에 따라 交換성이 確保된 貨幣가 東獨의 市場經濟體制 확립에 本質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對外的으로 볼때 東獨은 그들의 輸入代金を 支拂할 수 있는 國際的으로 인정된 硬貨를 獲得하게 된다. 이로써 投資財와 消費財를 輸入할 수 있어서 東獨經濟를 現代化하고 住民들에 대한 物資供給狀態를 改善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즉, 東獨의 輸入能力은 外換事情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東獨企業과 國民들의 購買力에 의해서만 制約될 것이다.

東獨經濟를 活性化시키는데 決定的 役割을 할 西方, 특히 西獨으로부터의 資本流入은 投資家들이 外換리스크를 考慮할 필요가 없으므로 훨씬 容易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東獨經濟의 現代化는 競爭에 입각하여 企業家들이 行動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加速化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低評價된 DDR-Mark貨의 換率 때문에 東獨經濟는 國際分業에서 완전히 隔離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점에 관한 한 완전히 다른 現實的인 立場에서 經濟의 運營이 수행되기 때문이다.

가) 經濟成長에 미치는 效果：“東獨效果”(GDR-Effect)

西獨의 모든 專門研究機關과 EC는 西獨의 東獨과의 通貨·經濟同盟의 結果로 西獨의 成長展望은 훨씬 改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Bonn 政府에 提出되고 있는 專門報告書들에 의하면 西獨經濟가 1990년에 3.75%~3.9%의 成長率을 達成하게 될 것이고 1991년에는 3.5%의 成長率 達成이 이루어질 것이라 豫想되고 있다. Kiel의 世界經濟研究所에 의하면 通貨同盟으로 因한 追加的 成長效果는 1990년에 0.5%, 1991년에 1.5%로 豫測되고 있다. 西獨의 5大 主要經濟研究所는 通貨同盟에 基因한 西獨의 追加的인 需要創出額은 1990년에 약 350~400억 DM에 달한다고 豫測하고 있다.

現在의 東獨 生産力과 人口當 GNP를 근거로 하여서 東獨經濟가 概略적으로 10년내에 西獨水準에 到達한다고 假定할 때, 약 4,000억 D-Mark의 追加的인 成長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統合된 獨逸經濟 전체에 있어서 每年 GNP가 1.5%가량 成長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西獨經濟에 대한 乘數效果를 追加적으로 考慮한다면 더 높은 水準의

“東獨効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1990년대의 統合된 獨逸經濟의 成長 潛在力은 年 2~2.5%에서 大略 4% 水準으로 增加할 것이다.

1992년의 EC 域內市場의 單一化가 進行됨에 따라 EC의 經濟的 統合度가 높아질 것이므로 餘他 EC 國家들도 “東獨效果”의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EC 國家들은 매년 0.5%의 追加的인 成長惠澤을 받게 될 것으로 EC는 展望하고 있다.

나) 인플레이에 대한 憂慮

通貨單一化에 따른 通貨增發과 總需要增大에 기인하여 短期的으로는 상당한 인플레이壓力이 憂慮되고 있다. 東獨家計貯蓄에 대한 交換比率 및 交換政策이 決定되었지만 東獨 住民들의 消費性向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불확실하므로 이 消費性向의 方向에 따라 短期的으로 인플레이 危險이 야기될 可能性이 크다고 본다. 原則적으로 東獨家計貯蓄이 1:1의 交換率로 換錢되고 賃金·年金 등이 또 1:1로 交換되므로 購買力이 크게 팽창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東獨政府는 長期再建債券의 賣却과 國有住宅의 拂下 그리고 國有企業의 株式分散 그리고 民間서비스 및 商業企業의 設立 등을 통한 通貨還收政策을 準備中이며 東獨政府의 財政運營이 安定을 阻害하지 않도록 엄격히 規制하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長期的 觀點에서 인플레이 憂慮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 統合後 西獨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더욱 신축적인 勞動力의 追加的 供給에 의해 야기되는 東獨의 勞動市場 條件은 西獨에서의 勞動費用上昇에 대한 壓力을 상당히 緩和시키는 作用을 할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戰後 西獨의 經濟再建 過程에서 産業生産의 年平均 增加率은 +10.6%이었으며

인플레이率は 生計費指數基準으로 +1.1%이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獨逸統一의 展望

通貨·經濟·社會同盟은 政治的 統一을 위한 物質的 共同基盤의 造成이란 점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비록 現在의 東·西獨國家, 특히 東獨의 경우 政治적으로 自律的이고 獨立的이라고 할지라도 國家 및 經濟의 全領域에서 統一을 위한 過渡期的 過程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通貨單一化에 의해 東獨의 貨幣供給이 西獨 Bundesbank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東獨의 通貨政策上的 自律性を Bundesbank로 移讓시키는 것이며 이에 따라 東獨은 東獨의 主權의 일부인 通貨·信用上的 主權과 發券力を 喪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統一에의 큰 進一步라고 할 수 있다.

通貨同盟의 實現과 함께 東獨은 유일한 法定支拂手段으로 西獨의 D-Mark貨를 導入, 採擇하게 되었다. 따라서 東獨은 東獨의 通貨主權을 서독의 獨逸聯邦銀行(Deutsche Bundesbank)에 이양하고 스스로 自國의 通貨主權을 포기하게 된다. 通貨金融政策을 수행하고 通貨價値의 안정을 維持하는 責任은 이로써 西獨의 聯邦銀行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東獨의 中央銀行인 國家銀行(Staatsbank)은 해체되며 원래 東獨側이 要求했던 中央銀行理事會(Zentralbankrat)에서는 表決權 參與는 이번에 實現되지 못했다. Bundesbank는 東獨에 最高 15개의 지점을 開設하고 베를린의 현 東獨國家銀行 建物에 임시 행정사무소를 設置하는 선에서 東獨側은 만족해야 했다. 通貨·經濟·社會同盟의 達成과 함께 經濟的 領域에서 獨逸統一은 이미 構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년 7月 1日을 기하여 西獨 D-Mark가 兩獨의 共同貨幣로서 公式的인 效力을 가지게 되며 所謂「2+4」會談에서 獨逸統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

고 會談의 結果를 35개국의 유럽安保協力會議(CSCE)가 批准하는 節次를 밝게 된다. 西獨의 집권당인 基民·基社黨과 東獨姉妹政黨의 合同議員總會에서 兩獨의 總選이 조기에 實施될 것을 最近 결의한 바 있다.

물론 實質的, 形式的으로 統一이 完決되려면, 비록 대부분의 東獨主權이 單一政府에 移讓된 시점에 事態發展이 와 있다해도 單一議會構成을 위한 全獨選舉를 치루고 統一獨逸議會가 構成되어 마무리 作業을 끝낸 後임은 물론이다.

東·西獨은 거의 모든 分野에서 지금 共同實務委員會를 構成하여 統合을 위한 制度的인 同質化作業을 推進하고 있다.

統一된 獨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兩獨經濟體制의 相異性에서 연유하는 資本·科學·技術 및 其他 核心的 要素들의 交流障礙는 撤廢될 것이므로 東獨地域의 經濟的 落後는 급속히 克服될 것이므로 展望되고 있다.

東·西獨統合은 92년 EC의 域內統合에 어떤 攪亂要因으로 作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獨逸統一은 西獨憲法 23조에 의거하여 東獨이 사실상 西獨에 吸收統合되는 方式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東·西獨의 統合은 西구라파의 經濟統合의 達成을 위한 總體的 努力的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만 유럽에 있어서 심도있는 分業體系가 效力을 발휘할 것이며 經濟的 存立條件을 더욱 改善시키는데 統合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西歐 經濟統合의 성공은 東獨이나 東구라파의 利益에도 符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활력있고 풍요한 EC 經濟는 統一된 汎獨逸經濟의 發展을 위한 母體가 되기 때문이다.

V. 東西獨 統合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点

戰後 分斷國인 東西獨이 오늘날까지 持續的인 經濟協力을 통해 마침내 統合의 段階에까지 이른 것은 같은 分斷國으로 여전히 對立關係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南北韓 關係에 示唆해주는 바가 크다. 南北韓關係의 展開 可能性에 대한 몇가지 論議中 北韓의 相對的 弱化和 韓國의 經濟 및 外交的 優勢에 따른 韓·蘇頂上會談을 契機로 더욱 더 그 實現 可能性이 커지고 있는 美·日·蘇·中의 南北韓 交叉接觸과 承認 등을 포함한 '獨逸方式'의 適用 可能性이 가장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東西獨의 統合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을 통해서 示唆되는 바에 따라 現段階에서 南北韓이 經濟的 統合段階로 發展할 수 있는 與件造成的 過程으로서 南北韓의 經濟交流과 協力の 方向을 摸索하고 다음 段階로서 長期的인 南北經濟共同體의 實現에 對備할 需要가 있다.

1. 南北韓 交流協力 方向의 摸索

東西獨의 統合을 現實的으로 가능하게 한 根本的인 바탕은 戰後 冷戰體制 아래서 聯合國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西獨政府가 꾸준히 東獨과의 經濟的 交流을 摸索하고 그것을 實現시켜 온 結果이다. 그러한 東·西獨의 關係發展을 가능하게 한 성공적인 政策事例들을 中心으로 對北 經濟協力の 方向을 摸索해 보기로 한다.

(1) 制度的 接近

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의 制定과 效率的 運用

1988년 7월 7일 「民族自尊과 統一, 繁榮에 관한 大統領 特別宣言」과 同年 10월 7일 經濟企劃院長官의 南北韓 經濟交流의 許容에 관한

施策이 發表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法的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目的을 위해서 이미 政府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을 立案하여 國會에 提出中이나 國會通過가 遲延되어 왔다. 國會通過가 遲延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既存의 國家保安法과의 衝突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最近 韓·蘇關係의 急進展으로 南北韓關係도 큰 變化가 올 것으로 豫想되는 狀況이기 때문에 이 法의 통과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西獨의 立法例에서 볼 때, 우리의 立法 및 法運用上에서 提起되는 問題는 충분히 解決될 수 있다. 西獨의 東獨과의 交易 및 經濟協力は 1961년 4월 28일에 통과된 「對外經濟法」(Aussenwirtschaftsgesetz)의 規制對象이 아니라 1951년 9월 20일에 締結되고 1960년 8월 16일에 修正된 「베를린 協定」에 依據하고 있다. 戰後 西方側 聯合國에 의해서 制定·公布되고 현재도 效力을 가지고 있는 「軍政法 第 53號」(Militarregierungsgesetz Nr. 53)는 西獨 國民이 東·西獨間의 軍事分界線을 넘어서 행하는 모든 商品, 用役 및 外貨去來를 原則적으로 禁하고 있다. 그러나 同法의 例外規程에 依據, 「一般許可令」(Allgemeine Genehmigungen)을 制定하여 軍事分界線을 넘는 商品交流의 監督權이 經濟長官에게 賦與되고, 商品·非商業用 支給去來와 資本去來의 許可權이 聯邦銀行(Bundesbank)에 賦與되고 있다. 그 결과 「軍政法 53號」의 法的效力이 持續됨에도 불구하고 東西獨間의 商品 및 資本去來의 自由化가 가속화되어 오히려 交易禁止 및 規制가 예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南北經濟協力基本協定 締結의 推進

南北經濟會談은 1984년 10월 12일 韓國政府의 提案으로 同年 11월

15일부터 1985년 11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서 진행되다가 韓·美 팀 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 北韓이 중단시킨 이래 현재까지 膠着狀態에 있다. 南北經濟會談을 兩側 政府의 經濟部處 主管下에 再開토록 하고 쌍방간의 具體的 物資交流와 經濟協力을 위하여 板門店과 같은 지역에서 基本協定の 締結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물론 先行되어야 할 問題는 北韓을 어떻게 基本協定の 締結 段階에 까지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韓國이 北韓에 대해 民族問題의 共同解決이라는 次元에서의 名分과 實利를 保障하고 說得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東·西獨이 冷戰의 氣流 속에서 「프랑크푸르트 協定」과 「베를린 協定」을 締結하여 經濟的 交流를 擴大해 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兩獨 統合의 段階로 發展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음미해야 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協定」과 「베를린 協定」이 성공적으로 締結될 수 있었던 것은 西獨이 去來對象品目, 去來 및 決濟方法, 附加價値稅의 減免, 不公正去來에 대한 措置 등과 같은 具體的이고 實現可能한 方案들을 마련하여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東獨과 접촉했던 결과였다.

다) 民間主導의 常設 商工信託管理 機構의 設置

北韓이 政府次元에서 對南接觸을 기피하는 점을 考慮하여 南北經濟 交流에 관련된 모든 問題에 관해서 北韓 當事者와 恒時的으로 접촉을 유지하고 協商하는 窓口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西獨은 東獨의 立場을 考慮하여 民間團體인 獨逸商工會議所 傘下에 「工商信託管理所」(Treuhandstelle für Industrie und Handel) - 1981년 까지는 地域間交易信託所(Treuhandstelle für Interzonenhandel)로 불리었음 - 을 設置하여 東獨의 對外貿易部와 東西獨 經濟交流에 관한

諸般問題를 協議하고 解決하는 유일한 窓口役割을 하여 왔다. 이 機構의 監督官廳은 外務部나 內獨關係部가 아닌 經濟部 製造業局이며, 1972년 東西獨 「基本條約」이 締結되고 西獨의 常設代表部가 東베를린에 設置된 以後에도 代表部에 對東獨 交易에 관한 權限을 賦與하지 않고 TIH가 그 機能을 계속 맡고 있다. 西獨이 民間機構로서 窓口를 一元化하고 그곳을 통해서 企業들이 對東獨 商去來의 길을 트고 실질적 經濟交流를 效果의으로 擴大토록 해오고 있는 것은 對北關係를 놓고 政府部處間 摩擦을 빚고 있는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2) 南北交易擴大의 政策的 接近

가) 三角貿易 및 仲介貿易體제의 確立

北韓과 直接去來가 어려운 狀況下에서 南北韓이 相互 필요한 商品을 제3國을 통해서 서로 供給하는 三角貿易이나 海外市場情報에 밝고 國際貿易에 經驗이 풍부한 韓國의 企業들이 仲介貿易을 잘 이용한다면 南北韓 쌍방이 모두 利益을 얻고 相互 信賴를 構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短期的으로 가장 쉽게 南·北交流를 擴大해 나갈 수 있는 方法이다.

東西獨의 경우, 특히 東獨이 이와같은 間接貿易을 통해서 西獨에 대해 外國보다 유리하게 代金支給條件을 제시할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交易이 持續的으로 增加하여 왔다.

나) 對北交易 保證制度의 運營

韓國企業들이 北韓과의 去來에서 發生하는 이유가 명백한 損失에 대해서 補填을 받을 수 있는 保證制度를 設立·運營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필요한 財源은 南北交流基金과 別途의 南北交易損害保險制度를 新設토록 한다. 이것은 中·長期的으로 南·北韓交易을 擴大시키는

方案이 될 수 있다.

西獨政府는 西獨企業이 東獨과 長期的이고 安定的인 去來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搬出保證, 支給保證 및 일정한 條件下의 追加保證制度를 設置·運營해 오고 있다. 保證業務는 聯邦政府의 委任을 받은 뒤셀도르프 信託株式會社(Treuarbeit Aktiengesellschaft, Dusseldorf)가 遂行하고 있으며, 保證에 대한 決定權은 聯邦經濟長官과 聯邦財務長官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保證制度는 東西獨의 交易을 活性化하는데 크게 寄與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3) 北韓 開放化 誘導의 論理的 및 實踐的 接近

北韓은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에 南北韓의 同時加入을 반대하고 加入하더라도 南北單一議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서 同時加入이 分斷을 固着化시킨다는 論理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北韓의 主張을 무시해 버리거나 排斥하기보다는 北韓의 論理와 調和를 이룰 수 있는 論理的 接近을 摸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東·西獨의 입장은 南·北韓의 경우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태였다. 즉, 西獨은 獨逸이라는 하나의 國家를 주장한 반면 東獨은 2개의 國家를 주장하였다. 1972년 東西獨이 「基本條約」을 締結한 것은 西獨이 하나의 獨逸國家에 기반을 두고 東獨과 修交한 나라와는 國交를 맺지않는다는 「할슈타인 독트린」을 버리고 東獨이 주장하는 獨逸이라는 一民族一國家에서 國際적으로 同等한 지위를 갖는 2個의 部分國家가 나왔다는 「2國家說」(Zweistaatentheorie)을 수용했던 때문이다. 東獨의 論理는 EC에서도 인정되어 東獨은 EC會員國이 아니면서 西獨과 같이 EC로부터 免稅惠澤을 받아 왔다.

實踐的 接近方法으로는 韓國이 能動的이고 적극적으로 北韓에 유리

한 外交的 努力을 경주하는 것이다. 北韓을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同參시킨다는 次元에서 社會主義國家로서 이미 會員國이나 準會員國 또는 傭저버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中國, 蘇聯 및 東유럽 國家들과의 協力을 통하여 IMF, IBRD, ADB, GATT등에 北韓이 加入하도록 노력하고 이들 國際經濟機構에서 南·北韓이 同等한 待遇를 받을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 볼 만하다.

또한 硬直인 北韓體制의 根源은 金日成이나 金正日 등 最高指導階層의 井底蛙的 閉鎖性에서 起因한 점을 고려하여, 金日成이나 金正日の 日本, 歐美 先進國의 訪問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것은 南北韓 關係改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韓·蘇 頂上會談에 對應하여 美·北韓 頂上會談의 成事を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西獨政府가 호네커의 日本訪問을 주선한 것은 東西獨의 關係를 改善하는데 寄與하였다는 데서 좋은 先例를 찾을 수 있다.

2. 長期的인 南北經濟共同體 實現에 對備

(1) 南北金融統合의 與件造成

東西獨의 統合은 앞으로 長期的 觀點에서 南北韓의 經濟統合을 실현하는데 대비할 수 있는 先例로서 活用할 價値가 있다. 그 가운데서 金融統合이 東西獨 統合의 第1段階로 제시된 것은 그 동안 兩獨間의 交易에 대한 決濟方式이 確立되어 있었으며, 西獨의 對東獨 借款을 제공하는 制度的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 東西獨 貿易決濟方式의 援用

北韓通貨의 不換性は 北韓의 對外去來에서 최대의 制約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交易擴大와 通貨連繫를 위하여 代金決

濟方式의 確立이 필요하며 東西獨間의 貿易濟濟方式을 援用할 수 있을 것이다.

東西獨의 경우에 東獨通貨의 不均衡 問題를 解決하고 兩獨交易의 代金濟濟方式으로서 쌍방의 中央銀行 - 西獨의 聯邦銀行(Bundesbank) 과 東獨의 國家銀行(Staatsbank)-이 각각 상대방 銀行의 명의로 된 清算計定을 設置하고 濟濟單位(Verrechnungseinheit)의 약자를 만 VE를 帳簿上의 通貨로 써 왔다. VE는 西獨 마르크를 대신한 것으로 1VE=1DM의 價値가 인정되나 西方 通貨와의 兌換性은 없으며 다만 東獨이 西獨으로부터 商品을 購入하는 데만 쓰였다. 이 制度下에서 西獨이 東獨의 商品을 산 만큼 東獨은 반드시 西獨의 商品을 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은 東·西獨間의 交易을 擴大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였다.

그밖에 어느 一方의 輸出超過나 輸入超過 현상을 막기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베를린 協定」의 前身인 「프랑크푸르트 協定」(1949년 10월 8일 締結)에 이미 東西獨 쌍방이 일정한 限度內에서 自動貸出을 받을 수 있는 스윙(Swing)制度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西獨이 東獨에 대한 貿易金融으로 活用되었다. 이와같은 制度는 南北韓 交易에서도 큰 무리없이 援用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나) 西獨의 對東獨 借款制度의 援用

韓國의 北韓에 대한 制度的 借款의 제공은 南北韓의 直交易과 3角 및 仲介貿易을 活性化하고 韓國商品의 北韓內 販賣量을 增加시킴으로써 北韓의 韓國에 대한 經濟的 依存度를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南北經濟統合의 계기를 조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方案으로서 西獨의 對東獨 借款制度를 援用하는 問題를 考慮할 필요가 있다.

西獨은 東獨에 대해서 VE에 의한 供給者借款과 財政借款을 提供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決定은 西獨 聯邦銀行이 맡고 있다. 借款提供者는 西獨의 個別 民間銀行, 銀行借款團, 기타 金融機關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東獨의 輸出入銀行이다. 借款은 原則적으로 附帶條件이 붙으나, 1983년 以後부터는 附帶條件이 없는 借款의 比重이 더 커졌다.

東獨은 西獨의 借款을 받은 以後부터 國境統制를 緩和하고 西獨人들의 東獨旅行의 許可와 東西獨間의 旅客來往 支援, 郵便 및 電話疏通을 許容하는 措置를 취하였다. 韓國의 對北 借款提供도 일단 成事が 되면 유사한 效果를 나타낼 것으로 期待된다.

(2) 非武裝地帶의 南北共同 自由貿易地帶化

1988년 10월 18일 盧泰愚 大統領의 유엔總會 演說에서 提案된 休戰線內의 「平和市」 建設 實現의 第1段階로 南北韓이 共同으로 非武裝地帶의 一定 地域을 自由貿易地帶로 開發하자는 것이다. 自由貿易地帶로 통하는 鐵路, 道路 및 通信網의 復元과 附設을 金剛山觀光道路와 連繫 開發함으로써 이들 下部構造 利用의 極大化를 期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自由貿易地帶 안에 產業博覽會 등을 열 수 있는 常設 綜合流通센터를 設置하여 南北韓 經濟交流의 센터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非武裝地帶의 開發은 南北韓 쌍방에 經濟的 利益을 줄 뿐만 아니라 東西獨間의 國境開放과 같은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東西獨과 南北韓의 差異點 및 우리의 對應

(1) 分斷上의 差異

獨逸의 경우는 周邊 強大國들에 의해서 國土分斷만이 이루어진 狀態

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兩獨國民들 간에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한 敵對感이 별로 없었다. 南北韓은 國土가 分斷된 외에도 同族相殘의 戰爭을 치름으로써 서로간에 敵對感이 極에 달하는 民族分斷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2) 環境的 與件上的 差異

獨逸은 分斷된 狀態에서 東獨의 閉鎖的 政策에도 불구하고 東獨 가운데에 西베를린이 位置하고 또 周邊에 自由國家들이 位置하고 있어 매스컴 등을 통해서 西獨의 體制的 優越性이 東獨에 쉽게 전달되고 東獨인들의 西獨脫出도 比較的 容易하였었다. 거기에 비해서 南北韓은 半島에 位置하고 休戰線을 中心으로 南方限界線과 北方限界線에 의해서 一切의 相互疏通의 可能性이 遮斷됨으로써 北韓의 閉鎖政策은 完전한 效果를 거둘 수 있었고 더우기 金日成 偶像化를 위한 「主體敎育」의 方式으로 철저한 對南敵對意識化가 이루어졌다.

(3) 우리의 對應

오늘날과 같은 獨逸統合의 與件을 조성시킨 요인은 國際的 環境의 변화와 더불어 政治, 經濟, 社會福祉面에서 東獨을 압도한 西獨의 體制的 優越性으로서 그 가운데서 특히 東獨이 西獨經濟에 依存도가 매우 컸다는 점이다.

東·西獨 統一의 現實化로 인하여 우리도 民族의 염원인 國土統一의 실현이 가능하며, 그 가능성이 더욱 가까이 와 있다는 國民的 認識이 이미 형성되었다. 政府는 이러한 國民의 기대에 副應하여 兩獨의 經驗과 接近法을 바탕으로 南北韓의 실질적 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制度的, 政治的, 經濟的 裝置를 마련하는 政策立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兩獨의 과거 45년 동안 統一을 위한 國內外 與件은 南北

韓에 비해 훨씬 유리한 立場이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

南北韓은 전쟁을 겪고 대화가 단절되어 왔기 때문에 統一에의 過程은 獨逸의 경우만큼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西獨이 經驗했던 것 이상의 인내를 가지고 一貫性있고 꾸준하게 對北接近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統一은 西獨國民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政府의 政策에 대한 信賴와 支持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政府는 統一政策의 一環으로 國民의 共感帶를 형성할 수 있는 對內政策의 充實化를 통해서 國民總和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重且大한 일이다.

<附 錄>

東·西獨의 主要經濟指標 比較

(1988년 基準)

	東 獨	西 獨
<u>人 口</u>		
總人口 (백만명; 1989. 12. 31 現在)	16.4	62.4
構成; 女子 (%)	52.2	51.5
就業年齡人口 (백만명) 1)	10.76	40.90
外國人 (백만명)	0.17	4.71
100명당 出產	12.9	11.0
面積 (km ²)	108	249
1km ² 당 人口	154	248
<u>就 業 活 動</u>		
總就業人口 (백만명)	8.98	27.31
그 중 女子 (%)	49	38
產業分野別 就業人口 (%)		
農業 및 山林業	11	5
製造業	50	40
商業과 交通	18	19
서비스 (國家部門 포함)	21	36
失業者數 (백만명)	0	2.19
勞動生産力 (基準; 100)	49	100
一次에너지 消費量 (PJ)	3,751	11,419
人口 1인당 (TJ)	225	185

1) 15세부터 65세까지의 男子와 15세부터 50세까지의 女子

	東 獨	西 獨
一次에너지 消費量 (%)		
갈탄	68.6	8.1
석탄	5.0	19.2
석유	11.5	42.0
천연가스	11.4	16.0
원자력	2.5	12.0
1차電氣	3.3	1.5
<u>環 境 汚 染</u>		
이산화 유황 방출량 (백만 t)	5.0	2.2 2)
이산화 질소 방출량 (백만 t)	1.0	3.0 2)
<u>交 通</u>		
고속道路의 길이 (km)	1,855	8,618
電鐵化된 鐵路의 길이 (km 당 km)	32	47
運送乘客數 (10억명 × km)		
鐵道	22.8	41.8
公共道路	30.5	62.0
航空	0.2 3)	15.7
運送貨物量 (10억, t km)		
鐵道	60.4	61.3
道路	16.4	112.3
內陸水運	2.5	52.9
登錄된 乘用車 數 (백만)	3.7	28.9
交通事故 (1000) 4)	47	614

2) 1986

3) Interflug 航空會社

4) 800M (DDR) 혹은 3,000DM(BRD) 이상의 人的損害 및 物的損害

	東 獨	西 獨
<u>遞 信</u>		
1인당 書信 發送量	77	224
1인당 電話 通話量 5)	102	493
1,000명당 電話局 數	239	676
<u>國 民 所 得</u>		
GNP (10억 DM : 1989년) 6)	400	2,265
1인당 GNP (DM : 1989년) 6)	24,242	36,532
<u>收 入, 貯 蓄</u>		
純貨幣收入 (M) /		
可處分 收入 (DM)		
家計당, 한달간	2,083	4,468
月 總賃金 및 俸給		
被雇用者 1인당 (M/DM)	1,090	3,291
月 純賃金 및 俸給		
被雇用者 1인당 (D/DM)	925	2,198
純貨幣收入 혹은 可處分收入		
中 貯蓄比 (%)	6.5	12.6
<u>住 宅 產 業</u>		
1,000명당 住宅數	421	426
住宅用地(1인당)	27.0	34.9
<u>國 內 交 易</u>		
小賣去來 (십억 M/DM)	127	483

5) 市內通話 및 長距離 通話

6) 東獨은 購買力에 입각한 Deutsche Bank의 推定值임.

	東 獨	西 獨
構成 (%)		
食料品 및 嗜好品	48	29
구두, 織物 및 衣服	16	17
기타 工業製品	35	57
小賣物價指數의 %變化	+2	+2.5
<u>內 獨 交 易</u>		
搬入量 (10억 DM)	7.23	6.79
構成 (%)		
原資材 및 生産財	43.5	50.1
投資財	36.9	14.3
消費財	9.8	24.9
農產品, 食料品 및 嗜好産業 商品	8.4	9.7
<u>對 外 交 易</u>		
輸入 (10억 VM * /DM)	87.2	439.6
(1989년)		(493)
構成 (%)		
蘇聯	39.2	1.6
여타 社會主義 國家	29.5	4.3
非社會主義 國家	31.4	94.1
輸出 (10억 VM * /DM)	90.2	567.7
(1989년)		(641)
構成 (%)		
蘇聯	35.8	1.8
여타 社會主義 國家	33.7	3.8
非社會主義 國家	30.5	94.4

* VM은 交換性 없는 東獨의 對外通貨 單位

< 参考文獻 >

單行本 및 報告書

- Bertsch, G. Saunders, C.T.(ed.), East-West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DR-Handbuch, Bd.1, Bd.2,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85.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bericht 1988.
- Sondergutachten d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Unterstützung der Wirtschaftsreformen in der DDR :
'Voraussetzungen und Möglichkeiten',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1/6301, 1990.
- Die Lage der Weltwirtschaft und der Westdeutschen Wirtschaft im Frühjahr 1990, Beurteilung der Wirtschaftslage durch DIW, HWWA-Institut, IFO-Institut, IFW, RWI, April 1990.
- Engels, Wolfram, Hamm, Walter, et al., Soziale Marktwirtschaft in der DDR, Währungsordnung und Investitionsbedingungen, 1990.
- Fischer, Alexande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aten, Fakten, Analysen, 1988.
- Der Fischer Welt Almanach. Sonderband DDR, 1990.
- Möller, Dietrich, Zweideutsche Wege, 1988.

- Nölling, W., “Wiedervereinigung – Chancen ohne Ende,”
Hamburger Beiträge zur Wirtschafts-und Währungspolitik in Europa
1990.
- Rauh, Siegfried, Regelungen des innerdeutschen Wirtschaftsverkehrs
1987.
- Schmieding, Holger, “Währungsunion und Wettbewerbsfähigkeit der
DDR-Industrie,” Kiel Working Papers, 1990.
- Siebert, Horst, “Die Wahlmöglichkeiten einer deutsch-deutschen
Geld-und Wahrungspolitik,” Kiel Discussion Papers, 1990.

신문, 잡지등

- Economist
- Financial Time
- Frankfurter Allgemeine
- Handelsblatt
- Neue Zürcher Zeitung
- New York Times
- Der Spiegel
- Die Welt
- Wirtschaftsdienst,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 Die wirtschaftswoche
- Die Zeit

< 討論要旨 >

A. 韓·東歐關係의 進展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B. 東·西獨의 經濟·社會統合과 示唆點

권영훈 : 東歐와 西歐가 접근하는 이유, 東獨과 西獨이 접근하는 과정, 그리고 이와 우리 南北韓關係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東歐의 경우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모순으로 인하여 計劃經濟體制는 완전히 몰락하였으며 西歐와 東歐는 相互競爭의 이라기 보다는 相互補完的 要素가 많으므로 東·西獨이 1988년 6월 共同宣言에 의하여 서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다.

東獨은 COMECON에서, 西獨은 EC에서 가장 주도적인 국가들이며 兩獨關係는 貿易去來, 民間交流, 科學技術協力の 3단계를 거쳐 왔다. 과연 이러한 과정을 南北韓이 모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즉 獨逸은 완전한 統一國家가 아닌 聯邦制國家이며, 東·西獨의 政治·經濟的인 連繫關係가 밀접하게 되어 있다. 또한 北韓은 東歐와는 달리 완전한 폐쇄정책을 써왔으며, 蘇聯의 東方政策上으로 볼 때, 韓半島가 蘇聯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제1차 기지이므로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東歐와 西歐가 접근한다해도 韓半島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은 금물이며, 北方政策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南北韓 합작시 日本, 美國, 中國, 蘇聯 등과 함께 콘소시엄을 형성함으로써 유럽에서 西獨이 EC나 NATO를 배경으로 한 것과 같은 安全帶를 만들어야겠다. 한편 東北아시아에서 EC같은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즉 經濟共同體의 형성의 필수적 요인은 經濟體制의 同

質性인데 이것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東西獨 모형을 韓國에 직접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韓國에 걸맞는 모델을 하나 발전시켜야겠다.

서병철 : 과거의 생각과는 달리, 對東유럽關係는 蘇聯, 中國과의 關係와는 獨立的인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 우선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改革政策의 측면에서도 물론 motive는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 현재 蘇聯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이다. 즉 蘇聯은 더이상 과거와 같이 東歐의 改革을 끌어당겨서 늦추거나 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北韓에게 있어서 東獨과 루마니아 등 東獨國家들의 일련의 사태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短期的으로는 北韓의 경직성을 強化할 것이지만, 長期的으로는 改革을 推進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東유럽은 아직 시장경제가 완전하지 않고 生産品도 조잡하기 때문에 협력이 쉽지가 않은데, 과연 어느정도까지 협력이 가능한지, 또한 이런 협력이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1951년 체결된 베를린協定은 東西獨間에 체결된 첫번째 합의사항인데 이것은 經濟가 政治를 주도한 한 예로서, 그당시 獨逸이 政治보다는 經濟를 強調했다는 사실은 獨逸이 오늘날 統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의 經濟·社會統合도 독일인답게 實用主義的으로, 國際政治的으로 복잡한 政治的 統合問題를 피해가면서 效率性이 높고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經濟統合을 먼저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들 중 문제는 우선 북한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구체적 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北

韓을 설득하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對案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기영 : 우선 東歐의 變化에 있어서 國際政治 및 國際政治 主體의 變化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하는 느낌이 든다. 중요한 것은 東歐의 變化가 北韓內部的 改革派의 形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蘇聯·中國의 變化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긴 하지만, 蘇 또는 中 一方의 變化는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며, 中·蘇 동시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모스크바를 통하여 평양을 간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공산권을 통해서 北韓의 開放을 유도하기 보다는 日本, 美國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容易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東西獨 關係에 있어서는 통화의 1:1 교환비율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합리적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東獨 社會主義體制의 市場經濟로의 개편이 강조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東獨國民의 貧民化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봐야하며 그러한 내용의 논의도 있어야 하겠다. 또 GDR 효과가 EC에도 영향을 미쳐서 추가적인 成長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西獨이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 및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오히려 統습이 되면, 西獨의 EC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東獨의 失業, 인플레이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南北韓 關係에 비추어 볼 때 南北韓 交易에 있어서 우리가 줄 것은 많지만 받을 것은 별로없는 형편에서 投資나 貿易이 얼마나 진작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基金의 活用이나 形成의 문제도 經濟的인 동기가 없다는 차원에서 아직 위험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홍유수 :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社會主義 國家들은 開放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의 外燃的 成長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에 비추어 內燃的인 成長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것이 技術革新과 生産性向上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情報과 技術인데, 이러한 情報化社會로 가기 위해서는 자연히 開放을 해야 하며, 개방을 함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를 막아두기는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東西獨 關係에 있어서 南北韓과 비교해 볼 때, 西獨은 東獨에 비해 經濟的으로 압도적인 優位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의 經濟事情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우리는 內的인 經濟的 社會的 問題가 심각하므로 북한에 대해 量的인 優位는 있을 망정 質的인 優位가 있는가는 의심스럽다. 근본적으로 南北韓 交流 및 統一에 있어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민족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것이지, 외부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東歐圈과의 交流에 있어서는 短期的으로는 貿易, 그리고 中期的으로는 直接投資가 효과가 있겠지만, 長期的으로 볼 때는 技術協力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資源이 制限되어 있는데, 상대해야 할 나라는 상당히 많으므로 이에 優先順位를 세워야 할텐데 크게 나눠서 東歐圈과 東北亞圈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의 優先順位를 좀더 研究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재영 : 우리 經濟에 시급한 문제가 技術開發인데, 과연 蘇聯으로 부터 첨단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듣고 싶다.

김종만 : 政府나 新聞 등에서 對社會主義圈 交流를 말할때는 거의 항상 이들과의 關係改善을 통해 北韓에 壓力을 넣어서 統一을 앞당긴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經濟的인 利益은 전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겠다. 오히려 이들과의 經濟交流를 통하여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을텐데, 너무 南北關係에만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가 東·西獨 같이 南北韓 關係의 급속한 改善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럽다. 즉 北側의 기독교층이 과연 그들의 현재의 지위를 희생하면서까지 自由化, 開放化를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東·西獨과는 달리 南·北韓은 서로 戰爭을 했다는 것, 그리고 北韓 住民들이 外部의 情報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도 東獨과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북한이 문을 열고, 韓半島가 統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일임을 깨닫고, 社會主義 國家와의 交流는 그 자체로서 만족을 하면서 천천히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태준 : 첫째, 獨逸이 統獨을 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며, 그의 經濟的 當爲性은 무엇인가?

정갑영 : 우리가 北韓과 經濟的인 交流를 한다고 했을 때, 社會主義圈 國家들이 점진적 改革을 통해 體制를 維持하다가 결국은 유동성의 문제에 부딪쳐 파국에 이르렀을 때 開放을 채택한다는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北韓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쳤을 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즉 經濟的 擴充, 專門家 育成, 北方經濟에 대한 研究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최상의 政策이라 할 것이다. 한편 韓·東歐 協力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나

뉘져 있는데, 本人의 의견은 肯定的이다.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經濟大國으로 成長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나라와도 交易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risk가 크면 premium도 클 것이라는 것, 그리고 外換不足現象과 東歐의 實質的 購買力에 대한 평가는 상당부분 獨立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社會主義經濟는 貨幣의 退藏現象이 매우 심하다는 것도 이러한 의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蘇聯과 中國의 改革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東歐의 改革은 완전히 市場經濟 導入方向으로 굳혀졌다고 볼 수 있다.

요즈음 東歐의 經濟力에 대한 再評價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社會主義體制의 構造的 問題인 “供給制約의 經濟”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供給해 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또한 東歐의 變化가 北韓內部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間接的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東歐의 改革에 대한 자료를 北韓이 상당히 많이 研究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개혁모델을 자체적으로 評價·分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광작 : 西獨의 內部政治 사정에 대해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1972년 東西獨基本條約이 締結될 당시에는, 현재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의 논란은 그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며, 社民黨이 基本條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協商카드로 하여 선거시점을 잡자는 것이다. 1:1交換이 야기시키는 인플레이 문제에 대해서는 合理的 근거가 있다. 즉 賃金의 問題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그 액수는 1,200마르크 정도인데 1:1로 交換한다해도 賃金은 流量(flow)으로서 다음 賃金協商時에 市場價格으로 조정되고 1:1 交換은 의미가 없어진다. 더구나 獨逸人의 특성 중 하나

가 높은 貯蓄性向인데,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저축을 物品購入에 전부 써버릴 것 같지는 않으며, 따라서 인플레이 우려는 경감될 수 밖에 없다. 外國 言論媒體에서 統獨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한마디로 獨逸統一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그것을 방해할 名分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獨逸國民의 輿論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東獨 貧民化를 막는 방법에는 地域政策 중 중요한 것으로서 租稅 및 國家支出을 통한 富의 再分配制度가 엄격히 되어 있어서 그에 관해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오용석 : 정재영교수께서 질문한 蘇聯의 技術導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蘇聯에는 西方國家들 처럼 技術特許같은 知的所有權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韓·蘇 技術協力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蘇聯技術이 우리나라에 이전되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한 產業技術開發의 범위도 크게 擴大될 것으로 본다. 또한 김태준 박사께서 질문한 南北統一의 이유를 순수하게 經濟的 側面에서만 본다면, 南北分斷으로 인한 엄청난 外部不經濟의 피해를 兩側이 보고 있으며, 經濟開發에 투입될 수 있는 엄청난 資源이 軍事費와 같은 非經濟的分野로 빠져나가는 “浪費의 經濟”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民族 經濟發展의 최대障得은 南北分斷이며 이것을 克服하는 것만이 우리 民族의 經濟的 成長潛在力을 擴大시켜나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南北統一의 經濟的 當爲性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 회 : 北方政策에는 經濟的側面과 政治的側面이 있는데 南北韓 關係에서도 政治的側面이 오히려 北方政策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4~5년전만해도 이러한 北方政策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의 國力이 커져서 이러한 것이 可能함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國力이 더 커진다면 이러한 政治的問題도 自然히 解決될 것이다.

세미나 資料 90-03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1990年 6月 日 印刷

1990年 6月 日 發行

發行人 金 迪 教

發行處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서울特別市 江南區 大峙3洞 942番地 해성빌딩 19-20층

電話：519-3333, FAX：519-3311,3322

印刷 (株)凡 信 社
